

2023년도

#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토론회

- **일시** 2022. 11. 24.(목) 09:30 ~ 12:00
- **장소** 충청남도의회 회의실(303호)  
세미나실(101호)  
브리핑룸(105호)
- **주최** 충청남도의회
- **주관**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 2023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토론회

- **일시** 2022. 11. 24.(목) 09:30 ~ 12:00
- **장소** 충청남도의회 회의실(3층), 세미나실(1층), 브리핑룸(1층)
- **주최** 충청남도의회
- **주관**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 1부 09:30~10:20(50')

개회식	[개회사] 조길연 충청남도의회 의장	도의회 회의실 303호
총괄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li> <li>[좌장]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li> <li>[발제] 이재훈 (충청남도 예산총괄팀장)</li> <li>김현기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장)</li> <li>한태식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li> </ul>	09:50~10:20(30')

※ 발제자 각 10분

## 2부 10:30~11:30(60')

분과토론	① 재정운영·경제산업 분과	도의회 회의실 30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장] 진 혁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li> <li>[발제] 김대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연구위원)</li> <li>진 혁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li> <li>[토론] 정병인 (충청남도의회 의원)</li> <li>한태식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li> <li>이재훈 (충청남도 예산총괄팀장)</li> <li>이경성 (충청남도 세정과장)</li> <li>김범수 (충청남도 미래성장과장)</li> </ul>	
	※ 발제자 각 15분, 토론자 각 5분	
	② 농수산해양 분과	도의회 세미나실 10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장] 김선태 (충청남도의회 의원)</li> <li>[발제] 김 호 (단국대학교 교수)</li> <li>박세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실장)</li> <li>[토론] 신영호 (충청남도의회 의원)</li> <li>김정미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팀장)</li> <li>남상훈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li> <li>박정은 (충청남도 해양산업팀장)</li> <li>장민규 (충청남도 수산자원과장)</li> </ul>	
	※ 발제자 각 15분, 토론자 각 5분	
	③ 교육 분과	도의회 브리핑룸 10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장]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li> <li>[발제]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li> <li>이원상 (서울특별시의회 예산분석팀장)</li> <li>[토론] 구형서 (충청남도의회 의원)</li> <li>박종철 (충청남도의회 예산분석팀장)</li> <li>김흥집 (충청남도교육청 미래과학팀장)</li> <li>이광수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팀장)</li> </ul>	
	※ 발제자 각 15분, 토론자 각 7분	

## 3부 11:40~12:00(20')

총평 및 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총평 및 질의응답</li> <li>[위원장]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li> <li>[분과좌장] 진 혁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li> <li>[분과좌장] 김선태 (충청남도의회 의원)</li> <li>[분과좌장]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li> <li>• 폐회 및 정리</li> </ul>	도의회 회의실 303호
---------	--	--------------



# 2023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토론회

## 목차

### 개회사

조길연 충청남도의회 의장 ..... 1

### 총괄발제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3

이재훈 충청남도 예산총괄팀장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현기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장

2023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한태식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분과토론

① 재정운용·경제산업 ..... 69

[발제] 김대중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연구위원)

진 혁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

② 농수산해양 ..... 105

[발제] 김 호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단국대학교 교수)

박세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실장)

③ 교육 ..... 129

[발제]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

이원상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 개회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길연입니다.

내년도 충청남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최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함께해주신 우리 도의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도의회 재정 심의의 전문성을 기하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토론회 결과를 보완하여 분야별 세 개 분과를 구성하여  
보다 심층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또 세 차례에 걸친 사전 세미나를 통해 오늘 토론회의  
내실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2023년도 도와 교육청의 14조 8,349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시고,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실현을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2. 11. 24.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길연**



# 2023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토론회 총괄발제 발제문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재훈 충청남도 예산총괄팀장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현기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장

2023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한태식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힘센충청  
대한민국의 힘

---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충청남도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I 편성 방향

- 민선 8기 첫 본예산, 도정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
- 현금성 복지사업 개선 등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 재정 투자 실현
  - 부담비율 개선이 필요한 교육청 지원 사업 등을 절감, 재정투자 방향 재설정
-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도 정비 등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는 집중 투자

### 중점 투자

SOC 인프라 확충 및 권역별 균형발전	▪ 투자가 지연되어 온 지방도 정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5대 권역별 특성을 살려 균형 있는 발전 지원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 구축	▪ 가속화 되어 가는 농어촌의 고령화·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농어촌 청년 유입 촉진 및 공간 재구조화
의료·보육 불균형 해소	▪ 의료·보육 서비스에 소외되어 온 취약 지역에 기반시설과 인력을 보강하고, 부모의 보육 부담을 완화
청년 맞춤형 지원	▪ 기존 현금 복지성 수당 지급 계획을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 사회 진출을 돕는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전환
시장경제 활성화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	▪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충남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미래 먹거리 발굴·투자
어르신·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경과 예우 강화 및 보훈 정신 확산
내포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문화·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10만명이 살아도 넉넉한 명품도시로 조성
열린 도정, 일 잘하는 지방 정부	▪ 도민 교육과정 운영 등 도정에 대한 도민 접근성 강화하고 열린 도정을 실현

## II 예산안 규모

- 총 규모 : 9조 8,907억원('22년 본예산 대비 5.44%, 5,106억원 증가)
  - 일반회계 : 8조 2,045억원('22년 본예산 대비 4.92%, 3,845억원 ↑)
  - 특별회계 : 9,598억원('22년 본예산 대비 4.47%, 411억원 ↑)
  - 기금운용계획 : 7,264억원('22년 본예산 대비 13.26%, 850억원 ↑)

(단위 : 억원, %)

구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98,907	100.00	93,801	100.00	5,106	5.44
일반회계	82,045	82.95	78,200	83.37	3,845	4.92
특별회계(8개)	9,598	9.70	9,187	9.79	411	4.47
도청소재도시건설	23	0.02	17	0.02	6	33.43
균형발전	528	0.53	454	0.48	74	16.27
안면도관광지개발	8	0.01	9	0.01	△1	△12.78
의료급여기금	4,216	4.26	4,052	4.32	164	4.06
광역교통시설	6	0.01	7	0.01	△1	△16.65
학교용지부담금	266	0.27	163	0.17	103	63.87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	152	0.15	167	0.18	△15	△9.43
소방	4,399	4.45	4,318	4.60	81	1.88
기금(14개)	7,264	7.34	6,414	6.84	850	13.2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79	1.39	1,149	1.23	230	20.02
지역개발기금	2,889	2.92	2,409	2.57	480	19.91
재해구호기금	530	0.54	441	0.47	89	20.20
재난관리기금	601	0.61	411	0.44	190	46.26
중소기업육성기금	1,222	1.24	1,407	1.50	△185	△13.18
남북교류협력기금	53	0.05	44	0.05	9	22.22
농어촌진흥기금	273	0.28	267	0.28	6	2.07
사회복지기금	70	0.07	65	0.07	5	7.31
식품진흥기금	73	0.07	69	0.07	4	5.41
양성평등기금	34	0.03	35	0.04	△1	△1.32
청소년육성기금	27	0.03	27	0.03	-	-
사회적경제기금	15	0.02	16	0.02	△1	△3.64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2	0.05	51	0.05	1	0.93
정의로운전환기금	46	0.05	23	0.02	23	103.36

III

# 일반회계 예산안

▷ 2023년도 예산안 : 8조 2,045억원('22년 7조 8,200억원 대비 3,845억원 증)

## 1 세입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b>합 계</b>	<b>82,045</b>	<b>78,200</b>	<b>3,845</b>	<b>4.92</b>
자체수입	30,088	28,160	1,928	6.85
지방세수입	29,200	27,242	1,958	7.19
세외수입	888	918	△30	△3.27
이전재원	48,709	46,241	2,468	5.34
지방교부세 등	9,356	7,685	1,671	21.74
국고보조금 등	39,353	38,556	797	2.07
지방채	1,000	1,527	△527	△34.5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48	2,272	△24	△1.06

## 2 세출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b>합 계</b>	<b>82,045</b>	<b>78,200</b>	<b>3,845</b>	<b>4.92</b>
법정·의무적 예산	18,577	18,100	477	2.64
시군 조정교부금 등	6,178	5,870	308	5.25
징수교부금	392	439	△47	△10.71
교육청 전출금	3,639	3,705	△66	△1.78
예비비	375	426	△51	△11.97
재무활동 등	5,395	5,174	221	4.27
행정운영경비	2,598	2,486	112	4.51
이전재원사업	48,837	46,834	2,003	4.28
국고보조사업 등	48,548	46,775	1,773	3.79
특별·소방안전교부세	50	59	△9	△15.25
지방소멸대응기금	239	-	239	순증
자체사업	14,631	13,266	1,365	10.29

### 3 주요 사업 내역

#### 1. SOC 인프라 확충 및 권역별 균형발전

(단위 : 억원)

▪ 지방도 정비	1,260	▪ KTX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6
▪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용역	2	▪ 지역 균형발전 스마트 공장 구축	3

#### 2.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 구축

(단위 : 억원)

▪ 농어촌 주거공간 개선	110	▪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66
▪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11	▪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30
▪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건립·운영	21	▪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16

#### 3. 의료·보육 불균형 해소

(단위 : 억원)

▪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전문인력 지원	32	▪ 남부권 산후조리원 조성	30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260	▪ 충남형 공공임상 교수제	6
▪ 부모급여 지원	917	▪ 보육특수시책	366

#### 4. 청년 맞춤형 지원

(단위 : 억원)

▪ 충남 청년 해외연수	15	▪ 청년 창업·창직 지원 및 인턴 캠프 운영	15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11	▪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3

#### 5. 시장경제 활성화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

(단위 : 억원)

▪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100	▪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자보전	69
▪ 수소도시 조성	26	▪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18
▪ 친환경 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 구축	13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4

#### 6. 어르신·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단위 : 억원)

▪ 참전명예수당	58	▪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 센터	3
▪ 파크골프장 조성	36	▪ 의병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2

#### 7. 내포 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단위 : 억원)

▪ 흥예공원 명품화 마스터 플랜 수립	3	▪ 내포신도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4
----------------------	---	-------------------	---

#### 8. 열린 도정, 일 잘하는 지방 정부

(단위 : 억원)

▪ 도민교육과정 운영 지원	3	▪ 남부출장소 운영	3
----------------	---	------------	---

▷ 2023년도 예산안 : 9,598억원('22년 9,187억원 대비 411억원 증)

① 도청소재도시건설 : 23억원('22년 17억원)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 9, 내포신도시 업무지원 및 홍보 등 14

② 균형발전 : 528억원('22년 454억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527, 예비비 등 1

③ 안면도관광지개발 : 8억원('22년 9억원)

- 안면도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2, 안면도관광지 재산관리 등 6

④ 의료급여기금 : 4,216억원('22년 4,052억원)

- 의료급여 예탁금 4,172,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 등 44

⑤ 광역교통시설 : 6억원('22년 7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 부담금 등 3

⑥ 학교용지부담금 : 266억원('22년 163억원)

- 학교용지 매입비 17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90

⑦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 152억원('22년 167억원)

-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60,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92

⑧ 소 방 : 4,399억원('22년 4,318억원)

- 행정운영경비 3,223, 소방행정력 강화 등 1,176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7,264억원('22년 6,414억원 대비 850억원 증)

- ① 통합재정안정화 : 1,379억원('22년 1,149억원)
  - (통합계정) 1,151억원(예탁금 937, 예치금 184, 예수금 원리금 상환 30)
  - (재정안정화계정) 228억원(예치금 228)
- ② 지역개발 : 2,889억원('22년 2,409억원)
  -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939, 예치금 750, 예탁금 1,000, 융자 200
- ③ 재해구호 : 530억원('22년 441억원) / 예치금 505, 이재민 등 재해구호비 25
- ④ 재난관리 : 601억원('22년 411억원) / 예치금 439,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162
- ⑤ 중소기업육성 : 1,222억원('22년 1,407억원) / 예치금 755, 예탁금 262, 이차보전금 등 205
- ⑥ 남북교류협력 : 53억원('22년 44억원) / 예치금 47,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6
- ⑦ 농어촌진흥 : 273억원('22년 267억원) / 예탁금 230, 예치금 40, 이차보전금 등 3
- ⑧ 사회복지 : 70억원('22년 65억원) / 예탁금 60, 예치금 7, 자활사업난치병 치료후원 등 3
- ⑨ 식품진흥 : 73억원('22년 69억원)
  - 예탁금 60,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교육 등 8, 예치금 5
- ⑩ 양성평등 : 34억원('22년 35억원)
  - 예탁금 30, 예치금 2,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등 2
- ⑪ 청소년육성 : 27억원('22년 27억원) / 예탁금 25, 예치금 1, 청소년육성 지원 등 1
- ⑫ 사회적경제 : 15억원('22년 16억원) / 예치금 7, 이차보전 등 8
- ⑬ 국외소재문화재 : 52억원('22년 51억원) / 예치금 52
- ⑭ 정의로운전환 : 46억원('22년 23억원) / 예치금 43,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3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I. 재정 여건 / 14
- II. 예산편성 방향 / 15
- III. 예산안 규모 / 16
- IV. 주요사업 내역 / 18
- V. 기금운용계획안 / 23



충청남도교육청  
기 획 국 예 산 과

# I 재정 여건

## 1. 재정 구조

- 외부재원의 의존성('22년 이전수입 98%)이 절대적이며, 내국세 변동에 따라 연동되는 재정구조로 변화하는 미래교육 투자(지출)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움
- '23년 세출예산 기준 인건비(45.7%), 교육복지(5.6%), 학교운영비(16.8%), 기관운영비(1.4%) 등 경상경비와 학교신설 및 그린스마트스쿨 등 교육시설 여건 개선비(16.6%)의 비율이 전체 약 85% 이상 차지
  - ☞ 탄력적 재정 운영이 가능한 재원은 15% 이하에 불과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 2. 세입 여건

-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약 85%)은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상황 및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경기회복세 둔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교육교부금의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세 세입액(3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개정 법률안이 연내 국회 통과시, '23년 2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우려 (\* 총남 약 1,800억원 감교부 예상)

## 3. 세출 여건

-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교육감 공약사업(총남미래교육 혁신3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 수요 확대 전망
- 처우개선과 물가상승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지출은 자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회복,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교육 투자, 교육환경개선 등 지출 수요도 꾸준히 증가
  - ☞ '25년까지 미래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혁신, 교육환경개선(석면제거,내진보강,LED조명교체) 사업 등 약 5조 원 이상 시설 투자 필요

##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기본  
방향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미래교육 도약

-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

- 재정운용 전 단계에 걸친 효율성□ 건전성 높이기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강화
- 법정·의무적 경비 우선반영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 재정운영 전 과정에 사회적 가치 실현

### < 예산편성 중점 방향 >

- ◆ **(행복교육) 기초학력 강화 및 참학력 신장**
  - 기초학력 보장지원, 독서·인문교육,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돌봄·방과후 교실운영,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도서관운영 등
- ◆ **(미래교육) 창의·융합형 미래교육 추진**
  - 지능형 수학실 구축 등 창의·융합교육, 진로교육, 취업역량강화 직업교육,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시·군별 AI교육체험센터 구축 등
- ◆ **(시민교육) 민주시민·세계시민·생태시민 교육 활성화 지원**
  -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학생자치활동 기반 확대, 인성교육, 학교(성)폭력 없는 학교문화 정착, 학생인권센터, 다문화교육, 생태환경교육 등
- ◆ **(책임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기회 보장**
  -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특수교육, 교육복지, 학교체육활성화, 학생건강관리, 학교지원센터 확대, 교권보호센터 운영 등
- ◆ **(지원행정)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 학생배치시설, 석면제거, 학내전산망 구축, 재난재해 예방관리, 학교운영비 지원, 통학여건 개선, 교직원 주거시설 확충 등

III

## 예산안 규모

### 1. 총괄표

(단위 : 억원,%)

2023년도 (A)	2022년도 (B)	증 감 (A-B)	비율 (%)
49,442	42,349	7,093	↑ 16.8

### 2. 세 입 (관별)

(단위 : 억원,%)

합 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49,442	42,349	7,093	16.8
<b>이 전 수 입</b> 4조 8,813억원 (↑ 6,964억원, 16.6%)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 보통교부금	41,083	34,551	6,532	18.9
○ 특별교부금	529	466	64	13.7
○ 증액교부금	303	290	13	4.4
○ 국고보조금	353	81	272	336.3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612	1,654	△42	△2.6
○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도세전입금 등)	4,617	4,392	225	5.1
○ 비법정전입금(교육경비 등)	301	398	△97	△24.3
○ 민간, 자치단체간이전수입	15	17	△2	△10.5
<b>자 체 수 입</b> 80억원 (↑ 32억원, 65.2%)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 교수학습활동수입	8	6	2	26.8
○ 행정활동수입	12	9	3	28.6
○ 자산수입	4	4	0	0.0
○ 이자수입	55	27	28	99.0
○ 기타수입	1	2	△1	△10.6
<b>기 타</b> 549억원 (↑ 97억원, 21.5%)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 전년도이월금	500	400	100	25.0
○ 금융자산회수	49	52	△3	△5.1

### 3. 세 출 (부문별)

(단위 : 억원,%)

합 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49,442	42,349	7,093	16.8

**유 아 및 초·중등교육** 2조 4,959억원 (↑ 5,460억원, 28.0%)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 인적자원운용	364	340	24	7.0
○ 교수-학습활동지원	4,648	3,339	1,309	39.2
○ 교육복지	2,784	2,709	75	2.7
○ 보건급식	659	653	6	0.9
○ 학교재정지원관리	8,304	6,532	1,772	27.1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200	5,926	2,274	38.4

**평 생 교 육** 98억원 (↑ 6억원, 6.8%)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 평생교육	98	92	6	6.8

**교 육 일 반** 1,538억원 (↑ 35억원, 2.3%)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 교육행정일반	592	633	△41	△6.5
○ 기관운영	714	636	78	12.3
○ 재무활동	232	234	△2	△1.2

**예 비 비 및 기 타** 250억원 (↑ 52억원, 26.4%)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 예비비 및 기타	250	198	52	26.4

**인 건 비** 2조 2,597억원 (↑ 1,540억원, 7.3%)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 인건비	22,597	21,057	1,540	7.3

## 1. [행복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강화 및 참학력 신장

(단위 : 억 원)

구 분	주요 사업 내역	예산액
1) 놀이 중심의 미래유치원 운영	· 인공지능(AI) 유치원 운영	25
	· 유-초 이음교육 운영	1.3
	· 소규모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4
	· 유치원 돌봄 및 방과후과정 운영	307
	· 행복꿈틀 안전유치원 운영	10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운영	1.5
2)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2022 개정 교육과정 연수(초1~2학년 적용 대비)	3
	· 충남형 자유학기-진로연계학기 운영	10
	·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 확대	82
	·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공간(교과교실) 조성 ※ 일반교 75교 중 '22년까지 50교, '23년 15교, '24년 10교 조성 완료 예정	271
3) 충남 미래형 평가체제 구축	· 충남교육과정평가 정보원 설립추진단 운영	1
4) 충남학력 디딤돌 다지기	· 기초학력 특별보충 과정 운영	160
	· 기초학력 향상 지원(두드림학교 32억,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0억 등)	84
	· 온채움 선생님 지원('23년 455명, 165명 인원 확대, 월 1,730천원*10월)	79
	·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 전국최초 '22.2추 초등학생용(1.5억), '23.본 중학생용(3.3억)	18
5) 배움의 바탕을 다지는 독서·인문교육	· 독서·인문 소양 교육 활동 지원	30
6)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 예술교육 인프라 구축(예술융복합 공간 환경 구축)	84
	· 지역 예술교육 활성화	3
	· 예술 프로그램 운영(85교, 1학생 1전통 악기 지원 등)	18
	·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52
7) 충남행복교육지구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15개 사군)	23
	·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마을학교 150개소, 학교·마을연계 교육과정운영 22교)	61
8) 돌봄,방과후 교실 안정적 운영	· 초등 돌봄교실 운영(국정과제-저녁 돌봄교실 확대) ※ 기존 간식비·방학중 급식비 전액 지원 ↑83억 증액	296
	· 방과후학교 운영	94
9) 학부모교육	· 학부모 자치활동 및 교육 지원	16
10) 미래를 여는 평생교육, 도서관 운영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5
	· 공공도서관 운영	46

## 2. (미래교육)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창의·융합형 미래교육 추진

(단위 : 억 원)

구 분	주요 사업 내역	예산액
1)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AI) 융합기반 구축 및 자료개발 17</li> <li>· 피지컬 컴퓨팅 교구활용 이꿈학교 운영 2.7</li> <li>· 충남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 구축 17</li> <li>· 충남형 시융합 교육과정 이꿈학교 운영 50</li> <li>· 충남형 가상누리터(메타버스) 운영 3.6</li> <li>※ 전국최초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수업 레시피(인수레) 시스템 구축</li> <li>· 인공지능(AI) 교육체험센터 구축(9개 교육지원청, 신축 예정 5개 시군은 '23년부터 추진) 268</li> <li>· 디지털교실 구축 57</li> <li>· 디지털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60</li> <li>· 디지털교과서개발 및 활용 활성화 15</li> <li>· 마주온활용 학교 지원 10</li> <li>·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18</li> </ul>	
2)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교육 정책 연수 및 공학도구 활용 수학학습 지원 1</li> <li>· 수학교육 활성화 5</li> <li>· 지능형 수학실 구축 6.2</li> <li>· 수학 보조자료 개발 7.7</li> <li>· 충남수학체험센터 운영 0.6</li> </ul>	
3) 학생 성장을 돕는 진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진로융합활동 공간·체험환경 구축 11</li> <li>· 진로교육기반 구축 5</li> <li>· 진로교육 역량강화 14</li> <li>·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9</li> <li>· 학생진로진학 지도 13</li> </ul>	
4) 직업교육 혁신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실습실 개선 및 현장실습 운영 323</li> <li>· 전문기술 향상 및 인성 함양 6</li> <li>· 직업계고 인식개선 및 취업역량 강화 67</li> <li>·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각종 대회 운영('23년 충남 개최) 101</li> <li>· 글로벌현장학습(해외인턴십) 지원 20</li> <li>·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12교, 고용노동부 지원금액에 대응투자 25%) 33</li> <li>·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6교, 직업계고 학과 개편에 따른 지원) 36</li> <li>· 미래형 신산업실습환경 구축 27</li> </ul>	
5)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학교 문화 확산 및 지원 45</li> <li>· 충남형 IB학교 운영(공립 초·중·고 각 1교씩 운영) 4</li> <li>※ 국제학위 과정으로 고등학교(DP)를 포함 초·중(PYP)과 중학교(MYP)과정을 운영하는 학교</li> <li>· 미래형 교육과정 본보기 학교 운영 3</li> </ul>	
6) 충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스마트스쿨 조성(33교→75교) 1,442</li> <li>※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개축 또는 리모델링(지방비 70%, 국고 30%)</li> </ul>	

### 3. [시민교육] 포용하며 협력하는 민주시민·세계시민·생태시민 교육 활성화 지원

(단위 : 억 원)

구 분	주요 사업 내역	예산액
1)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5.6
	· 학생자치활동 지원	9
	· 인권역량 강화 및 학교인권센터 운영	7
	·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0.5
2) 건강한 삶의 기초를 세우는 인성교육	· 실천중심 인성교육 지원	28
	· 관계중심 생활교육 강화	67
	· Wee 프로젝트 담당자 연수 및 센터운영	13
	· 생명존중 자살예방 운영	7.5
	·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지원	10
	· 학생 상담활동 지원	6
3) 학교(성)폭력 없는 학교문화 정착	·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교육	52
	·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3
4) 존중과 포용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인권교육 강화 및 학교인권센터 운영	7
5)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 문화 다양성 교육	· 다문화교육 지원(신창초 한국어학급 특별교실 3실 증축 7억 등)	42
	· 한국어학급 운영 및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6
6) 생태전환 학교환경교육 지원	· 유아숲 생태교육 운영	6
	· 생태환경학교(학교숲) 조성	5
	·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2
	· 학생생태시민위원회 운영	3.3
	· 자원순환프로그램 운영 지원	1.5
	· 기후위기 생태교육 운영	2
	· 생태환경 체험연수 및 환경교육 운영	13

### 4. [책임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기회 보장

(단위 : 억 원)

구 분	주요 사업 내역	예산액
1) 현장 중심 유아교육 지원체제 강화	· 유아교육지원센터 운영	5
	· 유아체험교육활동 지원	6
	·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20
	· 유아학비 지원	1,036
	· 사립유치원 교육비 추가 지원 316억 포함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886억) 미포함	
	· 사립유치원 행·재정지원	201

구 분	주요 사업 내역	예산액
2) 공정하고 균등한 특수교육 기회 보장	· 충남특수교육원설립 추진단 운영	0.3
	·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환경개선	34
	· 장애학생 치료지원 및 병원학교 운영	44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5
	·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	70
	· 특수교육 활성화 지원	27
	· 특수교육 대상자 통학비 지원	3.6
	· 직업전환교육 지원	8
	· 장애학생 정보화대회 지원	5
	· 장애인식개선 지원	2.4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비 지원(초 160천원, 중 200천원, 고 300천원, 189명)	1.9
3)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복지 (※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35
	· 교육급여지원	73
	· 수학여행지원(다자녀 8.3억, 저소득층 14.8억)	23
	· 다자녀학생 입학준비금(1인당 200천원, 1,900명)	3.8
	·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및 교육복지 지원(급식비 등)	90
4) 미래교육 디딤돌 학교체육 진흥 지원	·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3
	· 건강체력교실 운영	1.8
	· 생존수영 운영	40
	· 학교체육시설 안전성 강화 지원	50
	· 학교운동장 최적화 사업 지원(유해운동장 35교, 마사토운동장 27교)	94
	· 소규모 체육관 증축(고북중, 북수중, 금마중, 서부중, 양신초, 시목초)	53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31
	· 집중과 통합의 학교운동부 운영	81
5) 학생 건강관리 체계 강화	· 학생건강관리체계 강화(아산 신화초 건강학교 구축 48억 등)	51
	· 학생흡연예방 지도	12.8
	· 보건교육운영 내실화	15
6) 업무경감과 학교업무 최적화 지원	· 학교지원센터 운영	9
	· 교무전담교사 수업 지원	7
7)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 고도화	· 교권보호센터 운영(교권보호 상담전화, 교원배상책임보험, 원격심리검사, 교원안심공제)	4.5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지원(교권보호전문변호사, 스승존경사제동행프로그램운영)	2.3

## 5. [지원행정]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 강화

(단위 : 억 원)

구 분	주요 사업 내역	예산액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학생 제안 12개 6억, 학부모 제안 22개 26억, 총 34건	33
2)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	· 교육공무직 업무관리 ·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연수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1.7% 적용	4 2 35
3) 기존 건물 석면 2026년까지 100% 제거	· 석면없는 교실 추진-석면 해체·제거 ※ '22년 현재 69.7% 제거, '23년 75.4%, '26년까지 100% 완료	190
4) 학내 전산망 구축과 개선	· 학내전산망 인프라 구축(신설학교 6교, 개축 대상교 1교) · 무선인프라 구축(신설학교 및 노후화된 학교 134교)	2.6 13
5) 학교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재해 예방관리 강화	· 지능형 CCTV 설치(학교폭력, 보안, 화재예방 등 160교 지원) · 안전체험실 구축 및 학생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관리 ※ 급식업무종사자 폐암건강검진비 4억, 유해위험요인 전문기관 용역 16억 등 · 중대재해예방관리	30 36 23.8 0.6
6) 교육활동 지원 중심의 효율적 학교회계 운영	·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 기본운영비(단가 7.4% 인상) 2,198억, 기타운영비 3,073억(식품비 지원 추가 등) · 사립학교 운영비·인건비 재정결함보조지원 ※ 운영비 876억, 인건비 2,157억(명퇴수당 83억, 맞춤형복지비 29억 포함)	5,271 3,033
7) 학생배치 여건 최적화	· 보통교실 전환(천안오성고 2실, 온양용화고 2실) · 보통교실 증축(둔포초 3실, 서산중앙고 6실, 송악고 3실, 백제중 2실, 서천 문산초 1실) · 학교 신설 및 이전 21교(유 3교, 초 10교, 중 6교, 고 2교)	5 31 3,176
8) 농어촌지역 통학 여건 개선	·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36
9)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직원 주거시설 확충	·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충남 내포) · 교직원 공동주택 증축(보령, 대안) · 관사 매입(서산14, 논산계룡5, 당진11, 부여13, 서천21세대 총 64세대) · 관사 유지 관리	44.5 134 64 4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11,051억 원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 10,297억 원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 754억 원

1. 교육재정안정화기금 : 10,297억원 (※ '22년 말 조성액 9,987억 원)

- 예치금회수 9,987억 원 / 예금이자 310억 원

2.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 754억원 (※ '22년 말 조성액 721억 원)

- 예치금회수 721억 원 / 전입금 12억 원 / 예금이자 21억 원

※ 대규모 주요 투자 주요 사업

○ '25년까지 총 5조 2,642억원

☞ 교육여건개선 3조 2,168억원, 미래교육 기반구축 3,081억원,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1조 4,582억원, 교육복지 확대 2,811억원 소요 전망

◇ 주요 대규모 사업 발췌

· 그린스마트학교 조성	13,911억	· 학교 이전 및 신증설	10,636억
· 급식실 환경 개선사업	800억	· 인공지능(AI)교육체험센터, 특화도시 구축 등	853억
· 특수교육원 설립 등 여건개선	926억	· 미래형 고등학교 재구조화 추진	744억
· 기존 건물 석면 제거	979억	· 교육시설 내진보강	2,270억
· 교육시설 LED 조명 설치	276억	· 교과교실운영, 고교교육력 제고	773억



## 2023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한태식(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I. 재정총량분석

#### 1. 충청남도

##### (1) 재정규모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9조 8,907억원 규모로 편성
- 최근 5년간(2019~2023) 재정규모는 연평균 8.0% 증가, '16~'18(8.4%) 대비 다소 둔화
- 최근 5년간(2019~202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연평균 각각 9.3%, 16.0% 증가한 반면 기금은 7.6% 감소

(단위: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17~'18	'19~'23
합계 (전년비)	60,013 14.8	62,416 4.0	66,477 6.5	72,646 9.3	77,835 7.1	87,113 11.9	93,801 7.7	98,907 5.4	8.4	8.0
일반회계 (전년비)	45,570 8.1	47,350 3.9	51,735 9.3	57,400 11.0	62,760 9.3	72,259 15.1	78,200 8.2	82,045 4.9	7.1	9.3
특별회계 (전년비)	10,710 63.8	4,375 △59.2	4,630 5.8	5,294 14.3	5,434 2.6	8,393 54.5	9,187 9.5	9,598 4.5	34.8	16.0
기금 (전년비)	3,733 4.3	10,691 186.4	10,112 △5.4	9,952 △1.6	9,641 △3.1	6,461 △33.0	6,414 △0.7	7,264 13.3	95.4	△7.6

##### (2) 통합재정수지

-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2023년도 충청남도 통합재정수지는 2,186억원 적자로 전년도 대비 6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342억원 적자에서 2023년 2,186억원 적자로 최근5년간 적자폭은 6.4배 확대
- 통합재정수지 악화는 순지출 증가(4,278억원)에 따른 순증가 등에 기인

(단위: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규모 (A=C+F)	6,574,066	8,416,703	7,641,715	8,251,858	8,682,113
순수입(B)	6,539,874	7,895,945	7,425,337	8,014,123	8,463,545
순지출(C)	6,597,987	8,391,087	7,647,549	8,248,684	8,676,470
용자지출(D)	25,250	98,100	10,250	20,160	20,200
용자회수(E)	49,171	72,484	16,084	16,986	14,557
순용자(F=D-E)	△23,921	25,616	△5,834	3,174	5,643
통합재정수지 (G=B-C-F)	△34,192	△520,758	△216,378	△237,735	△218,568

### (3) 지방채무

○ 2023년 충청남도는 2019년 대비 119.1% 증가한 1조 3,253억원 규모, 예산 대비 지방채무비율 2년 연속 13% 수준 위험 요소

→ '23년 지방채무는 4,918억원으로 전년도 보다는 다소 감소, '19~'23년 연평균 15.0% 증가 전망

→ 최근 급증하던 외부차입금은 감소 전망, 지역개발채권의 지속 증가 추세

○ 복지지출 소요 증가와 코로나19 대응 등 재정 확장 요인과 함께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지방세 수 감소 요인 등 어려운 재정 전망을 고려한 건전재정 운용 노력 필요

(단위: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안
				본예산	3회추경안	
1. 지방채무(총 채무)	604,772	793,451	1,023,070	1,255,700	1,140,836	1,325,305
외부차입금	0	177,100	358,400	511,100	391,800	491,800
지역개발채권	604,772	616,351	664,670	744,600	749,036	833,505
2. 예산(최종예산)	7,871,979	9,747,087	10,270,898	9,380,086	10,642,399	9,890,665
일반회계	6,202,340	8,043,960	8,575,003	7,820,000	8,796,949	8,204,500
특별회계	598,134	579,602	920,263	918,724	963,855	959,788
기금	1,071,505	1,123,525	775,632	641,362	881,595	726,377
3. 예산대비 채무비율	7.68	8.14	9.96	13.39	10.72	13.40

### (4) 세입예산안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조 2,045억원(자체수입 3조 88억원, 이전재원 4조 8,709억원, 지방채 1,000억원 등) 전년대비 4.9% 증가

→ 세외수입 및 지방채는 3.3%와 3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7.2%, 21.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취득세 △12.73% 감소, 레저세 117.39%, 지방소비세 31.21%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계

: 부동산 거래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보수적인 세수추계 필요

(단위:억원, %)

구분	2023 예산안		2022 본예산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82,045	100	78,200	100	3,845	4.9
자체수입	30,088	36.7	28,160	36	1,928	6.8
지방세수입	29,200	35.6	27,242	34.8	1,958	7.2
세외수입	888	1.1	918	1.2	-30	-3.3
이전재원	48,709	59.4	46,241	59.1	2,468	5.3
지방교부세	9,357	11.4	7,685	9.8	1,672	21.8
국고보조금 등	39,352	48.0	38,556	49.3	796	2.1
지방채	1,000	1.2	1,527	2	-527	-34.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48	2.7	2,272	2.9	-24	-1.1

## (5) 분야별 자원배분

○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14대 분야별 자원배분, 사회복지 분야 총 2조 7,625억원 전년 대비 1,051억원 증가 가장 큰 증액 규모

- 사회복지 분야(2조 7,625억원) 33.7%, 전년 대비 36.8% 증가
- 농림해양수산 분야(1조 3,492억원) 16.4%, 전년 대비 5.2% 증가
- 교통 및 물류 분야(3,295억원) 전년 대비 30.8% 증가, 과학기술 분야(277억원) 21.7%, 환경(6,260억원) 13.5% 순
- 예비비(375억원) 전년 대비 51억원 감액 편성, 기타 분야(2,598억원) 전년 대비 4.5% 증가

[일반회계 14대 분야별 세출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본예산		2023 예산안		증 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 액	증감률
합 계	78,200	100.00	82,045	100.00	3,845	4.92
1. 일반공공행정	7,641	9.77	7,912	9.64	271	3.55
2. 공공질서 및 안전	4,659	5.96	4,929	6.01	270	5.79
3. 교육	4,002	5.12	3,900	4.75	△ 102	△2.54
4. 문화 및 관광	3,379	4.32	3,574	4.36	195	5.77
5. 환 경	5,513	7.05	6,260	7.63	747	13.55
6. 사회복지	26,574	33.98	27,625	33.67	1,051	3.96
7. 보건	2,369	3.03	2,270	2.77	△ 99	△4.19
8. 농림해양수산	12,824	16.40	13,492	16.44	668	5.21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209	2.82	2,007	2.45	△ 202	△9.13
10. 교통 및 물류	2,519	3.22	3,295	4.02	777	30.83
11. 국토 및 지역개발	3,372	4.31	3,530	4.30	159	4.71
12. 과학기술	227	0.29	277	0.34	49	21.74
13. 예비비	426	0.54	375	0.46	△ 51	△11.94
14. 기타	2,486	3.18	2,598	3.17	112	4.50

자료: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2. 충청남도교육청

### (1) 재정규모

○ '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33.8%증가한 6조 495억원 규모로 편성

○ 최근 5년간('19~'23) 재정 규모는 연평균 31.1%증가, '16~'18년(3.6%)대비 확대

2017~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재정규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감률	
								'16~'18	'19~'23
합계	30,685	33,200	35,216	37,586	37,911	45,222	60,495	-	-
전년비	6.4	8.2	6.1	6.7	0.9	19.3	33.8	3.6	31.1
교육비특별회계	30,295	32,637	34,516	36,142	35,075	42,349	49,443	-	-
전년비	6.2	7.7	5.8	4.7	△1.6	19.1	16.8	7.0	19.7
기금	390	563	700	1,444	2,836	2,873	10,298	-	-
전년비	25.4	44.4	24.3	106.3	96.4	1.3	284.5	16.0	102.6

### (2) 통합재정수지

○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수지는 △99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2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충청남도교육청 결산공시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3,868억원, 2020년 904억원, 2021년 1,275억원이고,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2022년(추정치) 통합재정수지는 1,278억원임
- 2023년(추정치)은 △998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에서 적자 전환함

2019~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수지 전망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추정치	추정치	추정치	추정치	추정치
총수입(A+B)	6,461,407	6,555,524	6,727,128	6,820,590	6,911,032
순수입(A)	5,332,036	5,560,375	5,865,901	6,094,166	6,319,563
보전수입(B)	1,129,371	995,149	861,227	726,424	591,469
총지출(C+D)	6,461,407	6,555,524	6,727,128	6,820,590	6,911,032
순지출(C)	5,431,839	5,660,141	5,967,141	6,195,510	6,421,249
보전지출(D)	1,029,568	895,383	759,987	625,080	489,783
통합재정수지(A-C)	△99,803	△99,766	△101,240	△101,344	△101,686

주: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추정치

### (3) 세입예산안

- 이전수입은 4조 8,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6,965억원 증가(16.6%)
- 자체수입은 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억원 증가(65.2%)
- 기타는 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97억원 증가(21.5%)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

과목		2022예산액		2023예산액		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계		4,234,912,000	100.0	4,944,266,202	100.0	709,354,202	16.8
이 전 수 입	소계	4,184,858,025	98.8	4,881,311,967	98.7	696,453,942	16.6
	중앙정부이전수입	3,704,216,392	87.5	4,388,003,576	88.7	683,787,184	18.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78,953,369	11.3	491,797,127	9.9	12,843,758	2.7
	기타이전수입	1,688,264	0.0	1,511,264	0.0	△177,000	△10.5
자 체 수 입	소계	4,858,035	0.1	8,025,785	0.2	3,167,750	65.2
	교수학습활동수입	633,554	0.0	803,342	0.0	169,788	26.8
	행정활동수입	934,588	0.0	1,202,261	0.0	267,673	28.6
	자산수입	368,841	0.0	399,302	0.0	30,461	8.3
	이자수입	2,744,776	0.1	5,463,246	0.1	2,718,470	99.0
	기타수입	176,276	0.0	157,634	0.0	△18,642	△10.6
기 타	소계	45,195,940	1.1	54,928,450	1.1	9,732,510	21.5
	전년도이월금	40,000,000	0.9	50,000,000	1.0	10,000,000	25.0
	금융자산회수	5,195,940	0.1	4,928,450	0.1	△267,490	△5.1

#### (4) 재원배분(1):2023년 분야별 규모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9,443억원으로 전년 대비 7,094억원 증가(16.8%)]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 4,959억원으로 전년 대비 5,460억원 증가(28.0%)
- 평생교육은 98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 증가(6.8%)
- 교육일반은 1조 5,384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억원 증가(2.3%)
- 예비비는 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억원 증가(26.4%)
- 인건비는 2조 2,5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1억원 증가(7.3%)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분야별 세출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2022 본예산(A)	2023 예산안(B)	증 감		
			금액 (B-A)	증감률 (B-A)/A	
합 계	4,234,912,000	4,944,266,202	709,354,202	16.8	
유아 및 초중등교육	소계	1,949,860,279	2,495,890,799	546,030,520	28.0
	인적자원운용	33,989,406	36,373,212	2,383,806	7.0
	교수학습활동지원	333,851,102	464,826,449	130,975,347	39.2
	교육복지	270,932,247	278,380,631	7,448,384	2.7
	보건급식	65,301,682	65,916,840	615,158	0.9
	학교재정지원관리	653,177,080	830,399,076	177,221,996	27.1
	학교시설여건개선	592,608,762	819,994,591	227,385,829	38.4
평생교육	소계	9,168,223	9,791,268	623,045	6.8
	평생교육	9,168,223	9,791,268	623,045	6.8
교육일반	소계	150,429,163	153,838,823	3,409,660	2.3
	교육행정일반	63,360,682	59,237,983	△4,122,699	△6.5
	기관운영	63,616,356	71,432,815	7,816,459	12.3
	재무활동	23,452,125	23,168,025	△284,100	△1.2
예비비	소계	19,778,671	25,000,000	5,221,329	26.4
	예비비 및 기타	19,778,671	25,000,000	5,221,329	26.4
인건비	소계	2,105,675,664	2,259,745,312	154,069,648	7.3
	인건비	2,105,675,664	2,259,745,312	154,069,648	7.3

## II. 분류별 세부 항목별 분석

### 1. 명시이월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 도 및 교육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이월조서 제출

: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에 충청남도는 95건 831억 8,592만원을, 교육청은 322건 743억 6,229만원을 각각 2023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명시이월조서를 제출

-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부득이한 경우 추경에 받을 수 있음)
- 도 및 교육청은 의회의 사전승인(당초 본예산 편성시) 없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원인행위를 필수적으로 한 경우 가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연도 중에 명시이월 처리하는 예산운용을 하고 있음
- 향후 명시이월제도 운용에 있어
  - 법령 취지에 맞게 당초 본예산 편성 제출시
  -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하는 예산을 미리 의회에 제출 및 의결을 득하도록 제도운영필요
  - 매년 이월되는 사업의 적정규모 예산편성 필요

### 2.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건전재정운용 필요

○ 충청남도는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 지방세 : 2022년도 대비 7.19% 증액한 2조 9,200억원으로 추계 및 편성
- 보통세 : 전년대비 8.44% 증액한 2조 5,124억원
- 목적세 : 4,027억원
- 지난년도수입 : 49억원

○ 보통세 중

- 취득세 : 1조 74억원(전년 대비 12.73%감액)
- 지방소비세 : 1조 4,015억원(전년 대비 31.21% 증액) 편성

○ 도 2023년도 일반회계 취득세 1조 74억원 편성(추계) 전년 대비 12.73% 감액

→ 그동안의 취득세 세입예산 대 결산차율 및 부동산 거래량 추이의 연계성 감안

최근 주택거래량 추이(전년 대비  $\Delta 52.36\%$ )

2023년도 시장 상황(가격 하락, 거래 건수 급감) : 심각한 거래절벽 우려

- 부동산 거래 절벽은 고금리 및 강력한 대출규제에 의한 것

: 국제경제환경 감안시 최소 2023년도 중에는 금리 및 대출규제 완화 기대 어려움

→ 부동산 거래 연계 - 취득세 과다 추계

→ 최근 3년간 지난년도수입의 과다한 규모의 환급 발생 :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특히,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 부족 2020년도 추경시 순세계잉여금 600억원 전액 감액조정 재정운용 사례 등 감안

⇒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보수적 세입 추계 및 편성, 안정적 재정운용노력 요구

○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통세

- 2021년 7.7%(1,639억원), 2020년 5.82%(1,084억원), 2017년 4.67%(623억원) 과다 징수
- 2018년과 2019년에는  $\Delta 1.58\%$ ( $\Delta 234$ 억원),  $\Delta 1.14\%$ ( $\Delta 161$ 억원) 부족징수
- 매년 상당한 결산 차액 발생

○ 이중 취득세

- 2021년 8.87%(977억원), 2020년 4.89%(446억원), 2017년 5.28%(483억원) 과다징수
- 2019년과 2018년에는  $\Delta 1.71\%$ ( $\Delta 136$ 억원),  $\Delta 3.82\%$ ( $\Delta 380$ 억원) 부족징수
- 매년 상당한 결산 차액 발생

○ 지방소비세

: 국제 세수추계 결과에 따라 도 세입재원도 변동 발생

- 2021년 6.93%(653억원), 2020년 7.06%(618억원), 2018년 5.96%(201억원), 2017년 3.33%(112억원) 과다 징수

- 2019년  $\Delta 1.53\%$ ( $\Delta 91$ 억원) 부족징수

매년 결산 차액 발생

○ 지난년도수입(지방세 등)

- 2017년 △48.43%(207억원), 2018년 △60.59%(△188억원), 2019년 △214.51%(△190억원), 2020년 △1,919.16%(△183억원), 2021년에는 △481.71%(△194억원)

당초 예산편성 대비 매년 상당한 규모의 결손 발생

→ 지난년도수입의 과도한 환급액 기인 : 환급액 규모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지방세 지난년도수입의 환급 사유 및 원인 철저한 분석 필요

: 소송 등에 의한 지난년도세입 환급방식 개선 필요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적정 세입규모에 맞춘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 최근 5년간 도 세입예산 결산결과 및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상황

→ 환급금에 대한 정확한 예측 및 세출예산의 활용 등 매년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세수추계 : 전국 획일적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세수추계시스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여건에 맞는 자체 세수추계 모형 개발 등

→ 정확한 세수추계 : 건전재정운영 노력 요구

[연도별 취득세 세입결산, 예산편성 및 부동산거래량 추이 현황]

(단위: 천원, 동(호), %)

연도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C=A-B)	결산차율 (C/A*100)	주택거래량 추이
2023	1,007,400,000	-	-	-	-
2022	1,154,400,000	-	-	-	46,341 (△52.36%)
2021	1,101,500,000	1,204,802,191	1,199,188,567	108.87	97,283 (15.74%)
2020	912,400,000	963,723,038	957,047,810	104.89	84,055 (41.28%)
2019	799,100,000	789,424,463	785,452,117	98.29	59,495 (△5.74%)
2018	995,908,000	963,892,423	957,899,750	96.18	63,121 (△9.38%)
2017	914,100,000	967,690,966	962,388,733	105.28	69,652 (10.09%)

자료: 세입세출결산서,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자료 참조 재구성

[최근 6년간 연도별 주택거래량 현황]

(단위: 동(호), %)

구분	2017년 (증감률)	2018년 (증감률)	2019년 (증감률)	2020년 (증감률)	2021년 (증감률)	2022년 (10월 현재) (증감률)
충남	69,652 (10.09%)	63,121 (-9.38%)	59,495 (-5.74%)	84,055 (41.28%)	97,283 (15.74%)	46,341 (-52.36%)
전국	1,759,661 (8.35%)	1,719,231 (-2.30%)	1,569,498 (-8.71%)	2,021,865 (28.82%)	1,620,781 (-19.84%)	748,625 (-53.81%)

자료: 한국부동산원 R-ONE 참조

[최근5년간 일반회계 보통세 지난연도수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환급액	결산액 (C)	미수납액 (D=B-C)	결산률 (C/A*100)
2021	4,900,000	720,787	32,630,320	△18,703,647	-17,982,860	△381.71
2020	400,000	10,990,536	21,338,478	△7,276,635	3,713,901	△1,819.16
2019	6,000,000	12,095,384	21,987,308	△6,870,590	5,224,794	△114.51
2018	5,954,000	20,581,110	11,850,100	2,346,295	18,234,815	39.41
2017	8,000,000	24,871,267	10,561,302	4,125,774	20,745,493	51.57

자료: 세입세출결산서 참조 재구성

### 3. 예산 편성에 수반되는 사전절차 이행 개선 필요

#### [예산사전절차 미이행]

##### (1)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비

: 동의안과 예산안 함께 제출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비 예산 5억원 편성안과 동시에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의안번호 제178호) 제출

→ 동의안 의회의결 전 예산 편성 제출

: ‘예산안의 사전절차 이행원칙’에 어긋나는 예산편성 및 운용

· 행정안전부의 세종특별자치시 한시기구(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 신설 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 회신(2022. 10. 21.)

: 조건부 승인(기구신설 후 6개월 내 구체적인 특별지자체 추진방안이 담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전광역시의회·충청북도·충청남도의회’의 의결(또는 의회의장단 협약) 및 4개 시도 기존 인력 재배치 통한 정원 충원 전제)

○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 추진단 운영기간(2023. 1. ~ 2023. 12.), 행정안전부 승인 기간(2022. 12. ~ 2023. 11.)과 상이

: 상생협력단 이관을 통한 인력 증원(8명 → 37명) 구체적 계획 마련 필요

· 추진단 정원 총 37명(세종시 10명, 대전·충남·충북 각 9명)

○ 「(가칭)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부결시 대비

(2023년도 예산에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비 미편성)

: 2023년도 예산 구체적 근거 미흡

- 추진단 운영예산 총 20억원 대비 25% 용역비로 사용 계획
  - 특별지자체 기반마련 용역비 5억원(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 발전전략 수립용역 1억원, 자치법  
규 정비용역 1억원) 계상
  - 예산절감 방안 강구 필요

## (2) 출연기관 심의위원회 미심사 및 의회 출연동의안 미제출

: 충청남도 제출 2023년도 출연금, 총 20개 기관, 136개 사업, 980억 932만원 예산 편성

- 전년 대비 100분의 110이상 증액시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거쳐야 함
- 의회의 출연기관 출연동의안
- 2022년 예산 대비 100분의 110이상인 기관(4개 충남연구원, 인재육성재단, 사회서비스원, 문화재단) 중  
충남연구원은 사전절차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 편성시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이상인 경우  
(1)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2) 미리 지방의회 의결 득해야함  
: 『지방재정법』 제18조

- 2023년도 출연금 총액 2022년 예산 대비 100분의 110이상인 기관 중 충남연구원  
전년도 대비 26.1% 증액한 136억 8,466만원의 출연금 예산 편성  
법령에 의한 사전절차인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출연동의안 제출  
의회 출연동의를 득함  
→ 법적절차누락에 의한 의회 심의권 훼손, 출연동의안 법적효력 검증 필요
- 충청남도 출연기관의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  
: 20개 출연기관 중 6개기관 'C' 또는 '라' 등급 이하  
(인재육성재단, 사회서비스원, 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 백제문화재단, 여성가족연수원 등)  
여성가족연구원 제외한 모든 기관 점증적 출연금 증액  
→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출연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한 출연금조정 등  
: 평가와 출연의 연계 노력 필요

[2023년도 충청남도 출연기관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

연번	출연기관명	출자출연 운영심의회	2022년도 예산액 [2회 추경 기준] (A)	2023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1	충남연구원	미 심의	13,684,659	10,853,818	2,830,841	26.1
2	인재육성재단	심의 및 원안가결	6,086,959	4,447,082	1,639,877	36.9
3	사회서비스원	심의 및 원안가결	1,983,170	1,800,000	183,170	10.2
4	문화재단	심의 및 원안가결	8,029,491	5,505,935	2,523,556	45.8

자료 : 예산안 참조 재구성

[2022년도 충청남도 출연기관별 경영평가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출연기관명	예산액			경영평가 결과	
		2023년	2022년	2021년	2022년도	2021년도
20개 출연기관		98,009,315	97,734,365	100,255,728		
3	인재육성재단	6,086,959	4,447,082	4,363,082	라	라
5	사회서비스원	1,983,170	1,800,000	1,530,000	C	마
6	일자리진흥원	1,450,000	1,410,376	1,220,299	라	마
9	과학기술진흥원	4,685,000	4,482,732	3,113,480	마	미 실시 (2020.11.설립)
14	백제문화재단	1,780,000	1,780,000	1,500,000	마	라
16	여성가족연구원	2,093,596	2,236,880	1,999,506	라	라
17	청소년진흥원	1,359,089	1,447,397	714,643	라	다

자료 : 예산안 참조 재구성

### (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수립 누락 및 의회 미승인

○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시설비 20억 4,000만원 편성(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제출하고 있음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계속비 조서]

(단위: 천원, %)

사업명	구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2021년도까지			2022년도 예산액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가칭)충남여성 가족 플라자 건립	당초	건축 연면적							
	변경	7,650㎡ 지하1층~	43,320,000				6,000,000	10,410,000	26,910,000
	증감	지상4층 '21.~'26.	43,320,000				6,000,000	10,410,000	26,910,000

자료 :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참조

○ 여성가족정책관 : 충남여성가족플라자 사업 기본계획변경계획 수립(2022.1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당해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제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4항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여성가족정책관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권의 증진 및 역량개발, 양성평등 문화 확산 플랫폼’으로서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 2021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및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득하여 사업 추진

\* 2022년 11월 : ‘여성·가족·청소년 종합플랫폼으로 전환

→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변경(안)” 방침에 의거 사업계획변경 추진 중

< 주요 변경사항 >

· 기능 : “여성정책연구 중심” → “여성단체·청소년 활동 진흥 중심”으로 변경

· 층별시설 : 재배치(여성가족연구원 → 청소년진흥원) 및 입주단체 확대(2개→ 7개)

→ 여성단체 집적화 및 허브기능 강화

→ 사업기간 1년(5년→6년) 연장

→ 총사업비 일부 증액(0.2억원 증)

※ 변경(안) 방침서 내용

**III 변경 계획(안)**

< 사업 개요 >

- (기 간) 2021 ~ 2026년(6년간)
- (위 치) 삼교읍 목리 888-1번지 일부  
(내포신도시 내 북5)
- (규 모) 부지 6,600㎡, 연면적 7,650㎡
- (총사업비) 433.2억원(도비)



**주요 변경 사항**

- ① [기능 조정] 여성정책연구 중심 → 여성단체·청소년 활동 진흥 중심
- ② [층별 시설 재배치] 기존 부지·규모 유지, 공간·시설 재배치
  - (1층) 편의시설(매점·커피숍·식당 등 수익사업), 대규모 강당(가변형) 배치
  - (4층) 여성가족연구원(여성정책연구) → 청소년진흥원(청소년활동지원)
- ③ [여성단체 집적화] 입주단체 확대(2개→7개), 허브 기능 강화
- ④ [총 사업비] 424억 → 433.2억 (9.2억원 증가\*)
  - \*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부지매입비) 증액
- ⑤ [사업 기간] 5년 → 6년 (1년 연장, 변경 절차 이행기간 소요)

**IV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433.2	60.0	104.1	175.9	93.2
공 사 비	326.8	-	81.8	163.4	81.7
보 상 비	45.8	45.8		-	-
용 역 비	60.6	14.2	22.3	12.5	11.5

- ▶ 2022년 1회 추경 편성액: 20.4억원(토지매입비 18.3억, 실시시설비 2.1억)
- ▶ 2022년 3회 추경 편성액: 39.6억원(토지매입비 27.5억, 실시시설비 12.1억)
- ※ 추후 실시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변동 가능

- 당해 변경 사업계획 :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사업 최장 사업기간(5년) 초과
  - 지방재정법 초월한 사업계획
  - 변경계획상 연차별 투자계획과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도별투자계획 상이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 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본 사업 중앙투자심사 결과 : 조건부 의견
  - 추후 이번 계획변경과 같이 추가적인 사업변경으로 사업비 500억원 초과시(현 계획 433.2억원)
  - : 타당성 조사 수행 및 수익창출 방안 마련 등 심사결과 조건부 내용 보완 추진여부 검토 요망

’21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억원)	심사 결과	
				내용	의견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 자 건립	2022~ 2025	부지면적 6,600㎡ 연면적 7,650㎡ (지상 4층/지하 1층) 정책연구, 광역기능지원, 여성활동지원, 공유 및 돌봄시설 등	424 (도 339) (채 85)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부대비 및 제로에너지, 예비비 등 비용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타당성 조사 수행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및 다양한 프로 그램 개발 등 수익창출 방안 마련	조건부

(4) 정수물품 미취득 및 물품구입 예산 편성

1)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정수물품 대상 물품취득비 예산편성

농림축산국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비상대기소 환경개선공사 등 10개 사업 8억 800만원 편성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상 관리 정수물품 총 59종,

2022.12.31.현재 승인받은 물품 정수 : 49종, 3,969개, 1,289억 1,600만원

· 2022년 10월 말 기준 관리대상 물품 정수 :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58종

· 총 승인수량 706대 대비 보유수량 824대 : 118대 초과

[2023년도 정수물품 대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

사업명	부서명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 증감액	합계(A)		금액 (B-A)	증감률 (B-A)/A
<b>합 계</b>		<b>0</b>	<b>0</b>	<b>0</b>	<b>808,000</b>	<b>808,000</b>	<b>100.0</b>
본소 비상대기소 환경개선공사	동물위생시험소	0	0	0	12,000	12,000	100.0
초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동물위생시험소	0	0	0	500,000	500,000	100.0
도립공원 운영관리 물품구입	신림자원연구소	0	0	0	2,000	2,000	100.0
휴양림운영관리 물품구입	신림자원연구소	0	0	0	3,000	3,000	100.0
사무소 집기류 구입	신림자원연구소	0	0	0	18,000	18,000	100.0
관용차량구입(수산자원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0	0	0	45,000	45,000	100.0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0	0	0	4,000	4,000	100.0
연주소 개선 및 유용성분 분석장비 구입	농업기술원	0	0	0	150,000	150,000	100.0
곤충 현대화 사업(목욕연구장)구입	농업기술원	0	0	0	5,000	5,000	100.0
노후 공용차량 교체	농업기술원	0	0	0	69,000	69,000	100.0

자료: 농림축산국

2) 소방본부

○ 물품정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

: 소방본부 노후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 등 5개 사업

·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

→ 내용연수 경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사업 19대, 신규 보강사업 5대 총 24대 구입

: 예산 61억 8,200만원 편성

·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

→ 특수 펌프차량 보강 1대 구입 : 예산 7억 5,000만원 편성

· 소형사다리차 보강 사업

→ 주택·상가 밀집지역 등 좁은 골목길, 불법 주정차 소방차 접근 곤란지역 소형사다리차 2대 구입 : 예산액 12억원 편성

· 구급차 교체 보강 사업

→ 구급차 신규 1대, 노후 교체 16대 구입 : 예산 22억 4,400만원 편성

· 특수목적 음압 구급차 보강 사업

→ 구급차 3대, 신규 차량 탑재 구급장비 14종 107점 구입 : 예산 6억 9,000만원 편성

[2023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사업명	2022			2023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 증감액	합계(A)		금액 (B-A)	증감률 (B-A)/A
계		12,894	0	12,894	11,066	△1,828	△14.2
회 계 장비과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4,980,000	0	4,980,000	6,182,000	1,202,000	24.1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1,500,000	0	1,500,000	750,000	△ 750,000	△50.0
	소형사다리차 보강	600,000	0	600,000	1,200,000	600,000	100.0
구 조 구급과	구급차 교체 보강	5,123,976	0	5,123,976	2,244,000	△2,879,976	△56.2
	특수목적 음압 구급차 보강	690,000	0	690,000	690,000	0	0.0

자료: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구조구급과

○ 소방차량 24대 교체 및 보강에 대한 5개 예산 사업

: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물품정수 승인 받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예산안 제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정수물품 취득시 정수 승인,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 취득불가, 구입 및 유지·관리 소요경비 예산 반영불가

### (5) 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사업

○ 2023년도 예산 전년 대비 2억 9,908만원 증액 3억 492만원 편성

관련 조례(「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의결(원안)을 전제로 사업비(3억원) 편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위배

- 연도 중 긴급히 수행해야 하는 정책연구용역 발생 시 즉시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총괄부서에서 5천만원의 연구용역을 6회 수행할 수 있는 예산 3억원을 포괄 예산으로 편성, 조례 제10조(예산편성 전 심의)에 의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9. 15.)를 거쳐 원안 가결 상태
- 해당 조례 2022. 10. 27.자 의회 제출, 제341회 정례회 심의예정

## 4. 예산 집행실적 저조사업의 2023년도 예산 지속편성 문제

### (1)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 2022년 집행률 10% 이하 부진사업 : 공보관 등 12개 부서 30개 사업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2			2023 예산안 (C)	증감액 (C-A)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 계(30건)			14,856,531	12,037	0.1	22,528,650	7,672,119
공보관	효율적인 도정홍보	기타보상금	10,000	0	0.0	10,000	0
정책기획관	직무역량 강화	행사운영비	22,680	0	0.0	26,000	3
예산담당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기타보상금	10,000	0	0.0	10,000	0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국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40,216	0	0.0	411,950	72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도)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00	0	0.0	100,000	50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구축 (국가직접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984,600	0	0.0	926,400	△59
경제소상공과	경제정책개발	사무관리비	70,000	0	0.0	70,000	0
	전통시장 홍보 지원 (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5,000	0	0.0	25,000	0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행사운영비	6,300	0	0.0	6,300	0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6,500	0	0.0	6,500	0
	기본경비(경제소상공과)	공공운영비	1,000	0	0.0	1,000	0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2			2023 예산안 (C)	증감액 (C-A)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일자리 노동 정책과	우수 숙련기술인 육성	기타보상금	48,000	0	0.0	48,000	0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72,550	2,550	3.5	77,550	5
투자입지과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9,000,000	0	0.0	6,000,000	△3,000
	기업유치 업무추진	행사운영비	8,100	0	0.0	9,000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3,070,000	0	0.0	3,819,000	749
국제통상과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35,000	0	0.0	100,000	65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외빈초청여비	25,500	1,888	7.4	50,000	24
	국제 네트워크 구축	사무관리비	5,950	0	0.0	5,950	0
	신북방·중화권 협력강화	민간인 국외여비	10,000	0	0.0	15,000	5
	신남방·아주권 협력강화	민간인 국외여비	40,000	1,370	3.4	40,000	0
	신남방·아주권 협력강화	외빈초청여비	17,000	1,439	8.5	21,000	4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사무관리비	12,750	968	7.6	13,000	0
	통상관련 행사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	0	0.0	10,000	5
미래성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행사관련 시설비	2,500	0	0.0	30,000	27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시설비	212,623	0	0.0	7,600,000	7,387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100,262	3,822	3.8	105,000	5
산업육성과	지역협력혁신성장사업	출연금	275,000	0	0.0	328,000	53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 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의약품/ 진단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출연금	240,000	0	0.0	2,514,000	2,274
에너지과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출연금	150,000	0	0.0	150,000	0

주: 2022. 11. 14.현재

자료: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자료 및 2023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2022년 집행률 10% 이하 부진사업 : 12개 부서, 26개 사업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22년 집행 부진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2			2023 예산안 (C)	증감액 C-A	증감률 (C-A)/A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 계(26건)			6,639,268	21,066	0.3	6,611,807	△27,461	△0.4
자치행정과	유관기관, 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8,075	0	0.0	8,000	△75	△0.9
자치행정과	유관기관, 단체 지원	행사운영비	18,000	0	0.0	18,000	0	0.0
자치행정과	유관기관, 단체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13,500	0	0.0	13,500	0	0.0
자치행정과	도정모니터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1,701	0	0.0	1,800	99	5.8
자치행정과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2,927	0	0.0	3,000	73	2.5
자치행정과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국내여비	1,000	0	0.0	1,000	0	0.0
인사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	자산및 물품취득비	4,000	0	0.0	4,000	0	0.0
인사과	성과관리 운영	연구용역비	25,500	0	0.0	28,000	2,500	9.8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1,680	0	0.0	1,800	120	7.1
균형발전과	균형발전박람회 도 전시관 운영	행사운영비	81,000	0	0.0	85,000	4,000	4.9
공동체정책과	성군관 유도회 단체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	0	0.0	4,000	0	0.0
공동체정책과	주민자치 실현	기타보상금	8,000	0	0.0	8,000	0	0.0
문화유산과	추사서예 창의마을(예산)	자치단체 지원보조	1,560,000	0	0.0	1,800,000	240,000	15.4
문화유산과	사신들의 바다순례길(태안)	자치단체 지원보조	1,800,000	0	0.0	600,000	△1,200,000	△66.7
문화유산과	특별기획전 운영	행사운영비	22,500	0	0.0	30,000	7,500	33.3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자치단체 지원보조	2,700,000	0	0.0	3,600,000	900,000	33.3
관광진흥과	국내 관광객 유치증대	기타보상금	27,000	0	0.0	27,000	0	0.0
관광진흥과	해외관광 홍보마케팅	기타보상금	200,000	19,990	10.0	200,000	0	0.0
관광진흥과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사무관리비	130,000	0	0.0	150,000	20,000	15.4
감사위원회	공직비리 제보 강화	행사운영비	5,962	0	0.0	6,624	662	11.1
감사위원회	공직비리 제보 강화	기타보상금	5,000	0	0.0	5,000	0	0.0
감사위원회	예산낭비 및 부실설계 근절	포상금	2,000	0	0.0	2,000	0	0.0
감사위원회	감사시책개발	행사운영비	3,600	0	0.0	3,600	0	0.0
자치경찰 행정과	자치경찰 감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763	244	8.8	263	△2,500	△90.5
자치경찰 협력과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체계 구축 장비 지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1,540	0	0.0	1,700	160	10.4
충남도서관	독서문화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9,520	832	8.7	9,520	0	0.0

주: 2022. 11. 14. 기준

자료: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자료 및 2023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제작됨

### (3)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22년 예산집행률 0% 부진사업 : 사회복지과 외 7개 부서 20개 사업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22년 집행 부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2			2023 예산안 (C)	증감액 (C-A)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 계(20건)			3,080,464	0	0	3,080,464	△3,160,300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행사운영비	6,000	0	0	12,000	6,000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행사실비 지원금	3,000	0	0	6,000	3,000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복지 구축	기타보상금	20,000	0	0	20,000	0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공기관등 에대 환경 상적위탁 사업비	131,750	0	0	532,000	400,250
보건정책과	보건정책발전 거버넌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300	0	0	15,300	0
보건정책과	공중보건 의사 관리	사무관리비	5,355	0	0	6,000	645
보건정책과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교육	사무관리비	4,675	0	0	4,675	0
보건정책과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5,000	0	0	105,000	0
감염병관리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5,790,000	0	0	2,218,000	△3,572,000
감염병관리과	한센병 환자 진료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295	0	0	3,000	645
건강증진식품과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기타보상금	11,600	0	0	11,600	0
건강증진식품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도)	국유업무비	4,500	0	0	4,500	0
기후환경정책과	탄소중립 도민실천 확산 홍보	사무관리비	70,000	0	0	70,000	0
기후환경정책과	생태여행지 20선 홍보	사무관리비	20,000	0	0	20,000	0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오염배출부과금 교부	징수교부금	38,589	0	0	38,589	0
물관리정책과	수질오염예방 및 방제 훈련	행사운영비	2,700	0	0	2,700	0
물관리정책과	기금사업 관리비	국유업무비	4,000	0	0	4,000	0
물관리정책과	축산악취 개선 추진	사무관리비	2,400	0	0	3,500	1,100
물관리정책과	지하수 보존·관리	행사운영비	3,600	0	0	3,600	0

주: 2022. 11. 14.현재

자료: 지방재정관리시스템(c-호조) 자료 및 2023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 (4)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 2022년 집행률 10% 이하 부진사업

: 농업정책과 등 12개 부서 25개 사업, 2023년도 예산 편성 3,708억 3,514만원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2			2023 예산안 (C)	증감액 (C-A)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 계(25건)			370,835,136	4,075	0.002	400,129,333	29,423,797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컨설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4000	0	0	14,400	0
식량원예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5,000,000	0	0	381,024,000	26,024,000
식량원예과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지원	사무관리비	100,000	0	0	100,000	0
식량원예과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0,000	0	0	540,000	0
식량원예과	친환경농업직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50,000	0	0	2,000,000	50,000
농식품유통과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50,000	0	0	50,000	0
농촌활력과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자치단체자본보조	9,000,000	0	0	10,513,209	1,513,209
산림자원과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재료비	9,060	0	0	4,600	△4,460
산림자원과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민간위탁금	137,800	0	0	137,800	0
산림자원과	실내정원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	0	0	600,000	300,000
축산과	축산물 브랜드 육성	민간행사사업보조	279,072	0	0	279,160	88
축산과	축산물이력관리 지원(도)	민간경상사업보조	22,714	0	0	22,714	0
수산자원과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기타보상금	2,730,000	0	0	3,978,750	1,248,750
농업기술원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0	0	150,000	50,000
농업기술원	기술보급 블랜딩 협력모델	자치단체자본보조	250,000	0	0	500,000	250,000
농업기술원	농형 가공식품 마케팅 기술지원(도)	사무관리비	20,000	690	3.4	20,000	0
농업기술원	농업기계 운영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0	0	30,000	0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 검사 지원	공공운영비	18,000	0	0	18,000	0
동물위생시험소	기본경비(동물위생시험소)	공공운영비	5,500	528	9.6	5,500	0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자산물품취득비	41,990	0	0	40,000	△1,990
산림자원연구소	스마트밤 재배 시범 사업지 조성	기간제근로자보수	5,000	315	6.3	5,000	0
산림자원연구소	산림휴양문화행사 추진	행사관련시설비	16,200	0	0	16,200	0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생명공학연구 및 시험검정	민간경상사업보조	37,800	0	0	35,000	△2,800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업협정지원(자본)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0	2,542	5.3	45,000	△3,000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컨설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4000	0	0	수요조사오류	
식량원예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5,000,000	0	0	국비교부 지연	
식량원예과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지원	사무관리비	100,000	0	0	실적 정산 후 집행	
식량원예과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0,000	0	0	실적 정산 후 집행	
식량원예과	친환경농업직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50,000	0	0	실적 정산 후 집행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2			2023 예산안 (C)	증감액 (C-A)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농식품유통과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50,000	0	0	사업추진 지연	
농촌활력과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자치단체자본보조	9,000,000	0	0	실적 정산 후 집행	
산림자원과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재료비	9,060	0	0	사업추진 지연	
산림자원과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민간위탁금	137,800	0	0	사업추진 지연	
산림자원과	실내정원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	0	0	수요조사오류	
축산과	축산물 브랜드 육성	민간행사사업보조	279,072	0	0	실적 정산 후 집행	
축산과	축산물이력관리 지원(도)	민간경상사업보조	22,714	0	0	실적 정산 후 집행	
수산자원과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기타보상금	2,730,000	0	0	사업추진 지연	
농업기술원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0	0	사업추진 지연	
농업기술원	기술보급 블랜딩 협력모델	자치단체자본보조	250,000	0	0	국비교부 지연	
농업기술원	농기형 가공식품 마케팅 기술지원(도)	사무관리비	20,000	690	3.4	사업추진 지연	
농업기술원	농업기계 운영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0	0	사업추진 지연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 검사 지원	공공운영비	18,000	0	0	연도말 사업	
동물위생시험소	기본경비(동물위생시험소)	공공운영비	5,500	528	9.6	사업추진 지연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자산물품취득비	41,990	0	0	사전 사업단계 지연	
산림자원연구소	스마트밤 재배 시범 사업지 조성	기간제근로자보수	5,000	315	6.3	실적 정산후 집행	
산림자원연구소	산림휴양문화행사 추진	행사관련시설비	16,200	0	0	연도말 사업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생명공학연구 및 시험검정	민간경상사업보조	37,800	0	0	실적 정산후 집행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어업행정지원(자본)	자산및물품취득비	48,000	2,542	5.3	사전 사업단계 지연	

주: 2022. 11. 14.현재

자료: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자료 및 2023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집행부진 사유]

구 분	사 유
사업추진 지연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부진 · 예산미집행으로 인한 연도말 예산집행
실적정산후 집행	· 사업추진이 완료된 후 성과나 실적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연도말 사업	· 사업계획서 상 연도말에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
국비교부지연	·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의 변경이나 교부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수요조사 오류	· 시군 자치단체 및 사업 대상자의 신청이 저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사전 사업단계 지연	· 공동연계 사업으로 상대사업이 완료되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 ex) 연구소 리모델링 공사 완공 후 <b>사무기기를 구입</b>

자료: 예산정책담당관

(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 2022년 예산집행률 10%이하 부진사업 : 7개 부서, 10개 사업

[2022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업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2			2023 예산안 (C)	증감액 (C-A)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계(10건)			1,571,725	22,917	1.5	839,225	△732,500
사회 재난과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실비 지원금	3,600	0	0.0	3,600	0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광역거점센터)	사무관리비	1,000,000	0	0.0	89,000	△911,000
자연 재난과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및 모바일 앱 홍보	사무관리비	13,600	0	0.0	13,600	0
하천과	하천관리실태조사 지원	징수교부금	350,000	22,917	6.5	250,000	△100,000
건축 도시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15,000	0	0.0	15,000	0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	0	0.0	5,000	0
교통 정책과	대중교통시설 관련사업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4,500	0	0.0	358,000	263,500
	지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	징수교부금	51,000	0	0.0	51,000	0
도로철도 항공과	국가교통 DB구축(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7,000	0	0.0	52,000	15,000
종합건설 사업소	건설공사 수행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2,025	0	0.0	2,025	0

주: 2022. 11. 14. 현재

자료: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자료 및 2023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6) 교육청 소관

→ 전년대비 2023년도 증액예산 편성 사업 중 2022년도 예산집행률 30%미만 부진사업 : 교육혁신  
과 외 3개 부서(기관), 4개 사업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업 현황]

(기준일: 2022.10.31.)

(단위: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2			2023 예산안 (C)	증감액 (C-A)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계(4건)		4,772,776	161,391	3.4	10,991,460	3,218,684
교육혁신과	지역기반초등돌봄공동체운영	737,000	47,741	6.5	1,135,906	398,906
체육건강과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설립	3,916,936	82,784	2.1	9,408,264	2,491,328
충무교육원	창의융합인문학기행	106,040	28,752	27.1	345,290	239,250
서천교육지원청	스마트교육지원	12,800	2,114	16.5	102,000	89,200

자료: 2023년도 본예산안

- 충청남도 및 교육청 소관 부서(기관)의 2022년도 예산 집행률(2022. 10. 31.자 현재)이 10% 미만(0% 이거나, 30%미만 등)으로 부진함에도, 2023년도 예산을 전례답습적으로 편성  
: 2023년도 예산규모의 계획성 및 적정성, 집행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 통한 심의 필요

**(7) 충남형 M버스 운영사업**

- [천안, 아산~평택 지제역]구간과 [서울 강남역~평택지제역]구간 운행 버스간 M버스 환승체계 구축 사업
- 2023년도 예산 3억 5,800만원(전년 대비 2억 6,300만원 증액) 편성

[2023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사업명	2022(제2회추경 기준)			2023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 증감액	합계(A)		금액 (B-A)	증감률 (B-A)/A
교통정책과	충남형 M버스 운영	0	95,000	95,000	358,000	263,000	276.8

자료: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당해 사업 국토교통부 주관 노선신설 인가 결정 지연 등으로 2022년 예산집행 지연  
· 경기도 광역교통 노선신설 협의 회신 결과  
: 부동의 통보(순천향대학교 인근 1호선(신창역))  
→ 현재 국토교통부 노선인가 관련 조정심의 결정 지연 등
-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이행 및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과,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필요

[2022년도 충남형 M버스관련 운영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교통정책과	충남형 M버스 개시 행사	행사운영비 (201-03)	20,000	0	20,000	0.0
	충남형 M버스 운영 (유지관리비)	자치단체등이전 (308-01)	95,000	0	95,000	0.0
	충남형 M버스 운영 (차량구입비)	민간자본이전 (402-01)	510,000	0	510,000	0.0

자료: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5. 과도한 예산지원에 의한 예산 낭비

- 개발도상국 소방자동차 지원 시 수리비 및 운송료까지 도에서 지원 → 과도한 지원
-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 사용하지 않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에 우호 증진 및 유대강화를 위해 지원
- 2023년도 예산 1억 7,365만원을 신규로 편성

[2023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2			2023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 증감액	합계 (A)		금액 (B-A)	증감률 (B-A)/A
합계: 2건			0	0	0	173,654	173,654	순증
회계장비과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사무관보비	0	0	0	115,154	115,154	순증
		공공운영비	0	0	0	58,500	58,500	순증

자료: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 내용연수 경과 소방특수차량 : 매각하지 않고 수리비 및 개발도상국 운송비용(1억 7,400만원) 등을 충청남도에서 전액부담하는 사업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운송비 등 : 173,654천원</li> <li>○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운송비 등 : 115,15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임료 : 13대 × 7,328천원 = 95,264천원</li> <li>· 통관료 : 13대 × 1,430천원 = 18,590천원</li> <li>· 보험료 및 말소 비용 등: 13대 × 100천원 = 1,300천원</li> </ul> </li> <li>○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차량 수리비 : 58,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리비(도색, 정비) : 13대 × 4,500천원 = 58,500천원</li> </ul> </li> </ul>	

자료: 소방본부 회계장비과

- 최근 국제경제상황과 어려운 충청남도 재정 상황 등을 고려 필요
  - 소요비용 전액 지원받는 국가 부담
  - 최소한의 소요비용만 충청남도에서 부담
- 불용 소방차량 개발도상국 지원
  - : 충청남도의 재정상황과 타 시·도 지원 사례 참고 필요
  - 불용 소방자동차 매각에 따른 기대수입 포기
  - 소방자동차 지원 수리비 및 운송비 등 전액 지원
- 사업취지 벗어난 과도한 지원
- 도민의 눈높이 부합 여부 검증 필요

## 6. 보조예산의 교부비율 정비 요망

### (1) 도비보조 사업의 사업 성격별 부담비율 설정 등 제도정비 필요

- 충청남도는 도비보조사업의 대상사업, 도비보조율, 경비 종목 등 매년 정하여 시행
  -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 시군에 대한 분야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적용하는 지방보조사업별 도비보조율을 3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2항

[2023년 도비 보조사업별 교부비율(예시)]

구분	사업명	예산액			교부비율	
		합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하천과	하천시설 보수 보강	1,003,000	501,500	501,500	50	50
	용성천 제방길 가로수 정비사업(도민참여)	30,000	9,000	21,000	30	70

자료: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 충남도 15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큰 격차
  - 지방보조사업 교부비율 - 5:5, 3:7로 획일적 산정
    - 시군 재정상황 고려되지 않고 있음
  - 교부비율 : 매년 예산편성시 시·군과의 협상 통해 결정
    - 시군과 갈등 발생, 예산편성상 예측 가능성 떨어짐
- 타시도 사례
  - 서울시외 다수의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재정상태 고려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 정책보조, 30%, 50%, 60%, 80%, 90% 등 사업 성격별로 보조비율 차등적용
    -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2)
  - 서울시 : 기초자치단체 ‘재정력 지수’활용, 보조비율 차등 적용 등
    - 기초자치단체 재정상황 고려, 교부비율 결정과정상 서울시와 자치구간 불필요한 갈등 미발생, 예산편성 예측가능성 제고
- 향후, 충남도 보조금 부담비율 산정시 (국고보조비율 준용 배제)
  - 타 시도 지방보조금 교부비율 산정사례 등 참고, 우리여건에 맞는 합리적 교부기준 마련 필요
  -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 갈등 해결방안
    - : 지방보조금 교부에 도비사업 보조율, 차등보조율 적용사례 활용, 기준 정립 필요
  - ※ 현재 충청남도 : 보조금관리 30%이상 도비보조금 지급 규정

## 7. 유사중복사업 분석

### (1) 출산보육정책과 소관

○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 총 4개 부기사업(175억원)이 부서 내·중앙정부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 나타남

- 유사중복 규모
- : 행복키움수당 지원사업 150억 7,440만원
- : 어린이인성 학습원 운영사업 16억
-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5억 4,653만원
- : 충남아이키움뜰 지원사업 3억 1,500만원

[2023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일반회계 유사·중복사업 현황]

(단위: 개, 천원)

구분	부서 내		중앙정부		합계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합계	3	2,461,534	1	15,074,400	4	17,535,934

자료: 예산정책담당관

#### 1) 부서 내 유사중복 사업

○ 어린이인성 학습원 운영 사업,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충남 아이키움뜰 지원 사업에서 부모자녀프로그램 등에 관한 내용이 중복 편성

→ 사업간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업 : 도내 영유아, 어린이, 부모, 보육교사 대상, 인성 교육 추진, 프로그램 개발 사업[2023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6억 9,500만원 증액된 16억원임(도비 100%)]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충남아이키움뜰 지원사업에도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슬기로운 부모생활, 부모자녀프로그램 운영 계획

(지원대상 중복 우려)

[3개 사업간 유사·중복성 비교]

구분	어린이인성 학습원 운영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충남아이키움뜰 지원사업
소관부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산보육정책과		
총사업비	1,600,000천원	546,534천원	315,000천원
사업 내용	도내 영유아, 어린이, 부모,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인성 교육을 추진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내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만 6개월 ~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야간에 시간단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아이키움뜰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유사 중복	어린이인성 학습원 운영 - 부모·가족·보육교직원 교육 : 22,080천원 -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 41,800천원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 : 56,000천원 -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39,000천원	충남아이키움뜰 운영 - 슬기로운 부모생활 : 18,000천원 - 부모자녀프로그램 : 15,000천원

자료: 2023년도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성

## 2) 중앙정부 유사중복 사업

○ 출산보육정책과의 행복키움수당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시행 - 부모급여 지원 사업, 아동수당 급여지원 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등과 지원대상 중복

- 행복키움수당 지원사업 : 출산장려, 아동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만 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

2023년 예산 전년보다 76억 1,880만원 감액된 150억 7,440만원(도비)

[2023년도 행복키움수당 지원 사업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

사업명	편성목	총사업비	산출근거
행복키움수당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30,148,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키움수당 지원</li> <li>○ 25,124명×100천원×12개월= 30,148,800천원 (도비: 시군비= 50%: 50%)</li> </ul>

자료: 출산보육정책과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지원, 아동수당급여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 현금성 급여 지원

- 부모급여 지원사업 : 2023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편성(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35만원 부모급여 지급)하는 사업
- 아동수당급여 지원사업 : 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급
- 첫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사업 : 2022년 1년 1월 이후 출생 신생아, 1명당 200만원 출산지원금 지원

[보건복지부 현금성 지원 사업]

구분	부모급여 지원	아동수당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소관부서	보건복지부		
2023년 예산안	1조 6,249억원	2조 2,563억원	3,193억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수당 지원 : 126,000,000천원</li> <li>○ 만0세 : 700천원×1~12개월×12,000명 ≙ 100,800,000천원</li> <li>○ 만1세 : 350천원×1~12개월×12,000명 ≙ 25,200,000천원</li> </ul>	만 8세 미만 아동(0 ~ 83개월)에게 월 10만원 지급	'22년 출생아부터 생애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바우처 200만원 지급
비고	2023년 신규사업	계속사업	2022년 신규사업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기후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유사중복사업 분석

○ 기후환경정책과 총 7개 부기사업(89억 3,050만원) : 부서 내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

- 유사·중복의 규모

- :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79억 5,000만원,
-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3억 2,000만원,
-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광역) 3억원,
- : 환경교육도시 운영 2억원,
-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7,000만원
- : 환경교육문화사업 5,000만원,
- :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4,050만원

[2023년도 기후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유사·중복사업 현황]

(단위: 개,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사업 수	예산안
합계	7	3,540,500	7	8,930,500	0	5,390,000

자료: 예산정책담당관

○ 기후환경정책과 :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광역), 환경교육도시 운영, 환경교육문화사업, 찾아가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 환경교육프로그램 등에 관한 내용 중복

→ 사업간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기후환경정책과 사업간 유사·중복성 비교]

(단위: 천원)

구분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광역)	환경교육도시 운영
소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2023년 예산안	7,950,000	320,000	300,000	200,000
유사중복 사업내용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지역환경 현안을 이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주민 환경교육 실시 등	환경교육사업 통합적 지원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 교재 개발,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환경교육 시범마을 운영 등
구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환경교육문화사업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관부서	기후환경정책과			
2023년 예산안	70,000	50,000	40,500	
사업내용	기후변화 교육 및 콘텐츠 개발·보급 지원	환경문제를 소재로 한 예술공연, 전시회, 교육추진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교육 추진	

자료: 2023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제작성

### (3) 농사랑(인터넷쇼핑몰)

-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사업 : 도내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통한 판로 확대 → 농가소득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모 위하여 -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 농사랑 쇼핑몰 운영, 품질관리 및 홍보·관측 활동 등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지원 사업
- 쇼핑몰 홍보·마케팅 비용 사업에 편성된 2023년 예산(4억 8,032만원) 일부 감액조정
  - 해당 예산의 농사랑 쇼핑몰 운영상 발생하는 낙전수입으로 충당 방안 검토필요
  - 농사랑 쇼핑몰 → 충청남도가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
    - : 인터넷 쇼핑몰 내 발생매출 -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PG사) 통해 해당 농가로 지급, 비용지불 과정에서 낙전수입 발생
    - 낙전수입 : 충남경제진흥원으로 귀속
      - : 낙전수입규모 4년간 26.5배 증가(2018년 376만원 → 2022년 10월 기준 9,997만원)
      - 충남경제진흥원 : 2021년까지 낙전수입으로 관리자페이지 유지보수관리, 농사랑 SSL 보안서버 연장비용, 광고비, 부가세 등 집행
        - : 2022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지원계획(2022년 1월) - 홍보 및 관측물 비용으로 집행
      - 낙전수입 : 매출액 증가에 따라 증대 예상
      - 쇼핑몰 홍보·마케팅 비용 사업 예산(2023년 4억 8,032만원) 단계적 감액조정

[2018~2022년 농사랑 운영에 따른 낙전수입 및 처리현황]

(단위: 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10.
낙전수입	3,768,418	33,765,504	26,527,895	92,340,587	99,976,236

자료: 농식품유통과, 충남경제진흥원

#### ○ 인터넷 쇼핑몰 운영상 발생한 낙전수입

: “예산총계주의원칙”과 “수입금의 직접사용금지원칙”에 따라

낙전수입 → 충청남도 세입예산 편성 및 세입처리

쇼핑몰 운영관련 홍보비 등 부수적 추가 지출 → 세출예산(대행사업비) 편성 및 집행 필요

※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지방회계법 제25조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원칙” 위배

예산투자의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성 제고 등 적정 예산관리 노력 필요

#### (4) 교육청 AI 관련 사업

○ 최근 4차산업혁명관련 미래교육 중요성 대두

→ 스마트 및 AI(인공지능) 교육 핵심내용으로 급부상

: 전국 주요 교육감 공약사항

○ 2023년도 스마트 및 AI 관련 시설·운영사업 2,576억 2,666만원 편성

(전년 대비 1,386억 4,365만원이 증액)

○ 스마트 및 AI관련사업

: 각종 교구구입, 행사 개최(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연수 지원(교원, 마을교사), 체험 교육(학생 대상), 학교운영비 지원(전출금), 교육 공간 확보 및 개선 등 주요내용

· 각종 교육프로그램운영 및 연수 지원, 학교운영비 지원의 경우

: AI·스마트 교육에 대한 자율성 보장 → 각 기관 및 지역 특성에 맞춰 운영

· 그린스마트스쿨 및 학교공간혁신 사업 주관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AI교육체험센터구축 사업 : 미래인재과 주관

각 부서 실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투자 사업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 스마트 교육 가능한 미래학교로 전환 사업

: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 개축 또는 리모델링

· ‘학교공간혁신’ 사업(감성꿈틀)

: 미래교육에 대응,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구성 사업

공모 통해 사업대상 선정, 영역단위 공간 재구조화 실시

→ 하나의 공간에 다양한 활동 가능

※ 학생 복합커뮤니티(카페, 독서, 스크린영상 시청), 인공지능융합교육 공간(가변형 교실, AI창의 융합 정보실 등), 예술활동 공간(미술, 음악, 문학, 소공연, 갤러리, 열람실 등)

○ AI 교육 및 스마트교육 관련 예산의 중복투자 우려

· ‘그린스마트스쿨·학교공간혁신·AI교육체험센터구축’ 3개 사업

: 미래 교육 시설투자 사업

: 각 사업 목적 다르나, 가상기기(AR·VR) 등 교육기자재 포함한 전용 활동실, AI 코딩 교육 전

문 공간, AI·SW창의융합교육 공간 등의 교육환경 조성 등 유사성

→ 예산의 중복투자 발생 우려

· 연구정보원 추진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운영' 사업

: AI·SW 교원 역량강화 연수, AI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AI·SW 학생 체험교육 운영

→ 시군 'AI교육체험센터구축' 사업과 사업내용 일부 중첩 우려

⇒ 소관 부서간 소통 - 중복투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8. 사업의 효과성 분석 필요 사업

### (1) 우수 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 사업 내용 변경

→ 당초 사업 취지의 달성 어려움, 당초 전체 여성 농업인에게 부여하던 혜택을 극소수에 대해서만 혜택 부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선발기준 등 사업효과성 제고 노력 필요

○ 우수 농업인 육성 역량강화 사업

: 농어촌발전상 수상자 대상, 해외 선진농업 견학기회 제공 사업

※ 2023년 예산, 민간인국외여비(301-06)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 우수 여성농업인 60명 대상 해외(유럽) 선진농업 견학 기회 제공 사업

※ 2023년 예산 민간국외여비(301-06) 2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

○ 민간인 국외여비는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가의 국외여비 집행에 제한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우수 농업인 육성 역량강화 사업,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 필요성, 사업 내용, 예산편성(통계목) 적정성검토 필요

· 민간인 국외여비(301-06) :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로 규정

· 농어촌발전상 수상자와 우수 여성농업인은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상적인 전문가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업추진의 목적과 취지 및 예산집행 효과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 검토 필요

## (2) 교육청 AI 관련 사업

○ AI 시설투자 분산화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방안 마련 및 교육의 집적화 필요

· 시군 AI교육체험센터 사업

\* 장점 : 학교의 유휴 교실 이용 구축,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미래교육 시설에 대한 지역별 접근성 향상, 공간 재활용

\* 단점 : 특정 학교의 유휴 교실에 AI교육체험센터 구축시

→ 다른 학교학생 방문 시 해당 학교의 학생 교육활동에 영향 미칠 수 있음

→ 학교 간 이동 시 다수 인원 이동으로 인한 불편

· 유사 사업 : 각 시군의 교육지원청별 운영는 상상이룸공작소

2023년 사업비 5,300만원 중 39.6%인 2,100만원 차량임차 예산

- AI교육체험센터 역시 비슷하게 운영 예상

· 시군별 AI교육체험센터 통해, 지역별 거점 AI교육 실현 노력

- 기존 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또는 과학교육원의 기반시설 적극 활용 등

⇒ 다양한 양질의 체험 가능 : 교육 집적화 노력 필요

## (3) 암행순찰차량 구입 적정성 검토

○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예산 암행순찰차량 2대 구입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

· 자치경찰위원회 구입계획 : 암행순찰차(2대, G70 - 기존 차량도 G70)

· 암행순찰 이용 차량 매입 필요성 검토

· 대당 단가 4,700만원 고가 차량(G70)구입 : 도민의 눈높이 부합 여부 검토 필요

→ 차종, 차량번호 등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암행순찰 기능 수행에 효과적

→ 암행순찰에 이용할 차량의 사용 방법(취득, 임차 등) 및 차종의 다양화 등 필요

· 단일 차종의 암행순찰차

→ 암행순찰 차량 임차방법 검토, 차종 다양화 등

⇒ 차량 취득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 적정 자산취득 예산 운용 필요

## 9. 교육재정의 향후 건전재정 운용 대응 방안 마련 요망

### (1) 경직성 지출 확대 및 세입 감소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대응 필요

- 2023년도 교육청 예산의 일반 교육사업 중 인건비 예산  
: 721억 2,794만원 편성(전년 대비 117억 698만원 증액)

[23년 본예산 일반 교육사업 중 인건비 포함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소관	사업명	2022			2023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 증감액	합계(A)		금액 (B-A)	증감률 (B-A)/A
합 계		54,058,726	6,362,235	60,420,961	72,127,944	11,706,983	19.4
교육 과정과	교과교실운영	115,200	0	115,200	116,000	800	0.7
	온채움선생님지원 (특교)	0	4,536,000	4,536,000	7,871,500	3,335,500	73.5
	유아돌봄사업운영	1,862,400	570,000	2,432,400	2,739,600	307,200	12.6
	방과후과정운영 전담교사	18,381,000	0	18,381,000	23,720,000	5,339,000	29.0
	사립유치원행정 운영지원	0	0	0	1,740,947	1,740,947	순증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10,438,800	414,000	10,852,800	11,489,280	636,480	5.9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1,490,200	65,620	1,555,820	751,700	△804,120	△51.7
	특수교육방과후학교 지원(특교)	1,908,100	401,800	2,309,900	2,826,500	516,600	22.4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폭력담당보조인력 인건비지원	650,000	0	650,000	950,000	300,000	46.2
	학교폭력대응 전문인력운영	999,020	0	999,020	1,029,601	30,581	3.1
미래 인재과	영어전담인력 인건비	59,685	0	59,685	60,855	1,170	2.0
	원어민영어 보조교사운영	5,891,000	0	5,891,000	6,028,000	137,000	2.3
미래 인재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운영	3,750,293	0	3,750,293	3,655,953	△94,340	△2.5
	중국어원어민 보조교사운영	250,800	△57,000	250,800	213,400	19,600	10.1
	취업지원센터운영 (특교)	41,924	0	41,924	44,010	2,086	5.0
체육 건강과	초등학교스포츠팀강사 운영(국고)	4,910,021	0	4,910,021	4,961,553	51,532	1.0
	중학교스포츠팀강사 인건비	1,050,000	336,000	1,386,000	1,400,000	14,000	1.0
	토요스포츠팀강사 인건비	900,000	0	900,000	900,000	0	0.0
	흡연예방전담인력 운영(국고)	33,219	2,024	35,243	36,471	1,228	3.5
	과대학교보건교사 추가인력지원	1,190,104	93,791	1,283,895	1,330,311	46,416	3.6
	체육코치운영	136,960	0	136,960	262,263	125,303	91.5

주1. 총사업비가 아닌 순수 인건비 예산만 목록 추출(봉사위촉직 등 관련 예산은 제외)

자료: 2023년 본예산안

○ 교원·전문직·지방행정직·계약제교원·근로자 인건비 외 별도 직종

: 세출 관별 정책사업상 ‘교수학습활동지원’, ‘평생교육’에도 인건비 예산 편성

※ 2023년 본예산(안)의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예산 464,826,449천원 중 15.5%인 72,127,944천원이 인건비, 이외 기관(단위학교 등) 전출금 사업 내에 다수 포함

○ 향후 교육청 재정여건 : 국가 및 지방재정 모두 부정적 요인 많음

· 세입 감소 우려 커지고 있는 상황

·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 경직성경비 및 경직성 재량지출예산의 적절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교육비특별회계, 내국세 20.79% 세입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본예산(세입) 기준 : 최근 3년간(‘21~’23) 평균 의존재원 비율 → 전체 예산의 98.7%

[최근 3년간 세입예산 편성 현황(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안)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합 계	3,554,800,486	100.0	4,234,912,000	100.0	4,944,266,202	100.0
1. 이전수입	3,507,523,281	98.7	4,184,858,025	98.8	4,881,311,967	98.7
중양정부이전	3,064,899,679	86.2	3,704,216,392	87.5	4,388,003,576	88.7
지방자치단체이전	440,818,008	12.4	478,953,369	11.3	491,797,127	9.9
기타이전	1,805,594	0.1	1,688,264	0.0	1,511,264	0.0
2. 자체수입	5,477,205	0.2	4,858,035	0.1	8,025,785	0.2
교수학습활동	29,600	0.0	633,554	0.0	803,342	0.0
행정활동	1,125,213	0.0	934,588	0.0	1,202,261	0.0
자산	351,087	0.0	368,841	0.0	399,302	0.0
이자	3,916,617	0.1	2,744,776	0.1	5,463,246	0.1
기타	54,688	0.0	176,276	0.0	157,634	0.0
3. 기타	41,800,000	1.2	45,195,940	1.1	54,928,450	1.1
전년도이월금	41,800,000	1.2	40,000,000	0.9	50,000,000	1.0
금융자산회수	-	0.0	5,195,940	0.1	4,928,450	0.1

자료: 2021년 본예산서, 2022년 본예산서, 2023년 본예산안

· 세출 정책사업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및 인적자원운용, 학교재정지원관리(학교기본운영비), 기관운영 등

→ 고정지출 성격 예산이 대부분

→ 경직성 재량지출 : 교육복지 및 보건의급식 사업 제외시

⇒ 일반 교육사업 예산 약 9%정도에 불과

-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국세 및 지방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
-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율은 감소, 인건비 총액은 꾸준한 증가세
- 기본운영비 성격(학교재정지원관리, 기관운영 등) 예산 지속적 증가
- 인구감소 및 경제 여건 악화 등 → 국세 및 지방세수 감소시  
: 사업비 조정 어려운 경직성경비 및 복지성격 사업으로 기 추진 교육사업에 지장 발생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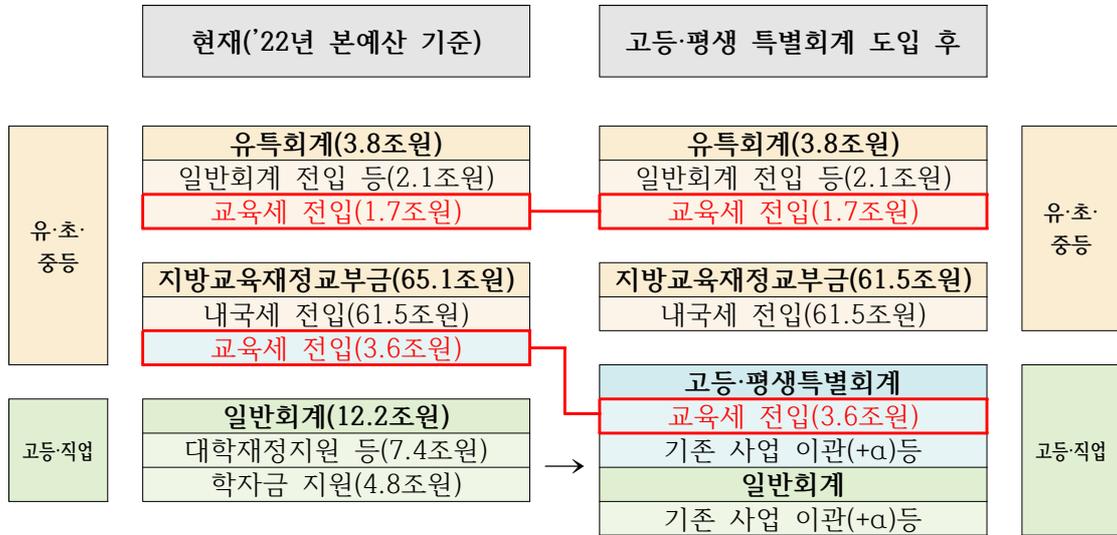
[최근 3년간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본예산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2021		2022		2023(안)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합 계	3,554,800,486	100.0	4,234,912,000	100.0	4,944,266,202	100.0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1,438,128,779	40.5	1,949,860,279	46.0	2,495,890,799	50.5
인적자원 운영	35,411,618	1.0	33,989,406	0.8	36,373,212	0.7
교수학습활동지원	233,387,035	6.6	333,851,102	7.9	464,826,449	9.4
교육복지	255,542,239	7.2	270,932,247	6.4	278,380,631	5.6
보건급식	22,580,429	0.6	65,301,682	1.5	65,916,840	1.3
학교재정지원관리	646,824,525	18.2	653,177,080	15.4	830,399,076	16.8
학교시설여건개선	244,382,933	6.9	592,608,762	14.0	819,994,591	16.6
2. 평생직업교육	7,961,295	0.2	9,168,223	0.2	9,791,268	0.2
평생교육	7,961,295	0.2	9,168,223	0.2	9,791,268	0.2
3. 교육일반	123,041,738	3.5	150,429,163	3.6	153,838,823	3.1
교육행정일반	41,568,283	1.2	63,360,682	1.5	59,237,983	1.2
기관운영	47,011,135	1.3	63,616,356	1.5	71,432,815	1.4
재무활동	34,462,320	1.0	23,452,125	0.6	23,168,025	0.5
4. 예비비	16,541,914	0.5	19,778,671	0.5	25,000,000	0.5
예비비및기타	16,541,914	0.5	19,778,671	0.5	25,000,000	0.5
5. 인건비	1,969,126,760	55.4	2,105,675,664	49.7	2,259,745,312	45.7
인건비	1,969,126,760	55.4	2,105,675,664	49.7	2,259,745,312	45.7

자료: 2021년 본예산서, 2022년 본예산서, 2023년 본예산안

- 전국적 학생 수 감소 추세 근거  
: 기획재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20.79%) 연동구조 개편 추진 움직임
- 최근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 증가  
: 기존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를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투자 의견  
→ 국회 ‘고등·평생교육지원회계특별법 제정안’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변경 개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유특법), 한시법 2022.12.31.에 종료  
 일몰기한 미연장시,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유아 놀이과정 시행 상황 발생  
 → 추가 재정 소요 발생 우려
- 유특법 연장 시행 하더라도, 추후 동일 문제 발생 가능  
 → 장기적 관점 위험 대처 필요
- '21년 경상적 지출 비율은 충남교육청의 경우 65.38%로 전국 평균 67.47%, 도지역 평균 67.56% 대비 다소 낮은 편이며 전년도 대비 개선된 수치임

[최근 5년간 경상적 지출 비율 교육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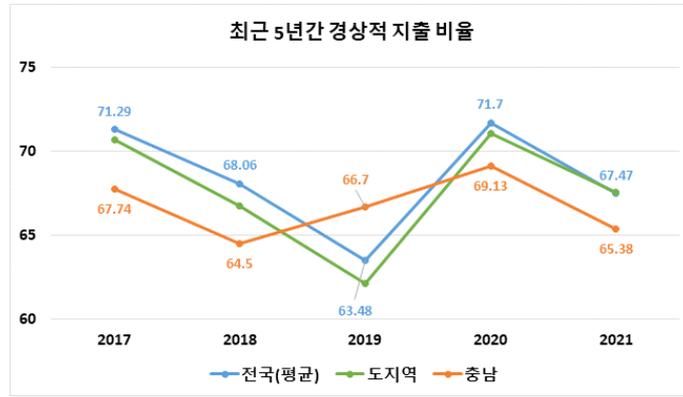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평균)	71.29	68.06	63.48	71.70	67.47
시지역	72.19	70.11	65.64	72.67	67.33
도지역	70.69	66.75	62.13	71.07	67.56
경기	73.45	67.97	63.93	74.28	68.84
강원	72.53	70.07	60.80	71.59	65.21
충북	71.50	68.75	62.71	73.06	70.23
<b>충남</b>	67.74	64.50	66.70	69.13	65.38
전북	73.34	67.15	62.89	66.78	65.57
전남	69.59	65.05	62.07	70.29	67.06
경북	61.26	60.10	52.96	61.20	63.29
경남	72.23	69.31	63.35	73.28	70.53
제주	65.01	63.25	56.31	71.68	67.4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분석결과

· 전국 교육청 경상적 지출 비율

: 세입 규모에 따라 결정, 충남교육청 2019년 제외 - 세입 규모에 따라 경상적 지출 비율 결정



- 경상적 지출 : 인건비 가장 큰 비중 차지
  - : 인건비 증가 요인 계속 발생 → 인력의 체계적 운용 및 관리 노력 필요
- 교직원 등 인건비 외 각 부서 사업별 다양한 직종의 인건비 추가 편성실정
  - : 해당 인건비 증가 장기적 교육사업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도록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향후 저출산, 고령화 문제 :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급감
  - 국세 및 지방세 세수여건 악화예상 →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축소
  - 단발성 복지 성격 사업 및 보충적 인력 등 인건비성 사업 지양
  - ⇒ 현재 추진 중 사업의 안정 도모 등의 재정운용 기조 전환 필요

## 10. 교육비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용 필요

### (1)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과도 편성 문제 : 제도 취지에 부합한 건전재정 운용 필요

- 지방회계법 제19조(보조금 등 사용잔액), 지방재정법 제50조(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제외한 금액
  - : 2022년도 결산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
  - 2023년 본예산안에 편성
- 2023년도 예산 500억원(전년 대비 69억 3,501만원이 증액) 편성

[2023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 증감액	합계(A)		금액 (B-A)	증감률 (B-A)/A
사업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40,000,000	3,065,000	43,065,000	50,000,000	6,935,000	16.1

자료: 2023년 본예산안

#### ○ 순세계잉여금 과다 계상

- 교육청은 당초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예산집행잔액 등 500억원 편성 → 세출예산 500억원 과다 계상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지방회계법」 제19조)
-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
  - : 예산의 원칙 중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 :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예산의 다음연도 이월 등은 예산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안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
  - 순세계잉여금 -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전년도 결산 확정 이후에 편성 바람직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교육청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
  - 본예산 기준 연평균 423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
  - 2020회계연도 본예산에 500억원 순세계잉여금 편성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입 감액 조정
  - 재정운용상 위험(세출예산의 집행제한 등) 노출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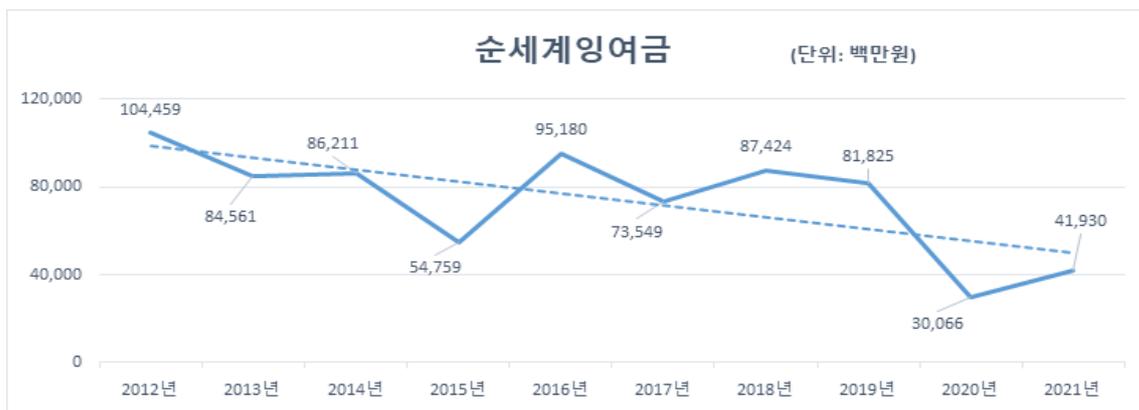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반영내역]

(단위: 천원)

순세계잉여금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본예산 편성분 (A)	30,000,000	50,000,000	41,800,000	40,000,000	50,000,000	42,360,000
추경 편성분 (B)	51,825,334	△19,934,419	129,931	3,064,983	-	-
조정후 예산액 (C=A+B)	81,825,334	30,065,581	41,929,931	43,064,983	-	-

자료: 최근 5년간 예산서 및 결산서

[최근 10년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변동 추이]



- 충남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지난 10년간 지속적 감소세
-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 운영 등 자체 노력의 정도 산정 결과에 따라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비율’ 도 항목에 포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2020.10.20.))
-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비율(전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비율) 0.9 이상, 1.1 이하 기준 충족시

시도교육청에서는 1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받을 수 있음

· 순세계잉여금 비율 산정방식에 의하면

→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과 전전년도 결산액 간 금액 차이가 적어야 조건 만족가능

→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미편성 또는 적게 편성

: 인센티브 예산 받지 못함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반영내역]

(단위: 천원, %)

순세계잉여금	2018	2019	2020	2021	2022
본예산	30,000,000	30,000,000	50,000,000	41,800,000	40,000,000
결산	87,424,458	81,825,334	30,065,581	41,929,931	43,064,983
예산 편성비율 (교육부 지표)	0.34	0.37	1.66	1.00	0.93
지표 달성 여부	X	X	X	○	○

자료: 2017~2022 예산서 및 결산서

·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일(2020.10.20.) 고려, 실적이 반영되는 지표값은 2022년도부터 해당,

: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지표 달성위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대부분 편성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위배

: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 어렵게 할 소지

→ 산정 방식의 변경 건의 등 제도개선 노력 요망

## 11. 포괄예산 편성의 문제점 개선필요

### (1) 충청남도

####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 2023년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46억원 편성,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

- 사업목적 : 지역 수요와 여건 고려 도시 내 특정 구역에 지역 특화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실증 통해 타 지자체 확산 기반 마련
- 충남 도내 15개 시군 중 국토교통부 공모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계획
- 사업량 : 중소도시(강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 ○ 청사·관사 시설비

: 2023년도 청사·관사 시설비 예산 5억 4,000만원 편성했으나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

- 청사·관사 시설 보수공사 등 환경개선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조정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도청사 및 관사 보수공사의 구체적 내용이 없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조정 등의 경우도 정확한 산출 기초 산출 없이 포괄예산으로 편성

(단위 : 천원)

구분	산출액	비고
산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사·관사 시설비 : 540,000천원</li> <li>○ 청사·관사 내·외부 시설 보강공사 : 250,000천원</li> <li>○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정(건축, 전기, 소방 등) : 50,000천원</li> <li>○ 조경시설물 보수 : 40,000천원</li> <li>○ 행복 나눔의 숲 보안등, cctv 등 설치 : 100,000천원</li> <li>○ 비서실, 접견실 리모델링 : 100,000천원</li> </ul>	
총사업비	540,000천원 (도비 540,000)	

○ 당면과제 수행자문(POOL) : 2023년도 예산 1,700만원 편성

○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POOL) : 2023년도 예산 1억 5,000만원 편성

○ 정책자문위 특별위원회 운영(POOL) : 2023년도 예산 688만원 편성

○ 도정 현안사업 추진(POOL) : 2023년도 예산 17억 4,245만원 편성

- 사무관리비 9억 3,925만원 · 행사운영비 2억 8,350만원 · 국내여비 1억 9,507만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9,222만원 · 행사실비지원금 3,240만원 등

## (2) 교육청

### ○ 충남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운영' 사업

- 2023년도 예산 전년 대비 2억 9,908만원 증액 3억 492만원 편성  
: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세부 연구용역명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
- '포괄예산 금지 원칙'에 위배

※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유의사항 통보·안내(교육부, 2022. 9. 7.)

※ 2023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p. 31)

라. 세출예산 사업구분

'법령의 근거 없이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이 없는 포괄적 총액(재량)사업비 편성 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이 없는 포괄적 총액(재량)사업비 편성 금지' 강조

## (3) 포괄예산 개선 방안

- 도 및 교육청 예산 중 세부사용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점검 및 최소화 필요

### ○ 포괄예산 운용 개선

장점 :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신속적 대응하기 위한 용역 수행 가능 장점

단점 :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및 예산집행 낭비 소지

⇒ 예산편성 시, 포괄예산 금지의 원칙 준수 요망

## 2023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토론회 분과별 발제문

### ① 재정운용·경제산업 분과

● 발제자 : 김대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연구위원)

진 혁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

### ② 농수산해양 분과

● 발제자 : 김 호 (단국대학교 교수)

박세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실장)

### ③ 교육 분과

● 발제자 :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

이원상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 분과 토론

## ① 재정운용·경제산업

**[발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 방안  
충청남도 세수추계 환경 진단과 시사점

**김대중**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연구위원)

민선8기 도정목표와 예산반영에 대한 검토의견  
정부 공모사업 지방비 매칭 현황과 성과 관리방안

**진 혁**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



##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 방안

김대중(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연구위원)

### I. 개요

#### □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의 중요성

- 효율적인 재정사업의 추진과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사업의 내적·외적 타당성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부담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됨
  - 2014년 아시안게임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험사례로 공모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사전검토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 도입
-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사전적 통제를 지양하고, 사업계획 및 추진 단계에서는 최대한의 재량을 부여하되 사후적 평가와 환류(Feed-back)을 통해 보상 및 개선을 강화하는 추세가 일반적임

#### □ 사전검토의 대상과 쟁점

- 사업의 내적·외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관점에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함
- 또한 예산 투입에 따른 시·군 또는 광역지자체의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검토의 대상임
- 이에 예산의 관점에서 사전검토와 관련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개선방향은 어떠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사후관리의 대상과 쟁점

- 지방재정법상 사후통제를 통한 성과관리의 대표적인 수단인 재정사업평가 제도가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의 대상, 절차, 수행방법 등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II. 시·군 공모사업의 합리적인 도비 매칭을 위한 사전검토 방안

### □ 중앙정부 공모사업과 지방정부의 사업비 분담 현황

- 저출생·고령화라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와 “지역소멸”로 대변되는 비수도권 지역사회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결국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로 귀결됨
-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지방정부의 재량예산은 불확실성이 높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에 시·군에서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의 추진을 통해 공공 투자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대체로 이러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중앙정부가 가장 큰 비중(총사업비의 50~80%)으로 비용을 분담하나,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해당 시·군 및 광역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매칭함
  - 가장 일반적인 총사업비 분담의 형태는 중앙정부 70%, 해당 시·군 20%, 소관 광역지자체 10%로 볼 수 있음

### □ 문제점

-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시·군이 도청 관할부서와의 협의 없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先 지원하고, 선정 후 도청 관할부서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매칭 예산(총사업비의 10 ~ 20%)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이 경우 도청 관할부서에서는 예상치 못한 행정처리·예산 소요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매칭예산이 발생함에도 시·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예산 분담 수준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함
  - 광역지자체의 분담 수준은 대체로 공모사업 총사업비의 10~20% 수준으로 道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분담의 수준에 해당하는 시행주체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은 대체로 그 취지와 성격상 최종수요가 시·군에 귀결되더라도 도청 관할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하에 수행되는 것이 보다 사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현재 道 입장에서는 예산지원만 수행하여 개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또는 모니터링·관리가 어려움

## □ 現 제도상 시·군 추진 공모사업의 道 사전검토 체계

-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공모사업 등의 추진시 사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27조의6)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외 공모사업 등의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점에서 사업 추진의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임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또는 총사업비 100억원, 지방재정 부담 5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등이 대상임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2조(평가대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영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 관련 지침 제7조제5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개별적으로 재정 부담분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나, 사업 내용·추진 주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 A부가 공모한 B사업에 C도와 D군이 공동으로 국비 60억원, C도 30억원, D군 30억원(총사업비 120억원, 지방재정 부담 60억원)의 사업을 계획하여 응모할 경우

- C도와 D군 모두 개별적으로 C도와 D군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응모함이 원칙임
- 다만 사업 내용·추진 주체를 고려하여 C도의 통합 평가도 가능함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 ⑤**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주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하나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사할 수 있다.

- 다만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사업의 내적·외적 타당성 및 합리성은 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재정에 미치는 영향만이 평가 대상임
-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평가는 사업기간별 재원 및 사후 소요예산액으로 구분되며, 순계 기준 자치단체 예산 대비 사업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자체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의 연차별 비중으로 평가함
- 평가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됨
  - (적정) 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재원 조달 계획이 적정하며, 사후 소요예산액이 부담 가능한 경우
  - (조건부 추진) 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재원 조달 대책 등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
  - (재검토) 재원 규모, 재원 조달 계획, 사후 소요예산액에 대한 재원 대책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부적정) 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후 소요예산액에 대한 부담이 막대하여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는 경우

## □ 現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의 시사점

- 시·군의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광역지자체가 재정건전성의 관점에서 사전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써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운영중임
- 연도별 재정영향평가의 기준으로 자치단체 예산 대비 사업비,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자체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가 제시되나, 이러한 기준에서는 개별 사업의 道 매칭 예산의 영향은 대체로 매우 작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음
  - 시·군에 매칭되는 개별 사업의 지원 예산은 대체로 10 ~ 50억원 수준인데 반해 순계 기준 道의 자치단체 예산, 정책사업 예산, 자체사업 예산은 조 단위임
  - 따라서 이러한 3개 기준에서는 개별 사업단위의 비교시,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이외에는 道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국제경기공모 이외에는 현재의 사전검토 제도상 시·군 추진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원의 내적 타당성에 대해 道 집행부가 사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움

## □ 現 제도의 활용방안 및 향후 제도개선

- 道 매칭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시·군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지원 전에 수행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시·군의 사업부서 실무자 뿐만 아니라 예산부서 담당자도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경우가 빈번함
  - 특히 道 매칭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경우 관련 지침 제7조제5항에 따라 시·군 뿐만 아니라 道에서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고 추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道 매칭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시·군의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道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道 매칭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시·군 추진 공모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내적·외적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도입 검토할 수 있음
  - 현재의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재원 규모 및 재원 조달 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사후 소요예산액의 적정성만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사업의 내적·외적 타당성인 경제적 타당성 및 수익성 평가 등은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심사 범위가 아님

- 이러한 현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道 매칭 재정지원에 따라 예산 분담 수준에 부합하는 시행주체로서의 권한 행사를 위해 사업의 내적·외적 타당성을 道 관련 부서가 사전 검토하는 체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이 경우, 현 제도상 필수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한 의뢰가 道 예산담당관실에 접수될 경우, 道 해당 부서에 사전검토를 통보하는 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시·군 공모사업의 추진에 따른 道 매칭 재정부담의 수준이 현재 과도한 수준에 미칠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필요한 경우 시·군 추진 공모사업의 도비 매칭 한도(ceiling)을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매우 강력한 통제 기제로서, 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최근 3 ~ 5년간의 道 매칭 재정부담 규모, 증가율 등의 분석을 통한 재정부담 수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해당 제도 도입시, 시·군 추진 공모사업의 道 지방비 매칭은 해당 한도 내에서만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경과정 등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 기대효과

- 시·군 추진 공모사업에 수반되는 道 매칭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검토 체계인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수행을 통해 재정운용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할 수 있음
- 시·군 공모사업에 수반되는 道 매칭 재정부담 수준에 부합하는 시행주체로서의 권한 행사를 통해 개별 사업의 추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 Ⅲ. 충청남도 재정사업평가 운영현황 검토

#### □ 사후관리로서의 재정사업평가

- 공공부문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추진에 있어 경직적인 사전적 통제를 지양하고 사업추진시에 가급적 높은 수준의 재량을 부여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보상 및 환류(feed-back) 체계를 강화함이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추세임
- 이러한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취지에 부합하여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사후적 성과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근거한 재정사업평가임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 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와 관련한 타 제도와 비교시 재정사업평가의 중요성은 관련 예규에 근거, 예산의 삭감 또는 일몰 등과 같은 조치가 명문화된 제도라는 점임
  - 평가 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0% 이상의 예산삭감(미흡), 및 일몰(매우 미흡)을 적용함이 원칙임
- 평가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광역지자체 5억원 이상, 기초지자체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이며,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함
  - 타 법령에 의해 평가를 수행하거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관련 예규에 따라 자체평가 기반으로 수행하며, 수행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평가 지표를 변경하거나 외부평가단을 운영하여 수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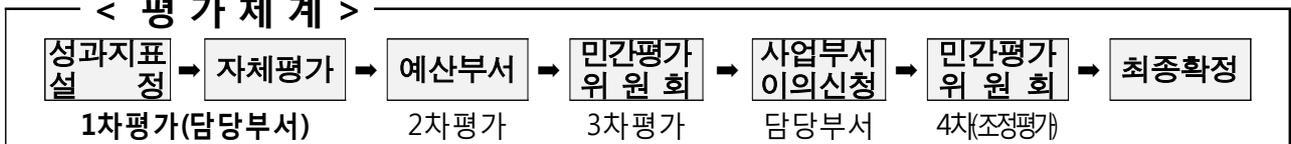
- 행정안전부의 관련 예규상 재정사업평가의 지표는 계획 - 관리 - 성과·환류의 3단계로 구분하여 11개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

단계	평가항목	평 가지 표
계획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의 적정성(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 의 환류(50)

#### □ 충청남도 재정사업평가의 현황

- 충청남도는 위 예규의 평가지표 및 기준을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준용하여 17개 지표를 적용함([별첨] 참조)
- 평가절차는 실국 단위 자체평가 → 예산부서 메타평가 → 민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평가 → 사업부서 의견조회 →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결과가 도출됨

#### < 평가 체계 >



- 2015년 시행 이후 평가대상 사업 수는 최소 48개(2015년), 최대 252개(2017년)임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사업 수(건)	48	120	252	249	186	182	141

- 2022년 평가 대상 사업(2021년 수행 사업)은 총 128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24건(708억원)과 행사성 사업 104건(31억원)으로 구성됨

○ 2022년 평가 결과 미흡 미만 사업이 34개(26.5%)로 나타났고, 이 중 투자사업은 4건, 행사성사업은 30건으로 구성되며, 2023년 본 예산에 평가결과 반영(16억원)

구 분	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총 계	128 (100%)	6 (4.7%)	17 (13.3%)	71 (55.5%)	29 (22.7%)	5 (3.8%)
투자사업	24 (100%)	1 (4.2%)	5 (20.8%)	14 (58.3%)	3 (12.5%)	1 (4.2%)
행사성사업	104 (100%)	5 (4.8%)	12 (11.5%)	57 (54.8)	26 (25.1%)	4 (3.8%)

### □ 현 제도의 문제점

- 투자사업의 경우 평가대상 사업의 수가 매우 작아 평가의 실효성이 낮음
  - 예규상 투자사업의 대상은 국비 등이 제외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임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상 2021년 충청남도의 세부사업은 총 3,059건(약 10조원)이며, 이 중 국비 등이 제외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은 499건(약 4조원)임
  - 이에 반해 2021년 평가대상 투자사업은 24건(708억원)으로 건수 기준 5%미만, 금액 기준 2%미만에 불과하여 절대 다수의 재정투자사업이 성과관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사후적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물론 관련 예규에 따라 평가 실익이 낮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은 평가제외가 가능하나 건수 기준 95%이상, 금액 기준 98%이상의 사업이 사후적 성과관리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다는 점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분야	전체			평가대상(안) <sup>1)</sup>		
	사업 수 (건)	예산 (억원)	집행률 (%)	사업 수 (건)	예산 (억원)	집행률 (%)
공공질서및안전	257	6,692	84	43	4,284	93
과학기술	17	156	100	3	62	100
교육	10	4,110	100	5	4,103	100
교통및물류	100	3,343	84	19	1,014	94
국토및지역개발	133	5,557	79	31	1,622	99
기타	166	5,195	99	23	2,691	98
농림해양수산	870	13,934	96	103	3,286	91
문화및관광	258	4,020	93	56	1,537	95
보건	255	2,301	95	17	263	75
사회복지	407	34,654	99	59	4,188	9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10	4,858	66	57	2,878	50
예비비	3	78	0	1	75	0
일반공공행정	191	13,291	89	61	13,078	89
환경	182	5,795	95	21	1,469	99
총합계	3,059	103,981	93	499	40,552	90

- 평가 대상 사업과 평가 제외 사업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함
  - 다음 [표]에서는 2021년 충청남도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국비제외)의 세부사업 중 사업명에 “보수”가 포함된 사업을 평가대상 여부로 구분하여 나타내었음
  - 이 중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전통사찰 보수” 및 “위험교량 유지보수” 등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의무사업으로 간주되어 평가 제외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체육시설 및 보수보강 및 기타 사업의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된 시설물 보수공사와의 유의미한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연번	세부사업명	계
평가 대상	정보시스템유지보수	3,560
	위험교량 유지보수	900
	시설물 보수공사	650
평가 제외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873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전환사업)	3,440
	임도시설(임도보수 등)(전환사업)	3,189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보강	2,777
	지방전통사찰 보수	1,438
	어항보수보강지원	950
	도민체전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855

- 이러한 평가 대상의 과도한 축소로 인해 사후평가 결과 감액·일몰 투자사업은 4건 (총사업비 30억원)에 불과하고, 행사성 사업을 포함하더라도 2023년 반영 예산은 16억원으로 매우 제한적인 수준임
  - 재정사업평가의 대상이 건수 기준 5% 미만, 총사업비 기준 2% 미만에 불과함에 따라 대다수의 사업이 평가에서 제외되고, 그 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효과도 전체 세부사업 기준 총액 10조원에 비해 16억원 감액에 불과함
-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
  -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지역별 세부 사업에 대한 배경지식이 제한적일 경우 피평가부서의 자체평가 내용 및 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 경직적인 평가 수행에 제한되는 우려가 있음

## □ 개선방안

### ○ 재정사업 평가 대상 범위의 확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검토 필요

- 2021년 기준 충청남도의 세부사업 중 국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499개로, 행정운영경비 등 평가의 실익이 부족한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평가 대상 사업이 현행과 같이 건수 기준 5% 수준임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움
- 반면, 예산담당관실의 전문 인력 확충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평가단의 구성도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특히 평가제도의 운영에도 비용과 편익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현재 평가에 투입하는 비용(예산담당관실의 인력 및 자원)에 부합하는 수준 이상으로 평가대상 확장시 편익(평가결과의 합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차년도에 재정사업평가에 투입가능한 예산담당관실의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및 메타평가, 외부평가단 운영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실·국별 핵심사업 또는 민선8기 공약사항 위주의 세부사업 단위로 평가대상 선정의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계획 - 관리 - 성과/환류의 재정사업 평가체계에 부합하는 계속사업에 평가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임

### ○ 외부전문가의 확충

- 성과관리 및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평가위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성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평가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경기도 재정사업평가의 경우, 자체평가와 외부평가의 비중을 50:50으로 수행함

### ○ 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한 타당성·신뢰성 향상과 부진사업의 정리

- 현재 재정사업평가의 지표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예규는 평가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 및 평가방법을 폭넓게 수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현재의 지표 및 평가방법은 계획 - 관리 - 성과/환류의 체계로서 계속사업의 평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2 ~ 5년의 제한된 기간동안 수행되는 건설사업 등의 평가체계에는 잘 부합하지 않음

- 이에 단기적으로는 평가의 실익이 큰 계속사업 위주로 평가를 수행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非계속사업 등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표 및 평가방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유사 평가제도(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他 지방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사례 등)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일몰/감액이 어려운 복지·사업 및 일몰사업에 대한 의도적 저평가 등)을 제도개선에 사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기대효과

- 사후평가 대상의 확대를 통한 성과관리의 실질화로 재정사업 집행의 합리성 강화 및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음

### IV. 결론

#### □ 예산의 관점에서 사전검토의 의의와 필요성

-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위한 대표적인 사전통제 기제인 지방재정영향평의 실질적 운영여부를 점검 및 실질화한다면 예산의 관점에서 공모사업의 계획 - 추진 -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道 예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시·군의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영향평가 일괄 추진과 필요시 사업의 내적·외적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함

#### □ 재정사업평가 대상의 확대·강화를 통한 성과관리 실질화

- 현재 제한적으로 수행되는 투자사업의 재정사업 평가 확대는 관련 법령·제도의 취지상 가급적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예산담당관실의 인력·자원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제고함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지표 및 평가방법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별첨 1] 지방재정영향평가서(지방자치단체)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6. 30.>

## 지방재정영향평가서(지방자치단체)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대상 기관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추진근거	

재원 소요	① 사업기간별 재원	구분	Y	Y+1	Y+2	Y+3	Y+4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민자 등					
	② 사후 소요 예상액	구분	Y	Y+1	Y+2		
		계					
		인건비					
		시설운영비					
		연구비					
		유지비용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연 도 별 재 정 영 향 평 가	구분		Y	Y+1	Y+2	Y+3	Y+4
	③ 자치단체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비(A)					
자치단체 예산(B)							
비율(A/B)							
④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비(A)						
	정책사업 예산(B)						
	비율(A/B)						
⑤ 자체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비(A)						
	자체사업 예산(B)						
	비율(A/B)						

평가 결과	⑥ 내용					
	⑦ 부서명		전화번호			

### 작성 방법

**□ 자원소요란**

- ① 사업기간별 자원: 사업기간의 유형별 자원을 작성하고,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사업 시행연도(Y)를 포함하여 5년간 소요자원의 예상액을 작성
- ② 사후 소요예산액: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후 소요자원 내역(인건비, 시설운영비, 연구비 등 유지비용)을 작성(억원 단위)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첫 해(Y)를 포함하여 3년간 소요자원의 예상액을 작성
  - 시설 건립, 단지 조성 등 향후 사후 소요자원이 중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 후 3년간 소요자원의 예상액을 작성

**□ 연도별재정영향평가란**

- ③ 자치단체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시행 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을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자치단체예산은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중기계획상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치 작성
  -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
- ④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총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정책사업 대비 사업비 비중을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자치단체예산은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중기계획상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치 작성
  -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
- ⑤ 자체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을 작성(억원 단위)합니다.
  - 자치단체예산은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중기계획상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치 작성
  - 사업기간이 정해진 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두 작성

**□ 평가결과란**

- ⑥ 내용: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작성합니다.
  - 예) 00시(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양호하나, 사후 소요금액 규모가 00억원으로 이에 대한 자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⑦ 부서명: 해당 자치단체 지방재정영향평가 담당부서명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별첨 2] 충청남도 재정사업평가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1-a. 사업목적의 명확성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여부
		1-1-b. 사업계획에 사회적 가치 반영 여부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관리 (3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3-1-a. 예산 집행계획 수립 및 준수 여부
		3-1-b. 예산집행을
		3-1-c. 예산 목적 외 사용
		3-1-d. (투자사업) 집행을 제고 노력
		3-1-e. (행사성사업) 예산절감 노력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성과 /환류 (50점)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4-1-a. 계획된 목표치 달성여부
		4-1-b. 사회적 가치 구현 여부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충청남도 세수추계 환경 진단과 시사점

김필현(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

### 1. 충남 세수전망 모형 개요

#### ■ 단기 전망모형 (다음연도 세수)

○ 충청도청은 행정안전부의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활용함.

- 일부 광역지자체는 행안부 프로그램에 더하여 별도의 세수 추계모형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두 모형이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라기보다는 지역 특성을 좀 더 잘 반영하는 변수로 대체 내지 추가하는 방식인 것으로 앎.

○ 행정안전부 모형: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전망치) × 추계변수 전망치 ± 세입 특수요인'

- 충남에서는 도세 세수추계를 두 번에 걸쳐 실시하는데 1차 추계는 7월까지, 2차 추계는 8월까지의 세목별 징수액을 활용하여 각각 전망함.
-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전망치))는 세목의 성격에 따라 진도비 방식과 직전년도 세액신장률 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 도세 세목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등의 당해연도 예상징수액은 당해연도 7월(1차) 또는 8월(2차)까지의 세목별 징수액에 최근 6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4년간의 진도비에 따라 추계함(진도비 방식).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직전년도 징수액 + (직전년도 징수액 × 당해연도 상반기 세액신장률)' 을 통해 추계함(직전년도 세액신장률 방식).
- (추계변수 전망치) 당해연도 예상징수액과 유사하게 최근 6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4년을 적용하여 산출함.
- (세입 특수요인) 각 지역별 정책환경 변화(세율 변화, 감면 등) 등에 따른 외생적 요인들을 고려함.
  - 정책환경 변화 등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로 내려 보내는 지침에 포함되어 있음.

##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지방세수입 전망

###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되며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 수립 및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운영체계이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지방세의 경우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초로 제도변경, 부동산 거래동향 등 자치단체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 행안부 세수추계기법 등을 활용하며, 산식 적용이 어려울 경우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과거 추이 등을 활용하도록 함.
- 행안부나 국가에서 제시하는 재정운용 전망지표 등을 벤치마크로 설정하도록 함.

## 2. 전망 결과

### ■ 2022년 지방세수입 전망

#### ○ 본예산 상 지방세수입은 27,242억 원<sup>1)</sup>

- 아래에서 제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수치 26,366억 원보다 높은 수준임.

#### ○ 1차 추경예산 상 지방세수입은 2,779,400,000원인데, 본예산 대비 증가분은 지방소비세 변화에 따른 것임.

#### ○ 자세한 산출내역은 외부 공개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움.

<표 135> 2022년 지방세수입 전망

(단위: 억 원)

	1차 추경	예산액	비교증감
지방세수입	27,794.0	27,242.0	3,824.0
보통세		23,169.0	3,519.0
취득세		11,544.0	2,191.0
등록면허세		852.0	75.0
레저세		92.0	0.0
지방소비세	11,233.0(552.0)*	10,681.0	1,253.0
목적세		4,024.0	305.0
지역자원시설세		1,149.0	8.0
지방교육세		2,875.0	297.0
지난년도수입		49.0	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1차 추경시 지방소비세 인상분임.

자료: 충청남도 본청

1) 충청남도 의회, 「2022 충청남도 재정」, p.8.

##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수전망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취득세) 2022년 취득세는 부동산거래량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가운데 세입특수요인 등을 적용하여 추계, 2023년에서 2026년까지 4개년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0.6% (최고, 최저 제외) 증가 전망
- (등록면허세) 2022년 단순 등록분은 부동산거래량 증가 추세에 따라 766억원, 면허분은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86억원으로 추계, 2023년에서 2026년까지 4개년의 면허분은 2014년에 면허종별 50% 세율인상, 등록분도 등록 대상별로 50~100% 세율인상으로 앞으로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6년간(2015~2020년, 최고·최저 제외) 4년 평균 징수비율 0.7% 정도로 적용하여 전망
- (레저세) 2022년 레저세 총액은 44억원으로 전망, 2023년에서 2026년까지는 코로나 영향 등 경마 사업장 중단과 일부개장으로 인해 최근 연평균 신장률 적용이 어려워 2021년 수준의 0.1%로 적용하여 전망
- (지방소비세) 2022년 지방소비세는 정부예산(안)의 부가가치세 예산액에 근거한 지방소비세 총액에 2021년 충남 배분비율 등을 적용하여 9,921억원으로 추계,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연평균 신장률은 최대·최저 폭이 큰 관계로 최근 연평균 신장률 적용이 어려워 2021년 수준의 0.4%로 적용하여 전망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과표적용률 증감률과 신축건축물기준가액 상승률 등을 반영, 특정시설분은 2021년 화력발전 발전량 수준으로 전망. 2023년에서 2026년까지 4개년은 특정부동산분이 2014년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세 세율인상 등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36.5%)하여 최근 연평균 신장률 적용이 어려워 2021년 유사 수준으로 적용 전망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본세인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6개 세목에 부가되어 과세하며, 2022년 지방교육세는 6개 세목의 각 세목별 지방교육세 세율을 적용하여 2,869억원으로 추계, 2023년에서 2026년까지 4개년은 최근 5년간 세수 연평균 증가율 0.6%를 적용하여 전망
- (지난년도 수입) 2022년 추계는 최근 3년 평균 체납액에 체납액 증감률, 징수율을 반영하여 49억원으로 추계함

○ 이상 근거에 기초한 전망결과는 아래 표에서와 같음.

<표 136> 중기지방재정계획(2022-2026) 상 충남 재정규모 및 지방세수입 전망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감률(%)
재정운용 규모(억원)	총규모	99,704	100,855	104,199	105,842	109,671	2.41
	일반회계	83,506	84,960	87,647	90,174	93,349	2.82
	특별회계	9,717	9,936	10,006	10,278	10,793	2.66
세입(억원)	총규모	99,704	100,855	104,199	105,842	109,671	2.41
	지방세수입	26,366	26,516	26,654	26,789	26,925	0.53
	취득세	11,475	11,543	11,612	11,681	11,751	0.60
	등록면허세	852	858	864	870	876	0.70
	레저세	44	44	44	44	44	0.09
	지방소비세	9,921	9,961	10,001	10,041	10,081	0.40
	지역자원시설세	1,156	1,175	1,181	1,184	1,186	0.64
	지방교육세	2,869	2,886	2,904	2,921	2,938	0.60
	과년도수입	49	49	49	49	49	0.00

### 3. 평가

#### ■ 단기 세수추계 모형

○ 2017~2021년 실적치와 예산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과소추계의 모습이 관찰됨.

- 아래 표에서의 숫자는 (추계치/징수액 - 1)로 계산한 오차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는 과대추계, (-)는 과소추계를 나타냄.

<표 137> 충남도 지방세 실적치와 전망치의 차이

세목	2017	2018	2019	2020	2021	(단위: %)
						오차비율의 단순 평균
취득세	-13.2	-0.5	29.4	-11.1	-22	15
부동산분	-15.8	0.3	39.4	-6.2	-21.3	17
부동산분 외	-2.9	-3.9	-0.9	-26.5	-24.9	12
등록면허세	-1.2	-6.9	0.6	-2.9	-1.2	2.6
레저세	-10	-7.7	1.4	499.6	38.5	111
지방소비세	-11.9	-11.3	-37.2	0	-6.5	13
지역자원시설세	-5.4	-11.4	-4	3.9	6.2	6.2

주: 오차비율의 단순평균은 각 연도 오차비율의 절대값을 단순평균한 값임.

자료: 이상훈(2022)

- 2021년의 경우 취득세와 레저세에서의 세수오차가 매우 큼.
  - 레저세의 경우 당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과대추계는 불가피한 결과였던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취득세의 경우는 부동산시장 등에서의 과열이 2021년에도 지속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차비율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임.
-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201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릿수의 오차비율을 보였고,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또한 전반적으로 추계실적이 부진함.
  - 취득세는 지방소비세와 더불어 충남도 본청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세목인데, 최근 5년 간 201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세수추계 오차비율이 큰 편에 속함.
  - 지방소비세 또한 제1차 재정분권이 추진된 2019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세수오차비율이 큰 편에 속함.
  - 레저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경마장 등의 정상영업이 어려웠던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전 기간 3년 간 2년의 세수오차 비율이 5% 이상 과소추계되었음.
- 반면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2018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함.

■ 충청남도 지방세수입 등 세입 전망에 대한 평가

- 충남 지방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2022년 세수입 전망에 대해 평가해 봄.
  - 먼저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수가 급등했던 2021년에 비해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반대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 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그 외 세목들도 2022년 세수가 2021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레저세의 경우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안정화되면서 전년에 비해 39.4%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나, 여전히 과거 추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표 1> 지방세수입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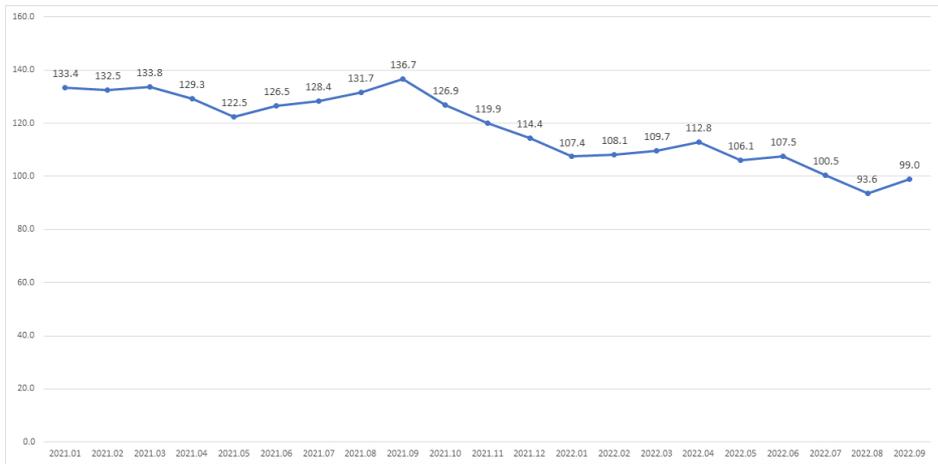
	2023	2022	2021	(A)-(B)	{(A)-(B)}/B	2021 세수오차 비율
	예산액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취득세	10,074	11,544	12,048	-504	-4.2	-22
등록면허세	835	852	790	62	7.8	-1.2
레저세	200	92	66	26	39.4	38.5
지방소비세	14,015	11,233*	10,081	1,152	11.4	-6.5
지역자원시설세	1,157	1,149	1,091	58	5.3	6.2

자료: 지방소비세는 1차 추경예산금액임.

○ 취득세의 경우 충남에서의 부동산시장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에서와 같이 소비자심리의 급랭과 함께 거래가 2021년에 비해 크게 줄고 있으나, 가격은 여전히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전년도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전년대비 가격상승분보다 거래량 감소분이 더 큰 것으로 보임.
- 취득세수는 가격과 거래량의 상대적 움직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때, 올해 취득세수가 과소추계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오히려 소폭 과대추계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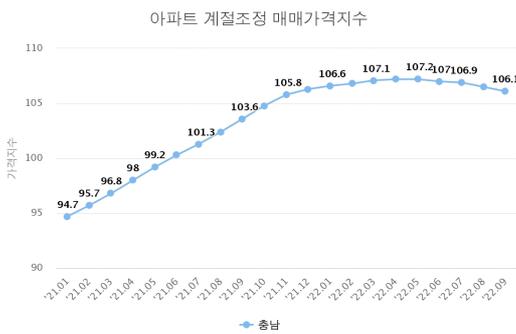
<그림 33> 충남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 동향



주: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 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  
 자료: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지조사」, 국토연구원

<그림 34> 충남 부동산시장 추이

<가격 동향>



<매매 동향>



자료: R-ONE 부동산통계뷰어

○ 지방소비세에 대한 평가는 결국 부가가치세 전망에 대한 평가일 것이고, 현재 더 이상 재정분권 관련 세제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 2022. 8. 30. 기재부 세수전망에 따르면 올해 부가가치세는 2021년 대비 12.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 이양 관련 다소 혼란이 존재했고, 추경을 거쳐 올해 세수를 증액했는데 2021년 징수결정액과 대비해 보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추가적으로 2023년 예산안을 2022년 예산에 비춰 간단히 평가해 봄

-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지방세수입 전망과 2023년 예산안 전망이 동일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발표된 전망근거를 살펴봄.
  - 2023년 취득세는 잇단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강화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입특수요인 등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이며 2022년 예산 대비 12.7% 감소함.
  - 2023년 레저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경마사업장이 정상 운영하면서 200억원 징수가 전망되며, 2022년 예산 대비 117.4% 증가함.
  - 2023년 지방소비세는 정부예산(안)의 부가가치세 예산액에 근거하며, 2022년 예산대비 24.8% 증가함.
  - 특정부동산분은 최근 5년간 세액신장률(0.6%), 건축건물 기준가격 상승률(2.56%)을 반영하여 837억원으로 전망하고, 특정시설분은 2014년과 2015년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및 세액 100% 인상에 따라 세액 신장률 반영 없이 315억원으로, 특정자원분(지하수, 지하자원 등)은 5억으로 추계함하여 전년 예산 대비 0.7% 증가함.
-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다소 긍정적으로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취득세수가 2022년 예산 대비 12.7% 감소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전국 기준으로 약 20% 정도 세수 감소를 전망한 결과가 있음(임상빈, 2022).
  - 이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충남의 취득세수는 6,930~8,47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에 비춰볼 때 민간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이 큼.
  - 반면에 높은 물가상승률 추세의 지속은 세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두 변수 추이를 종합해 볼 때 내년 지방소비세가 2022년 예산대비 24.3% 증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지방세수입 전망 실적을 간단히 살펴봄.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획득이 어려워 2020~2024년 계획에서 제시된 지방세수입 전망액과 2020년 징수액을 <표 4>를 통해 비교해 보았음.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0년 당시 수립된 것이므로 당시 징수액과 어느 정도 일치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여기서도 취득세 전망이 7% 이상 과소추계된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7% 이상 세수오차비율이 발생한 세목은 지역자원시설세와 과년도수입, 레저세임.
  - 레저세수입은 앞서 언급한 코로나19의 영향이므로 과대추계 결과를 수궁할 만함

<표 139> 2022년 지방세수입 전망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0년 징수액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오차비율
합계	2,338,216	2,336,997	-0.05
취득세	957,048	893,255	-7.14
등록면허세	74,975	75,551	0.76
레저세	3,069	18,400	83.32
지방소비세	936,677	959,099	2.34
지역자원시설세	107,797	117,092	7.94
지방교육세	265,928	267,600	0.62
과년도수입	-7,277	6,000	221.28

## 민선8기 도정목표와 예산반영에 대한 검토의견

진혁 (충남지역사업평가단장)

### □ 발제 의도

-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8기의 도정목표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민의 참여와 적절한 예산 반영이 필요
- 도정목표별 22년 추경 및 23년 예산(안) 반영 현황을 살펴보고 검토의견을 제시

### □ 민선8기 도정목표와 예산반영 현황

- 민선8기 도정목표는 5대 목표, 20대 전략(총 162개 과제, 19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도정목표별 22년 추경 및 23년 예산(안) 예산반영 현황(도의회 제공 자료 참고)을 분석하면
  - 22년 추경에 35개 사업 약 264억원이 반영되었고, 23년 예산(안)에 113개 사업 약 6558억원을 반영하고 있음
  - 신규사업은 54개 사업, 계속사업은 59개로 파악됨(23년 예산(안))
  - 도정목표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중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산업화’와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중 ‘균등한 보육환경 조성’과 ‘도민 안심 안전체계 구축’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반영이 이루어짐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중 ‘혁신적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중 ‘지역특색을 살린 균형발전’ 등에 있는 신규 핵심 과제는 정책 수립 중으로 파악

< 표1 > 도정목표별 예산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5대 목표	20대 전략	22년 추경		23년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1) 미래전략산업육성	1	80	3	21,496
	2)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	-	-	3	10,458
	3) 혁신적 교통·물류·인프라 구축	2	1,019	-	-
	4) 든든한 시장 지원	1	150	10	79,557
	소계	4	1,249	16	111,511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1) 지역특색을 살린 균형발전	4	1,050	7	3,029
	2) 지역과 상생하는 인재양성	1	10	2	1,128
	3)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산업화	5	8,092	21	133,649
	4) 해양·관광·신산업육성	2	180	3	270
	5)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4	9,690	7	94,177
	소계	16	19,022	40	232,253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	1) 늘 곁에 있는 사회복지망	3	409	12	6,484
	2) 균등한 보육환경 조성	-	-	3	128,990
	3) 사각지대 없는 지역의료체계구축	1	2,000	6	43,499
	4) 도민 안심 안전체계 구축	2	270	5	112,641
	소계	6	2,679	26	291,614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1)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 진흥	1	20	5	540
	2) 품격있는 문화 예술 기반 조성	2	12	7	3,075
	3)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	2	2,800	7	14,199
	4) 자연 생태 회복력 복원	-	-	2	235
	소계	5	2,832	21	18,049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1) 참여와 소통의 열린 도정	2	599	6	1,113
	2) 자율과 책임의 혁신 도정	-	-	-	-
	3)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방정부 지원	2	49	4	1,334
	소계	4	648	10	2,447
<b>총계</b>		<b>35</b>	<b>26,430</b>	<b>113</b>	<b>655,874</b>

< 표2 > 도정목표별 예산반영 주요사업

5대 목표	20대 전략	주요 사업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1) 미래전략산업육성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 충남형 UAM 발전 거점 기반 구축 방안 연구용역 -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2)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	- 수소도시 조성사업 -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3) 혁신적 교통·물류·인프라 구축	- GTX-C노선 천안아산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충남형 M버스 운영
	4) 든든한 시장 지원	- 지방은행 설립 업무추진 -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1) 지역특색을 살린 균형발전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 백제문화 복합단지 체험마을 조성 -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2) 지역과 상생하는 인재양성	- 충남 소재 기업-대학 상생협력체계 구축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전출금
	3)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산업화	- 충남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 -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4) 해양·관광·신산업육성	- 해양바이오 포럼 개최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5)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 충남형 농촌 주거단지 조성 (농촌리브투게더) - 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	1) 늘 곁에 있는 사회복지망	- 충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충남형 1인가구 지원사업
	2) 균등한 보육환경 조성	-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 - 키즈파크 조성 지원
	3) 사각지대 없는 지역의료체계구축	-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지원
	4) 도민 안심 안전체계 구축	- 재해 위험지역 정비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	1)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 진흥	- 충남 문화관광공사 운영방향 정립 및 수익사업 발굴 - 의병기념관 건립 기본구상계획 수립
	2) 품격있는 문화 예술 기반 조성	- '위케이션 충남' 인프라 조성 지원 -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3)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	- 회원종목단체 안정적 조직 운영지원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4) 자연 생태 회복력 복원	- 국가 탄소중립 도시 조성 대응전략 및 지역별 조성방안 -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등 생태환경분야 현안업무 추진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1) 참여와 소통의 열린 도정	- 남부민원지원센터 설치·운영 -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
	2) 자율과 책임의 혁신 도정	-
	3)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방정부 지원	- 메타버스 충남도청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 민간 데이터 구매 및 활용

## □ 검토의견

### ○ 공간정책 간 조화와 정책우선순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

- 민선8기 도정목표와 그간 논의된 충청남도의 발전전략을 공간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 (1) 충청남도 내 균형발전과 5대 권역별 특화발전,
  - (2) 충청권 초광역 메가시티,
  - (3) 충청남도 북부와 경기도 남부를 잇는 Bay Valley 메가시티 등3가지의 서로 다른 발전방향을 가진 공간정책이 서로 보완하면서도 정책목표와 정책우선순위에서 충돌할 수 있는 상황
-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중앙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정책 추진,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정부 정책의 차등 등 정책 환경과 도내 균형 발전에 대한 도민의 염원 등 정치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행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
- 수도권 집중의 심화 특히 미래첨단산업의 수도권 입지 심화 현상과 향후 경기도 평택 이남의 새로운 미래첨단산업 입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Bay Valley 메가시티의 구상을 지방화시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충남 천안, 아산 북부 지역에 대기업 미래첨단산업(반도체,미래차,수소연료전지,바이오 등)를 유치하는 신도시(판교와 송도를 벤치마킹) 건설에 중점을 두는 전략으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
- 수도권 산업 및 인구의 충남 이입과 인재, 산업,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M버스 노선 신설 등 수도권과의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단기적 목표로 잡은 천안-평택지체역 노선버스 전략보다는 바로 서울과의 노선버스 확충이 충남 발전에 유효할 수도 있다고 생각

### ○ 도정목표에 글로벌 스마트 축산 및 동물 바이오 확충을 검토할 필요

- 도정목표 중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산업화, 특히 스마트 팜 등 미래농업에 우선적으로 신규사업과 예산을 배정(26개 사업, 약 1417억원)하고 있으며 관련 과제 개발에 적극적
- 충청남도는 돼지 사육수가 전국 최다 등 축산이 강한 산업이지만, 스마트 축산과 동물 바이오 관련 산업을 충분히 성숙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 갈수록 첨단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을 향후 축산 및 동물 바이오 관련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특화해 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과제 개발이 필요

## 정부 공모사업 지방비 매칭 현황과 성과 관리방안

진혁 (충남지역사업평가단장)

### □ 발제 의도

- 충청남도의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지역의 대학, 지원기관, 기업, 지자체가 적극 응모하여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충남도도 전략적 목표를 세워 활발하게 대응 중으로 판단
- 그러나 공모사업 및 지지체 위임사업 증가에 따라 지방비 사업 및 지방비 매칭 사업이 증가하는데 비해, 사업의 집행과 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이 한정적이고 지자체의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지역관점의 성과에 근거한 투자 결정 데이터가 미흡
- 따라서 2023년 예산(안)에서 지역 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 관련 지방비 사업 및 정부공모사업 지방비 매칭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 경제 산업 분야 지방비 사업 및 정부 공모사업 지방비 매칭 현황

- 경제 산업 분야 2023년 예산(안) 중 지방비 매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충남도 경제실 및 미래산업국 예산(안) 중 사업성 예산 112개를 분석(표 참고)
  - 지방비 비중을 분석하면 10%이하가 27개 사업, 10%초과 20%이하가 16개 사업, 20%초과 30%이하가 14개 사업, 30%초과 40%이하가 10개 사업, 40%초과 50%이하가 9개 사업, 50%초과가 26개 사업으로 파악됨
- 과학기술 R&D 사업의 경우 10%내외, 기업지원 및 산업기술 R&D 사업의 경우 10%~30%, 인프라 및 장비 구축의 경우 30%이상의 매칭 비율을 보임

<표1> 2023년 예산(안) 경제산업분야 정부공모사업 지방비 매칭 현황: 미래산업국 미래성장과

[단위: 천원, %]

NO	사업명	예산구조				도비 비중	도비 사용범위	시행주체	도비사업내용	중앙 부처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1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1227,200	1,350,000	9,800,000	970,000	151,200	충남TP	장비, 건축 등	중기부	
2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	200,000	0	200,000	0	0	도내대학	국가공모 도비지원	충남	
3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	996,570	496,570	100,000	50,000	350,000	단국대	공동연구, 기기개발	과기부	
4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4,520,000	3,850,000	220,000	170,000	280,000	순천향, 건양, 단국대	공동연구, 기기개발	교육부	
5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1,356,500	1,116,500	90,000	100,000	50,000	순천향대	기술개발	과기부	
6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	3,165,087	2,000,000	200,000	200,000	765,087	순천향대	연구지원	교육부	
7	융합기술 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	990,000	500,000	40,000	20,000	430,000	호서대	사업비 지원	산업부	
8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지원	1,810,000	1,250,000	125,000	265,000	170,000	순천향대	연구비용	과기부	
9	선도연구센터(MRC) 지원	2,180,000	1,400,000	100,000	200,000	480,000	단국대	연구비용	과기부	
10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	560,000	500,000	10,000	50,000	0	순천향대	사업비 지원	과기부	
11	범부처 재생의료기술 개발사업	417,334	334,000	50,000	0	33,334	순천향대	연구지원	과기부	
12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사업	270,000	240,000	30,000	0	0	단국대	연구지원	해수부	
13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591,906	460,000	30,000	0	101,906	순천향대	연구지원	해수부	
14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2,862,204	2,000,000	30,000	40,000	792,204	단국대	연구지원	산업부	
15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8,655,000	0	8,655,000	0	0	충청남도	공사비(건축)	충남	
16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2,900,000	2,000,000	300,000	600,000	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남: 한국자동차연구원)	기업지원, 운영	과기부	
17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15,199,100	7,500,000	799,100	1,050,000	5,850,000	충남TP	기업지원, 운영	중기부	
18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1,500,000	450,000	150,000	0	900,000	충남TP	기업지원, 운영	중기부	
19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1,900,000	950,000	190,000	0	760,000	충남TP	기업지원, 운영	중기부	
20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250,000	125,000	25,000	0	100,000	충남TP	기업지원, 운영	중기부	
21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1,000,000	500,000	100,000	0	400,000	충남TP	기업지원	중기부	
22	지역균형발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258,000	0	258,000	0	0	충남TP	기업지원	충남	
23	충남 국방산업 육성	345,000	0	345,000	0	0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기업지원	충남	
24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3,605,528	1,866,000	1,000,000	0	739,528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장비, 운영, R&D지원	과기부	
25	충남 SW융합 클러스터 2.0	3,702,000	1,824,000	722,000	1,102,000	54,000	충남TP	기업지원 외	과기부	
26	지역 SW서비스사업화 지원	768,000	384,000	256,000	0	128,000	충남TP	기업지원 외	과기부	
27	SW미래채움	2,140,000	1,050,000	525,000	325,000	240,000	남서울대	임용지원	과기부	
28	SW중심대학 지원	2,533,000	2,000,000	8,000	20,000	505,000	순천향대	인재양성	과기부	
29	지역주도 SW기업 성장지원	311,000	155,500	155,500	0	0	충남TP	사업운영	과기부	
30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	4,540,000	2,300,000	2,240,000	0	0	지식재산센터	기업지원	과기부	
31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370,000	0	185,000	185,000	0	태안군	건축, 운영 등	충남	



25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	1,548,720	1,050,000	70,000	10,000	418,720	4.5	민간경상	대학공학교육혁신센터	인력양성	산업부
26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사업	600,000	0	600,000	0	0	100.0	출연	충남TP	기업지원	충남
27	자율서플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실증 사업	10,000,000	9,750,000	75,000	175,000	0	0.8	출연	한국자동차연구원	장비 등	산업부
28	미래차전환 종합지원사업	150,000	0	150,000	0	0	100.0	출연	충남TP	기업지원 등	산업부
29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6,218,015	2,400,000	1,750,000	1,250,000	818,015	28.1	자치단체보조	아산시	건축, 장비 등	-
30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4,051,000	2,061,000	1,000,000	840,000	150,000	24.7	출연	충남TP	기업지원 등	산업부
31	지능형 이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래젝트 코드 구축사업	7,879,000	2,436,000	2,118,000	3,325,000	0	26.9	출연	건양대	건축, 장비 등	산업부
32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사업	7,145,000	2,303,000	1,982,000	2,860,000	0	27.7	출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건축, 장비 등	산업부
33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2,618,000	1,831,000	393,500	393,500	0	15.0	출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장비 등	산업부
34	국가재난 슈퍼빅데이터-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구축사업	9,131,000	2,796,000	2,514,000	3,771,000	50,000	27.5	출연	순천향대	건축, 장비 등	산업부
35	스파시얼용 5G 스마트헬스케어기기 및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R&D) 사업	1,419,792	1,020,000	200,000	100,000	99,792	14.1	출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장비 등	산업부
36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7,614,000	2,814,000	2,400,000	2,400,000	0	31.5	자치단체보조	보령시	건축, 장비 등	-

<표3> 2023년 예산(안) 경제산업분야 정부공모사업 지방비 매칭 현황: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NO	사업명	예산구조				도비 비중			도비 사용방법	시행주체	도비사업내용	중앙부처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도비	비중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TP 기관 협력 기업지원 사업(충남TP)	400,000	0	400,000	0	0	100.0	출연	충남TP,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운영, 기업지원	충남	
2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기술 지원 사업	400,000	0	400,000	0	0	100.0	출연	충남TP,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운영, 기업지원	충남	
3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과학교육진흥원)	600,000	0	600,000	0	0	100.0	출연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충남	
4	전기차 배터리 제사용 산업화 기술개발	3,500,000	3,000,000	150,000	350,000	0	4.3	출연	한국자동차연구원	R&D	산업부	
5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4,072,000	2,582,000	260,000	606,000	624,000	6.4	출연	충남TP	장비, 기업지원 등	산업부	
6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5,638,000	2,160,000	830,000	2,620,000	28,000	14.7	출연	충남TP	건축, 장비 등	산업부	
7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820,000	500,000	320,000	0	0	39.0	출연	충남TP	기업지원	산업부	

[단위: 천원, %]

<표4> 2023년 예산(안) 경제산업분야 정부공모사업 지방비 매칭 현황: 경제실 기업지원과

[단위: 천원, %]

NO	사업명	예산구조			도비 비중	도비 사용방법	시행주체	도비사업내용		중앙부처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	기업제품 판로 지원	400,000		400,000	100.0	출연	충남경제진흥원	전시회, 동영상 제작	지원	충남
2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	70,000		70,000	100.0	출연	충남경제진흥원	온라인 쇼핑몰 제작	지원	충남
3	TV홈쇼핑 입점지원	220,000		220,000	100.0	출연	충남경제진흥원	TV홈쇼핑 입점	지원	충남
4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1,400,000	700,000	700,000	50.0	출연	충남경제진흥원	기술개발, 마케팅, 기업지원	산업부	충남
5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	600,000		600,000	100.0	출연	충남TP	운영지원, 사업화 지원		충남
6	충남 인큐베이터(창업보육) 운영	490,000		490,000	100.0	민간경상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시설지원, 운영지원		충남
7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건립	14,850,000	9,450,000	5,400,000	36.4	민간경상	충남개발공사	지식산업센터 건립	산업부	충남
8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원	3,200,000		950,000	29.7	민간경상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업지원	충남	
9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10,000,000		4,000,000	40.0	시군시행	천안시	시설조성	충남	
10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628,000	500,000	43,000	6.8	민간경상	호서대학교	시설운영	중기부	충남
11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구축	200,000	130,000	20,000	10.0	민간경상	한서대학교	시설운영, 기업지원	중기부	충남
12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150,000		150,000	100.0	출연	충남TP	해외 전시, 판로 개척	지원	충남
13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	2,822,000	1,802,000	1,020,000	36.1	출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인력양성, 기업지원	중기부	충남
14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	255,000		255,000	100.0	민간경상	충남경제진흥원	사업화, 마케팅 등 지원	충남	
15	창업중심대학 사업 지원	8,100,000	7,500,000	200,000	2.5	민간경상	호서대학교	사업화 지원, 기업지원	중기부	충남

<표5> 2023년 예산(안) 경제산업분야 정부공모사업 지방비 매칭 현황: 경제실 투자임피과

[단위: 천원, %]

NO	사업명	예산구조			도비 비중	도비 사용방법	시행주체	도비사업내용		중앙부처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	외투지역 조성	10,000,000		5,000,000	50.0	직접	충남, 천안시	토지매입 및 기업임대	산업부	
2	충청남도 외투기업지원센터 지원	77,000		77,000	100.0	출연	충남경제진흥원	교육 및 경영지원, 네트워킹	충남	
3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12,000,000		6,000,000	50.0	직접	충청남도	시설지원, 임대지원, 교육훈련 등	충남	
4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17,250,000	11,000,000	2,500,000	14.5	시군시행	시군	수도권 이전 증설 기업 보조	산업부	
5	지역투자촉진 보조금(비수도권)	30,000,000		12,000,000	40.0	시군시행	시군	충남 이전 증설 기업 보조	산업부	
6	국내복귀 투자 보조	14,800,000	10,000,000	1,000,000	6.8	시군시행	시군	충남 이전 국내복귀기업 보조	산업부	
7	산업단지 창업용수시설	21,400,000		21,400,000	100.0	시군시행	시군	19개 산업단지 창업용수 공급	충남	
8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	9,971,000		3,372,700	33.8	시군시행	시군	산단 내 복지/편의시설 설치	충남	
9	친안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6,453,000	3,125,000	604,000	9.4	시군시행	천안시	노후산단 기반지원/편의시설 확충	국토부	
10	산업단지 기술사, 톱근비스임차원(일시)장출 지원	400,000		400,000	100.0	시군시행	시군	숙소, 톱근비스 임차비 지원	고용부	
11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6,841,640		2,017,890	29.5	시군시행	시군	농공단지 내 시설 개보수	농림부	
12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 도입모델	2,150,000	1,075,000	322,500	15.0	시군시행	공주시	농공단지 내 스마트인프라 구축	농림부	
13	충남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	400,000		200,000	50.0	출연	충남국방벤처센터	R&D 지원, 센터 운영	충남	

## □ 검토의견

### ○ 지자체 자체의 예산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가 필요

- 국가 공모사업의 사업 및 과제 평가는 부처별 및 전담기관 중심으로 진행하며, R&D 예산의 경우 국과위의 심의, 균특회계의 경우 균형위 평가(지자체 자체평가 후) 등이 시행되고 있음
- 부처별 전담기관은 국과위 및 기재부 대응을 위해 매년 사업별 성과관리를 시행
- 지자체는 정부공모사업 응모에 따른 매칭적 성격으로 인해 자체로 성과관리를 하기 보다는 중앙 평가에 대응 혹은 중앙 평가를 참조
- 그러나 중앙평가는 지역경제 및 산업육성 효과보다는 경제성 중심 혹은 평가 지표 중심의 평가에 치중하는 등 지역발전이 목표인 지자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더구나 지방위임 사업과 지방비 매칭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사업에 대한 예산 적정성과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 구체적으로는,

(1) 충남도 국실별로 심의 및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

(2) 도의회에 예산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3) 전문 성과 및 평가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을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업무의 증가,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시험적 과정을 거쳐 확산,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

### ○ 도 내 과학 및 산업육성 관련 출연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검토 필요

- 최근 과학기술 및 산업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 추진됨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출연 센터 및 진흥원이 증가
- 한편으로는 재정 효율화를 위한 기관 통폐합 등이 진행 중
- 그러나 재정 효율 중심의 유사기관 통합이 지배적이라는 우려가 있음
- 지방분권 시대에 광역지자체는 정책과 사업의 기획 및 수행에 있어서 점차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지자체 전체의 과학 및 산업의 전략기획, 사업단위 과제기획 및 수행, 종합적 평가 및 성과관리라는 기능적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략, 사업기획, 사업 수행,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증가
- 따라서 행정조직별 관리 중심인 현 체계를 기능적 효과성을 고려한 역할분담과 협력체제로 재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분과 토론

## ② 농수산해양

**[발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정**

**김 호**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단국대학교 교수)

**충청남도 해양신산업 육성과 미래전략**

**박세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정책연구실장)



##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정 (정책평가 기준 : 효과성, 효율성, 공정성)

김호(단국대학교 교수)

### I. 방향 및 과제

- 농정 환경의 변화 요인 : 기후변화, 농산물시장 완전 개방, 세계적 감염병,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개막
  -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음.
  - 농산물시장의 완전 개방으로 생산자의 소득작목 선택 폭이 좁아짐에 따라, 일부 품목으로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음. 과잉생산과 가격폭락 품목이 증가
  - 전문가에 의하면, 세계적 감염병(팬데믹)은 주기적으로 발생 전망(사스 2002년, 신종플루 2009년, 메르스 2012년, 코로나19 2019년)
    - 세계적인 경제 침체, 경제 성장률 둔화,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보호무역주의 등장, 신자유주의의 퇴조 등
  - 국력을 바탕으로 상품종류별, 농산물 품목별, 사례별 등에 따라 개방요구와 보호무역 관철 등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혼합형 무역체계가 될 가능성
  - 보호무역주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 공급의 감소와 곡물 이동의 제한
- 농정 방향의 설정
  - 토지 : 농지보전과 효율적 이용, 경자유전
  - 노동 : 농업인력(청년농, 외국인노동력 등), 여성농업인
  - 자본 : 농기계, 농자재, 영농자금 등
- 농정의 당면 과제
  - 농가소득의 향상
  - 농산물가격의 안정
  - 농업노동력의 확보

- 후계농업인력의 확보
- 생산비 절감(인건비, 농자재 비용 등)

□ **농업 관련 예산 및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정책평가 기준)**

- 효과성(effectiveness) : 목표 달성의 정도
- 효율성(efficiency) : 정책비용 < 정책효과
- 공평성(equity), 형평성 : 정책 대상에게 고르게 혜택

## II. 주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평가

### 1. 농촌 주거공간 개선사업(리브투게더)

- 사업 목적 : 농촌의 주거지와 경작지의 혼재, 한계마을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촌 재구조화 추진
- 사업 내용 : 산재되어 있는 농촌마을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마을의 집적화 및 생활인프라 서비스지원 확대
- 사업 위치 : 충남 인구소멸지역 9개 시군 98개 면 지역
- 사업 기간 : 2022~2026년(다년도 계속사업, 1년차 25%, 2년차 35%, 3년차 40%)
- 총사업비 및 2023 예산액
  - 총사업비 : 2천억 원(도, 시군 7:3)
  - 2013년 예산 : 약 150억 원(도 약 105억, 시군 약 45억)
- 2023년 사업량
  - 6개소 : 개소당 30호(82㎡형), 개소당 사업비 약 93억 원
  - 주거단지 구성 : 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 공동창고 등

□ **평가**

- 효율성 문제
  - 마을의 집적화 및 생활인프라 서비스 지원 등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비 사업 및 국비 사업과 중복성 문제가 있음. 또한 농식품부가 법률의 제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재생 프로젝트 등 농촌재구조화 사업과 유사성이 매우 큼.
  - 따라서 농식품부의 사업과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임.
  - 인구소멸지역인 한계마을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을 광역지자체가 추진하기에는 정책 효과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 형평성 문제

- 개소당 약 93억 원, 총사업비 2,000억으로 나누면 총 21.5개소, 총 임대가구 수는 645개소임.
- 이를 인구소멸지역 98개 면으로 배분하면 1개면 당 평균 6.6가구에 불과함.

○ 시행 시 과제

- 단지형 부지의 확보 여부, 선발기준, 임대료 수준, 임대 주거단지의 관리주체
- 기존 주민 대상의 경우 : 입주 수요의 미달 가능성(고령층의 주거지 이전 기피 경향)
- 귀농귀촌 대상의 경우 : 기존 주민과 역차별 불만 문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마을공동체 주민과 융합 문제 등
- 토건사업으로 인한 농촌 자연경관 훼손 문제 등

□ 참고

(1) 유사한 도비 사업 및 국비 사업 존재

① 충남형 마을만들기

- 사업 목적 : 농촌지역 마을(1개 행정리)에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하여 농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 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
- 사업 위치 : 1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3.1.1.~ 2023.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산액 : (36억 6천만 원)  
※총사업비 : 약 122억 원 (도, 시군 3:7)
- 사업량 : 14개 시·군, 74개 마을

②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 사업 목적 : 농어촌 지역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안전 등이 문제되는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선
- 사업 내용 : 노후주택, 재해·안전·위생 등이 취약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역량강화 등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8개 시군 19개 마을
- 사업 기간 : 2023.1.1.~ 2023.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산액 : 약 87억 원
- ※총사업비 : 약 107억(국비, 도비, 시군비 73.8:8.0:18.2)
- 사업량 : 8개 시군, 19개 지구

### ③ 정주환경 개선

- 사업 목적 :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 도모
- 사업 내용 : 마을안길포장, 소규모교량개설, 소규모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등
- 사업 위치 : 14개 시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3. 1~2023.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산액 : 약 106억 원
- ※총사업비 : 약 213억 원(도, 시군, 자부담 49.95:50.0:0.05)
- 사업량 : 14개 시군 281지구

### ④ 기타 농촌개발 관련 사업

#### ○ 농촌중심지 활성화

- 사업 목적 : 농촌지역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
- 사업 내용 :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로 정주서비스 기능충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정비 및 문화·복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사업 위치 : 7개 시군 8개 읍면
- 사업 기간 : 2023.1.1.~ 2023.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산액 : 약 257억 원
- ※총사업비 : 약 334억 원(국비 약 234억, 도비 약 23억, 시군비 약 77억)
- 사업량 : 7개 시군 8개 읍면 일원 정비

#### ○ 기초생활거점육성

- 사업 목적 : 농촌지역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
- 사업 내용 :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로 정주서비스 기능충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정비 및 문화·복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사업 위치 : 13개 시군 67개면

- 사업 기간 : 2023.1.1.~ 2023.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산액 : 약 286억 원
  - ※ 총사업비 : 약 408억 원(국비 약 286억, 시군비 약 122억)
- 사업량 : 13개 시군 67개 읍면 일원 정비

**(2) 2023년 농식품부의 역점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

- 농촌공간계획과 농촌 재생 프로젝트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심의 중
  - ※농촌특화지구 : 농촌을 ▲축산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업유산지구, ▲경관농업지구, ▲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 7가지로 재구성

**① 농촌재생 확산지원**

- 사업 목적 : 농촌재생 및 농촌협약 추체 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 사회 주도의 통합적 지역개발계획 수립·시행 유도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3. 1.~ 12월(단년도사업)
- 예산액 : 124백만 원
  - ※ 총사업비 : 124백만 원(국비 62백만, 도비 62백만)
- 사업량 : 15개 시군 농촌재생 및 농촌협약 담당 공무원, 주민 등 컨설팅 및 교육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② 농촌공간정비사업**

- 사업 목적 :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유해시설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사업지원을 통한 농촌공간 재생 도모
- 사업 내용 : 농촌공간계획 기반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마을 내 유해시설 정비(철거, 이전) 및 정비공간을 활용한 SOC 구축 등 지원
- 사업 위치 : 3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2~2026년 (다년도 신규사업)
- 예산액 : 약 20억 원
  - ※총사업비 : 약 30.4억 원(국비 약 15.2억, 도비 약 4.6억, 시군비 약 10.6억)
- 사업량 : 3개 시군(부여, 서천, 청양)

## 2.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 사업 목적 : 청년농 스마트팜 보급을 통한 충남 농업 지속성 및 경쟁력 확보
  - 사업 내용 :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3.1.1.~2023.12.31.(단년도 사업)
  - 총예산액 및 2023년 예산
    - 총사업비 : 51억 원(도비 1,071,000, 시군비 2,499,000, 기타 1,530,000) (도비 21%, 시군비 49%, 기타 30%)
    - 2023년 : 1,071,000천 원(도비 1,071,000) \* 신규사업
  - 사업량 : 17개소(5.1ha)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산출 기초]
-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지원 : 51억 원
    - 스마트팜 교체 신축 10억 원 × 5.1ha = 51억 원(ha당 10억 원)

### □ 평가 : 효율성, 공평성(형평성)의 문제

- 효율성 문제 : 비용 산정 검토
  - 농식품부 사업(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의 경우에 ha당 예산 약 1.34억 원이고, 기존 도 사업(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지원)은 ha당 예산이 약 7.91억 원임.
  - 따라서 본 사업의 ha당 10억 원의 산출 근거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공평성 문제
  - 0.1ha(300평)당 사업비 1억 원 기준으로, 0.3ha(900평)의 경우에 자부담(30%)이 9천만 원임. 5.1ha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농가당 평균 30a 기준으로 17명에 해당되므로 소수에게 혜택
  - 청년후계농과 청년창농 간 담보 및 자부담 능력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 발생 소지
- 시행 시 과제
  - 농가당 스마트팜의 규모(최소~최대) 결정, 자부담 대출 지원, 생산물의 판매 대책 등
  - 청년농의 자금조달 부담과 소수에게 혜택이 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통합 시행 필요

## □ 참고

### ○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

- 사업 목적 : 시설원예 환경 유지를 위한 자동 원격제어가 가능한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 사업 내용 :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및 ICT 융복합 시설장비지원
- 사업 위치 : 9개 시군(천안, 공주, 서산, 논산, 당진, 금산, 서천, 홍성, 예산)
- 사업 기간 : 2023.1.1.~2023.12.31.(단년도 사업)
- 예산액 : 282,321천 원(국비 217,170, 도비 65,151)
- 총사업비 : 723,900천원(국비 217,170 도비 65,151 시군비 152,019 기타 289,560)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40%)
- 사업량 : 5.4ha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지원

- 사업 목적 : 소득이 낮은 중소규모 농가 스마트팜 지원을 통해 소득 기반 마련
- 사업 내용 : 중소원예농가(가족농)에 대한 스마트팜 교체 및 신축 지원(0.3ha까지)
- 사업 위치 : 14시군(계룡 제외)
- 사업 기간 : 2023.1.1.~2023.12.31.(단년도 사업)
- 예산액 : 831,000천원(도비 831,000)
- 총사업비 : 5,540백만 원(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 사업량 : 7ha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3.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사업 목적 :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청년농의 재배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회 제공
  - 사업 내용 : 스마트팜 부지 기반 조성 및 온실 설치 후,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 사업 위치 : 인구감소지역 지정된 9시군 대상 자체 공모사업 선정
  - 사업 기간 : 2023.10.1. ~ 2024.12.31.(연차 사업, 신규사업)
  - 총사업비 및 2023년 예산액
    - 총사업비 : 100억 원(도 66억, 시군비 34억)
    - (도비 재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계상 사유 : 청년농 육성 및 스마트팜 지원 관련 도지사 공약사항)
    - 2023년 예산액 : 66억 원(도비 66억)(도비 66%, 시군비 34%)
  - 사업량 : 1개소(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2.5ha 이상 조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도 공모사업으로 사업 시군 선정)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산출 기초]
- 농식품부 기준단가(1ha) : 기반조성 5억, 파이프비닐온실 7.5억, 철골유리온실 30억, 지열 에너지시설 14억 ; **계 56.5억 원**

#### □ 평가 :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문제

##### ○ 효과성, 공평성

- 청년농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효과성)과 다수의 청년농(공평성)에게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본 사업과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의 통합 추진 필요

##### ○ 효율성

- 스마트팜 관련 사업 간 ha당 예산의 불일치

사업명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보급	중소원예농가 (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지원
ha당 예산	10억 원	40억 원	1.34억 원	7.91억 원
비고	도-시군	도-시군	농식품부-도	도-시군

### Ⅲ.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 1.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의 지속

##### ○ 검토

- 본 사업의 일몰 이유가 농어민수당과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농어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보상의 취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영농활동을 기본의무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영농과 가사를 겸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임.

##### ○ 정책평가

- 효과성 : 여성농업인의 복지와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음.
- 효율성 : 본 사업의 만족도는 85% 이상으로, 비용 대비 정책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지역 내에서 소비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재정승수 효과 : 소비액+ $\alpha$ )가 파생됨.
- 공평성 : 지급조건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에게 고르게 지급함으로써, 수평적 형평성이 있음.

#### 2. 학교급식에 친환경(무농약 및 유기) 로컬푸드 가공식품 추진

##### ○ 검토

-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의 비중이 큼에도, 현재 전통장류를 제외하고 외국산 원료, 대기업의 가공식품이 대부분
- 학교급식 가공식품의 품질기준 마련과 단계적으로 가공식품 품목별 전환 필요
- 원료농산물 생산농가(생산자조직)와 가공업체 간 계약재배 추진
- 지자체·교육청·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품질기준 마련

##### ○ 정책평가

- 효과성 : 지역 내 원료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학교급식에 공급함으로써, 원료농산물 생산농가와 지역 가공업체의 판로 확대 효과
- 형평성 :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3.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화

도비 투입사업

○ 총사업비: 18억 원(도:시군 = 30:70)

○ 시군별 5개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일부(80%) 지원

국고보조사업

○ 총사업비: 63억 원(국:도:시군:기타 = 30:9:21:40)

○ 3품목(마늘, 양파, 배추)

○ 검토 : 대상 품목 및 예산의 확대 필요

- 생활필수품으로서 농산물은 비탄력성으로 인해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심함.
- 빈번한 가격 폭등 및 폭락 등 가격 불안정은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소비자를 불안하게 함. 농가는 불안정한 농업경영과 농업소득
- 현재 사업 예산 및 대상 품목의 확대와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 확대로 가격안정 추진

○ 정책평가

- 효과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상 품목의 확대와 예산이 필요. 또 농협, 지자체 등이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 등과 계약재배를 알선하여,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연계하는 방식 도입
- 효율성 : 도 및 시군 지자체, 농협, 생산자조직 등이 공동기금 설치함. 기준가격 설정하여 기준가격 이하일 때 차액 지원, 기준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일 때는 기금 적립하는 방식으로 효율성 제고
- 형평성 : 시군 주산지별 대상 품목의 확대 필요

#### 4. 탄소중립 관련 사업

##### □ RE100 실증지원사업

- 사업 목적 :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 사업 내용 : 마을발전소, 가공유통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등
- 사업 위치 : 2개군(서천군, 홍성군)
- 사업 기간 : 2023.1. ~ 12.(신규사업, 다년도 계속사업)
- 예산액 : 986,000천 원
  - ※총사업비 1,972,000천 원(국비 986,000천 원, 시군비 986,000천 원)
- 사업량 : 2개군(서천군, 홍성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 사업 목적 :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도모
- 사업 내용 :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 개보수, 퇴비화 기계장비, 스키드로더 등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3.1.1.~2023.12.31.(단년도 사업)
- 예산액 : 2,665,900천 원(도비 2,665,900)
- 사업량 : 7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등

##### ○ 검토

-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성, 경종-축산 순환(경축순환) 체계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

##### ○ 정책평가

- 효과성 :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 15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정책목표 달성 필요
- 효율성 : 주민 합의와 적극적 참여, 철저한 관리 감독 등 필요
- 형평성 :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 15개 시군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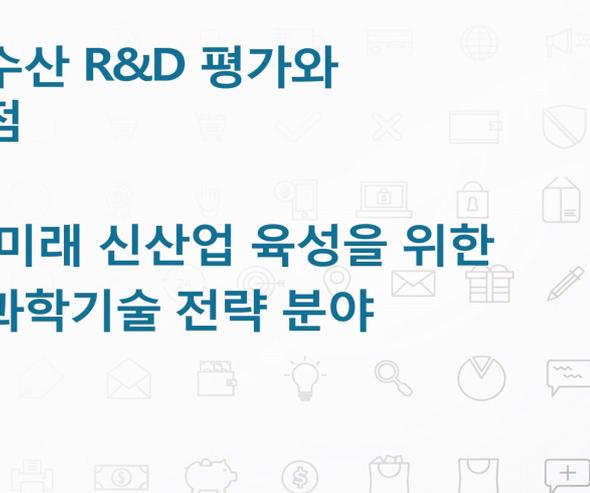


**목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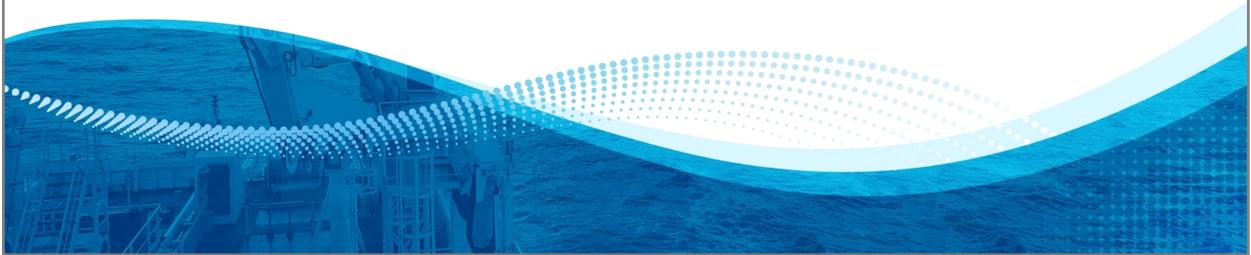
**01** / 위기와 기회

**02** / 해양수산 R&D 평가와 문제점

**03** / 충남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전략 분야



# 01 위기와 기회



## Chapter 01. 해양의 이해

4

### 1. 국내 상황 | 위기 기회

#### 01 낮은 잠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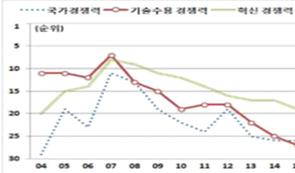
- 한국의 기술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기술 의존도는 점차 확대
- 기술 경쟁력(기술수용성, 혁신 경쟁력) 순위는 2007년 후 점차 하락
-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 2.0%로 점차 하락 예상

<잠재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 전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한국의 기술 경쟁력 순위 추이>



자료 : WEF(World Economic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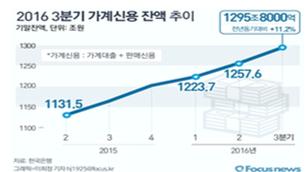
#### 02 높은 청년 실업률

- 2020년 실업률은 4.5%, 청년실업률은 10.2%를 넘어선 수준



#### 03 높은 가계부채

- 2020년 1,611조원을 넘음



자료 :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KOSIS, Focus news

#### 04 심각한 사회갈등과 불신

- 한국사회의 갈등양상: 사회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위험수위 수준 (한국형사회갈등실태 진단, 2016)

한국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나 (단위=%)



\*계층별 105명 심층인터뷰

#### 05 북한, 미국, 중국 등 국제정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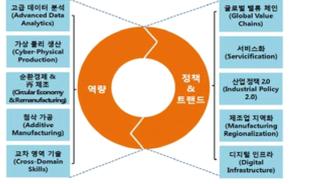
- 북핵과 미사일개발 위협,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국익중심 고립주의 강화 등

## 2. 국내 상황 | 뒤기 기회



### 01 제4차 산업혁명기 도래

- WEF(2016)에서 화두가 된 제4차 산업혁명기의 도래는 한국사회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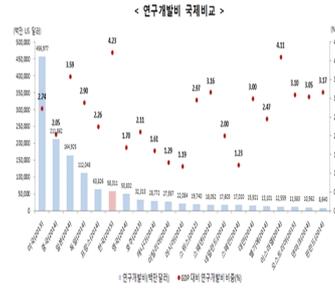
### 02 ICT 중심 제조업 강국

-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ICT 제조업력 보유

순위	국가	지수	평가
1	일본	1.1	매우 우수
2	싱가포르	1.0	매우 우수
3	대한민국	0.9	매우 우수
4	미국	0.8	매우 우수
5	중국	0.7	매우 우수
6	영국	0.6	매우 우수
7	독일	0.5	매우 우수
8	프랑스	0.4	매우 우수
9	스페인	0.3	매우 우수
10	이탈리아	0.2	매우 우수
11	한국	0.1	매우 우수
12	일본	0.0	매우 우수
13	중국	-0.1	매우 우수
14	미국	-0.2	매우 우수
15	영국	-0.3	매우 우수
16	독일	-0.4	매우 우수
17	프랑스	-0.5	매우 우수
18	스페인	-0.6	매우 우수
19	이탈리아	-0.7	매우 우수
20	한국	-0.8	매우 우수
21	일본	-0.9	매우 우수
22	중국	-1.0	매우 우수
23	미국	-1.1	매우 우수
24	영국	-1.2	매우 우수
25	독일	-1.3	매우 우수
26	프랑스	-1.4	매우 우수
27	스페인	-1.5	매우 우수
28	이탈리아	-1.6	매우 우수
29	한국	-1.7	매우 우수
30	일본	-1.8	매우 우수
31	중국	-1.9	매우 우수
32	미국	-2.0	매우 우수
33	영국	-2.1	매우 우수
34	독일	-2.2	매우 우수
35	프랑스	-2.3	매우 우수
36	스페인	-2.4	매우 우수
37	이탈리아	-2.5	매우 우수
38	한국	-2.6	매우 우수
39	일본	-2.7	매우 우수
40	중국	-2.8	매우 우수
41	미국	-2.9	매우 우수
42	영국	-3.0	매우 우수
43	독일	-3.1	매우 우수
44	프랑스	-3.2	매우 우수
45	스페인	-3.3	매우 우수
46	이탈리아	-3.4	매우 우수
47	한국	-3.5	매우 우수
48	일본	-3.6	매우 우수
49	중국	-3.7	매우 우수
50	미국	-3.8	매우 우수

### 03 지속적인 높은 R&D 투자율

- '17년 세계 최고 GDP 대비 R&D 투자율: 4.55% (혁신원천등 발굴/지식축적/학습유리)



### 05 높은 인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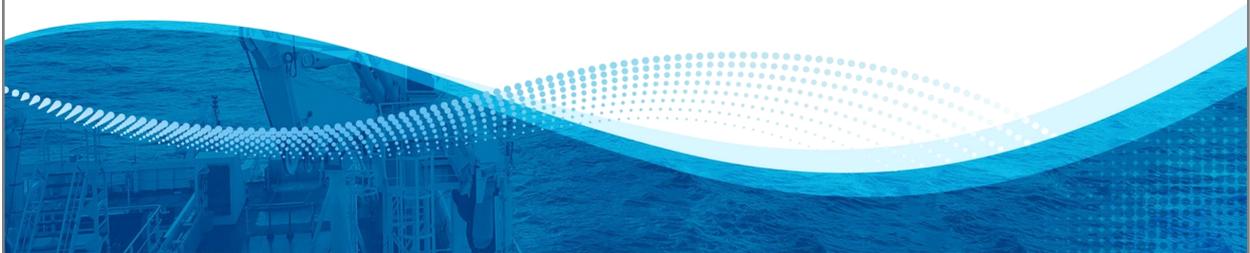
- 교육 취득 수준으로 평가한 한국의 전문인력 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 (STEP, 2017)

Human Development Index and its components

Human Development Index	Life expectancy at birth	Expected years of schooling	Mean years of schooling
2016	2016	2016	2016
2015	2015	2015	2015
2014	2014	2014	2014
2013	2013	2013	2013
2012	2012	2012	2012
2011	2011	2011	2011
2010	2010	2010	2010
2009	2009	2009	2009
2008	2008	2008	2008
2007	2007	2007	2007
2006	2006	2006	2006
2005	2005	2005	2005
2004	2004	2004	2004
2003	2003	2003	2003
2002	2002	2002	2002
2001	2001	2001	2001
2000	2000	2000	2000
1999	1999	1999	1999
1998	1998	1998	1998
1997	1997	1997	1997
1996	1996	1996	1996
1995	1995	1995	1995
1994	1994	1994	1994
1993	1993	1993	1993
1992	1992	1992	1992
1991	1991	1991	1991
1990	1990	1990	1990
1989	1989	1989	1989
1988	1988	1988	1988
1987	1987	1987	1987
1986	1986	1986	1986
1985	1985	1985	1985
1984	1984	1984	1984
1983	1983	1983	1983
1982	1982	1982	1982
1981	1981	1981	1981
1980	1980	1980	1980
1979	1979	1979	1979
1978	1978	1978	1978
1977	1977	1977	1977
1976	1976	1976	1976
1975	1975	1975	1975
1974	1974	1974	1974
1973	1973	1973	1973
1972	1972	1972	1972
1971	1971	1971	1971
1970	1970	1970	1970
1969	1969	1969	1969
1968	1968	1968	1968
1967	1967	1967	1967
1966	1966	1966	1966
1965	1965	1965	1965
1964	1964	1964	1964
1963	1963	1963	1963
1962	1962	1962	1962
1961	1961	1961	1961
1960	1960	1960	1960
1959	1959	1959	1959
1958	1958	1958	1958
1957	1957	1957	1957
1956	1956	1956	1956
1955	1955	1955	1955
1954	1954	1954	1954
1953	1953	1953	1953
1952	1952	1952	1952
1951	1951	1951	1951
1950	1950	1950	1950
1949	1949	1949	1949
1948	1948	1948	1948
1947	1947	1947	1947
1946	1946	1946	1946
1945	1945	1945	1945
1944	1944	1944	1944
1943	1943	1943	1943
1942	1942	1942	1942
1941	1941	1941	1941
1940	1940	1940	1940
1939	1939	1939	1939
1938	1938	1938	1938
1937	1937	1937	1937
1936	1936	1936	1936
1935	1935	1935	1935
1934	1934	1934	1934
1933	1933	1933	1933
1932	1932	1932	1932
1931	1931	1931	1931
1930	1930	1930	1930
1929	1929	1929	1929
1928	1928	1928	1928
1927	1927	1927	1927
1926	1926	1926	1926
1925	1925	1925	1925
1924	1924	1924	1924
1923	1923	1923	1923
1922	1922	1922	1922
1921	1921	1921	1921
1920	1920	1920	1920
1919	1919	1919	1919
1918	1918	1918	1918
1917	1917	1917	1917
1916	1916	1916	1916
1915	1915	1915	1915
1914	1914	1914	1914
1913	1913	1913	1913
1912	1912	1912	1912
1911	1911	1911	1911
1910	1910	1910	1910
1909	1909	1909	1909
1908	1908	1908	1908
1907	1907	1907	1907
1906	1906	1906	1906
1905	1905	1905	1905
1904	1904	1904	1904
1903	1903	1903	1903
1902	1902	1902	1902
1901	1901	1901	1901
1900	1900	1900	1900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해양분야는?

## 02 해양수산 R&D 평가와 문제점



##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



국가전략기술 육성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 구축
국가 현안 해결	탄소중립·디지털전환·고령화 대응
민간 중심 혁신역량 제고	민간 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
연구성과 활용 투자전략성 강화	핵심 지적재산권 창출과 기술이전 지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 중)

## 1. 신정부의 과학기술 주요전략과 예산 배분 · 조정 변화



###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의 주요 전략

- (기본계획 상 주요 키워드)
  - 임무지향성 : 과학기술 기반 문제해결을 위한 임무지향성/전략성 강화
  -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 핵심인재 양성/확보
  - 민간 주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혁신 거점 역할 강화
  - 탄소중립 선도 및 지속가능한 환경 시스템으로의 전환
  - 디지털 전환기 선도적 대응을 통한 경제 재도약
  - 미래 위협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및 안전사회 구현
  - 신산업 공급망 선점 및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 배분·조정 우선 순위의 변화: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성과 창출, 선택과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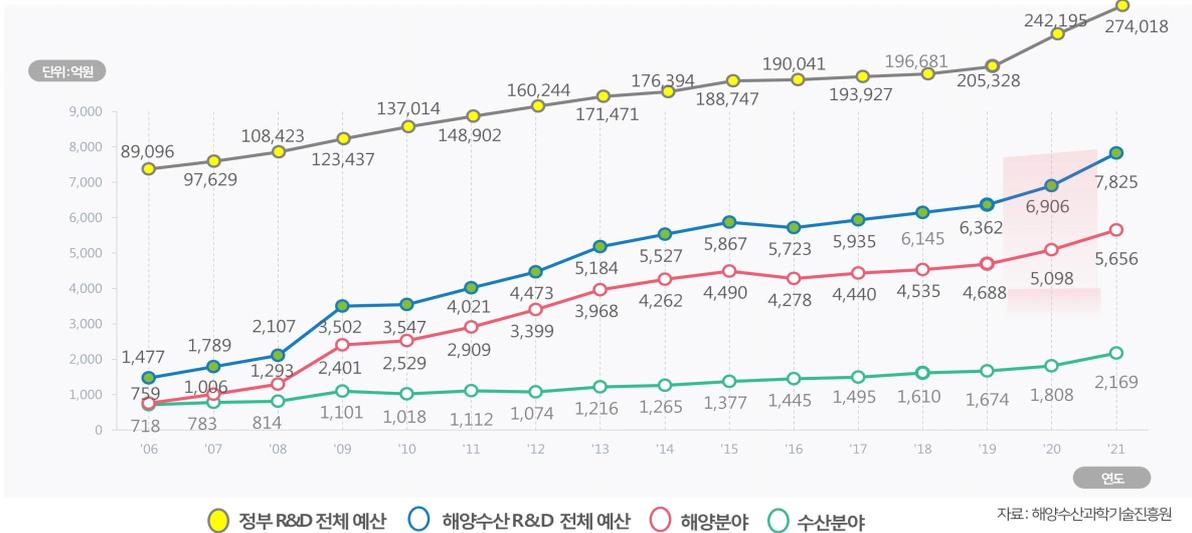
- '22년 코로나19 대응 및 수출규제 대응, '23년 예산 배분 핵심 : 전략기술 육성
- 반도체,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7.7%(1조 962억원) 증가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6G 등
- 도전적 과학기술에 대한 역량 확보 : 11.2%(2조 3,944억원) 확대
  - 감염병/유전자 등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로봇, 사이버 보안 등
-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투자확대 기조 유지
  - 인재양성 '23년 5,672억원 투자(4.7% 확대)
  - 기초연구 '23년 2,580억원 투자(1.1% 확대)
- 녹색 대전환 기술혁신 : 2,330억원 투자(3.7% 확대)
- 디지털 전환 : '23년 2,420억원(17.2% 증가), 사회문제 해결 : '23년 4,319억원(7.5% 증가),

## 2. 해양수산 R&D 예산 변화



» '21년 해양수산 R&D 총액은 7,825억원, 정부 R&D 예산의 2.9%

» 해양수산 R&D 예산 : 2006년~2021년 까지 15년 간 5.3배 성장 (연평균 11.8% 증가)  
\* 국가R&D는 동 기간(2006~2021년) 3.1배 성장 (연평균 7.8% 증가)



## 3. 해양수산 R&D 평가



0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민체감적 효과 미흡

수요자(국민, 민간 등)  
중심 혁신 R&D 체계 구축

02

단계별 전략적 차별성 부재로  
백화점식 사업 추진 관행

전략 기술·산업 분야  
집중 육성 및 투자 전략성 강화

03

일몰제 도입, 4차 산업혁명 등  
대내 환경변화 대응 부족

민간 주도 혁신역량 제고와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사업체계 개편



- ☑ 해양분야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지역과학기술 주권 확보 분야 우선 순위 반영을 위한 R&D 전략·중장기 로드맵 수립
- ☑ 기술분야 나열식 사업 탈피 임무중심형 거대·융합·실용사업 추진과 단계별 명확한 성과목표 제시

## 5. 해양수산 신산업



## 6. 국내 해양신산업 발전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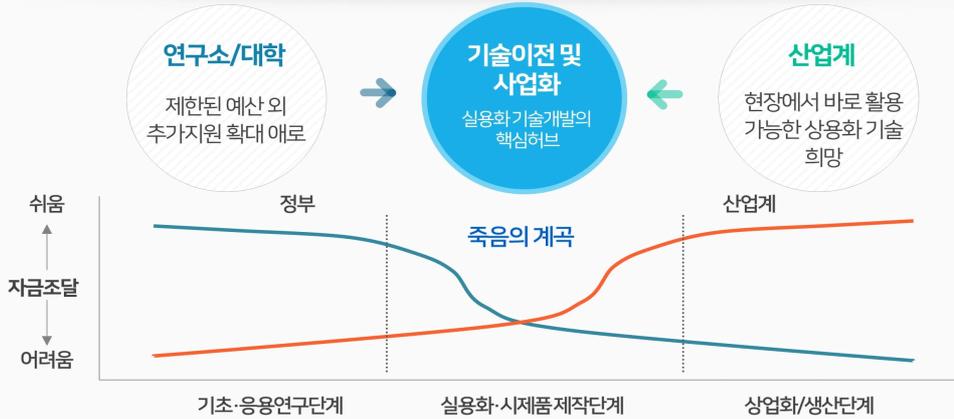
### ○ 벤처캐피탈의 해양수산 투자 장애요인 지적사항

투자 장애 요인	발전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기업 대부분 영세 리스크 존재</li> <li>● 해양수산기업 경제성, 생산성 등 검증 미흡</li> <li>● 타 산업대비 비즈니스모델 미래가 밝지 않음</li> <li>● 스타트업 부재</li> <li>● 재무건정성이 취약하고 우수 인력이 부족하며 내부관리 시스템이 취약</li> <li>● 타 산업분야에 비해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체계가 부족</li> <li>● 투자 대상 업체 정보 한정적이며 지속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 전용펀드 조성 필요 → 해양펀드 조성 &amp; 수산펀드 확대</li> <li>○ 투자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 투자업체 DB 구축 및 활용</li> <li>○ 전문 심사인력 부족 → 심사역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유도</li> <li>○ 사모펀드의 GP 및 LP 참여 저조 → 인센티브 방안 마련</li> <li>○ 해양수산 업체 경쟁력 제고 투자유치 전략 → 투자유치 시 투자 연계형 R&amp;D 정책 수립</li> <li>○ 해양수산 업체 교육 필요 → 투자 프로세스 이해도 증진 교육</li> </ul>

## 7. 해양신산업 육성의 문제점



- 산업별·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육성 지원 및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차별화 추진
- 해양 R&D 성과물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적용실적 (Track Records) 확보, Test-bed 등의 실증·시험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 BRIDGE Program, 서비스R&D 등의 기술사업화 (R&BD) 연계 지원 시스템 구축  
- 정부지원 사업이 단기간 과제중심이라 지속적 지원이 곤란한 문제점 해소



## 8. 신정부의 해양과학기술 예산 배분 · 조정 전략



### » 신정부 국정과제 매칭 사업 중심으로 투자 강화

####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 물류 체계 구축

- ▶ 선박·물류 거점 확충, 스마트 항만 구축으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
- ▶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 등 신시장 선점

(R&D)  
자율운항·친환경선박 연계 해운, 항만 기술의 확산

####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 ▶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 해양력 구축
- ▶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공간 조성

(R&D)  
해양환경변화 관측·예측·대응·정보서비스 기술의 고도화

####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과 소득을 도시민 수준으로 강화
-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 및 전한 수산물 공급체계 확립
- ▶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신산업 활성화로 연안경제 활력 제고

(R&D)  
Food 테크, 어촌 문화 콘텐츠, 레저스포츠 등 신규 추진



## 2. 해양수산 바이오팩토리 기술 및 신소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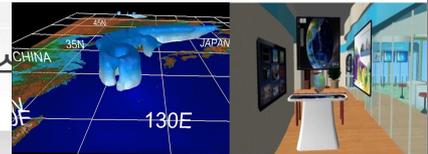
- ▶▶ 고부가가치 유용물질의 대량생산을 위한 해양수산생물 기반 바이오팩토리 기술 확보
  - 해양수산생물 유래의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대량생산 체계 구축
- ▶▶ 3D프린팅 기술 활용 생명·의료 신소재 상용화 기술 및 기능성 화장품·식품, 치유·치료 개발
  - 단기 능성 화장품·식품 개발
  - 장기 핵심신소재 개발 등 차별화 전략
  - 3D프린팅, 신소재 기술 활용과 개발을 통해 고도화·첨단화를 위한 원천 핵심 신소재 개발 연구
  - 치유바이오, 치유서비스, 치유관광 등이 복합된 건강·의료 증진의 선진국형 헬스케어·레저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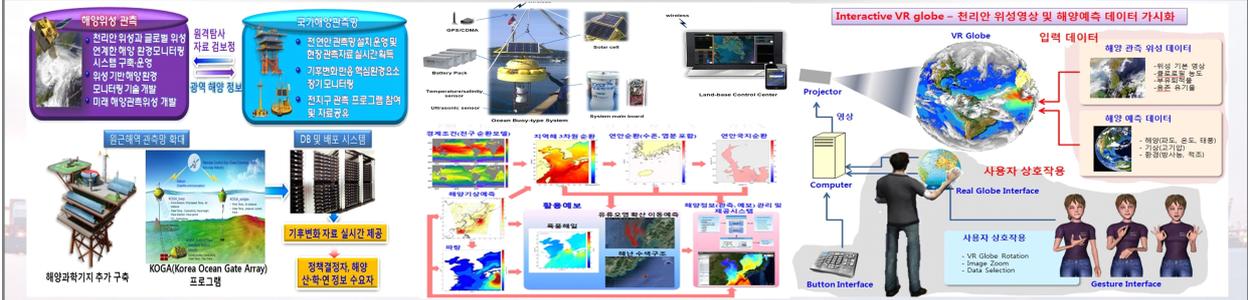
## 2. (공공혁신형) 해양예보·관광서비스 메타버스 개발



- ▶▶ 해저관측망, 해양과학기지, 해양위성 등 4차원 입체적, 실시간 관측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해양환경정보 메타버스 지원



-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IoT 기반 4D 해양관측플랫폼 구축 및 AI 등을 활용한 첨단 예보 서비스 제공
  - 해양생태계보전 및 해양자원·영토관리, 연안재해저감, 해양관광 활성화로 해양정보 공공서비스 수요 확대 전망
- 해양예보·예측사업
  - 수색구조, 유류오염 등 현안문제 해결 해양예보시스템, 해양기상·활용연구까지 체계적인 예보시스템 구축, 기상청, 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 긴급 해양사고 발생시 예측정보제공 등 맞춤형 해양서비스 실시
- 레저·스포츠·관광에 가상현실(VR)기반의 디지털 미디어 기반 콘텐츠, AR, IoT 기반의 다양한 미래 해양서비스 산업 창출(메타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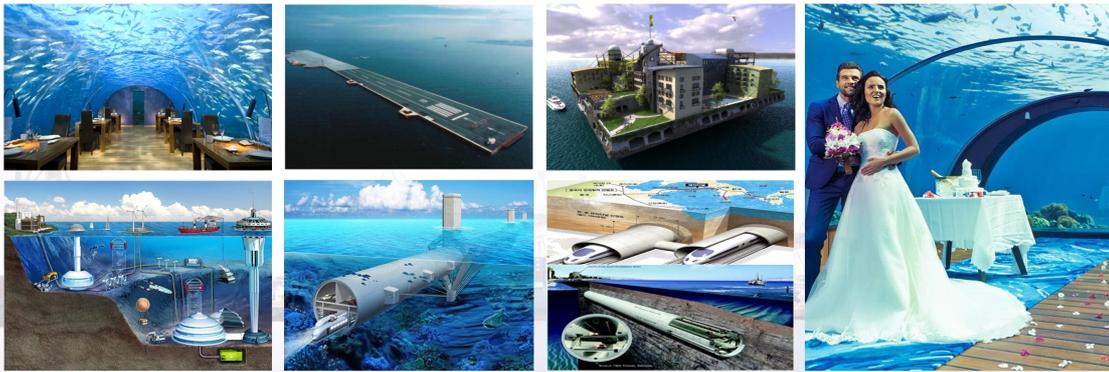


### 3. (기술선도형) 스마트 해양공간 활용 시토피아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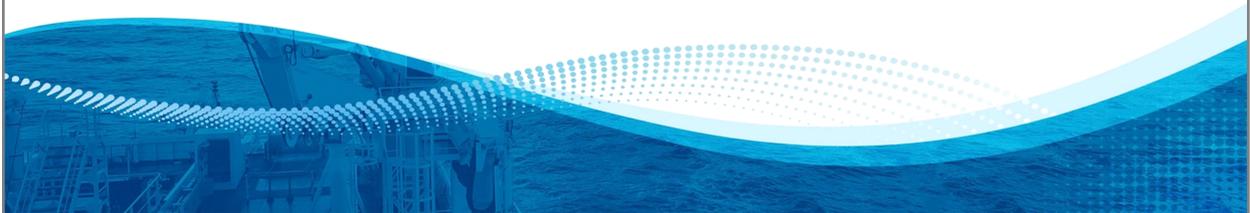
» 해상도시, 수중리조트, 메가플로트, 수중터널 등에 필요한 핵심기술 및 요소기술 개발로 수중 감시, 관광 및 레저, 거주 등을 위한 해양공간 활용 설치·운영기술 확보

- 해상도시** 수중리조트(몰디브), 거주공간의 인공섬 건설 기술
- 해저기지** 수심 100m이상, 10인 이상 인력이 상주 가능한 대규모 해저기지 구조체 기술
- 수중터널** 수심 200m, 직경 20m, 연장 5km의 수중터널 설계·시공·유지관리·안전확보 기술



## THANK YOU

# 해양르네상스 KIOST가 앞장서겠습니다!!



# 분과토론

## ③ 교육

**[발제]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개편 방안**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세출 관리**

**이원상**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개편 방안

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간의 분리 운영은 지방재정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의 근원적 원인임.
  - 첫째,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입장 차이는 지역사회의 갈등비용을 남길 수 있으며, 일부 연계·협력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특정사업 중심의 임시적 협력에 불과하고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위원회들이 중복적으로 존재하여 의사결정의 비효율을 초래함.
    - 시·도와 교육청 간 운영하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시·도청과 교육청의 교육지원 협력사업 등의 안전 심의가 이루어져서 교육행정협의회 안전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사 협의기능을 하는 다양한 교육협력 협의체(민관협의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과학기술교육지원심의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등)를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셋째, 비법정전입금·교육경비보조 재원의 비연속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을 어렵게 함.
    - 서울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원이 안정적이지 않음.
    - 학교나 교육청은 비법정전입금에 의한 예산편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교육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는 장기적인 교육투자를 어렵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교육협력사업을 크게 위협할 수 있음.
  - 넷째, 교육경비보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여지가 있음.
    - 교육경비보조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지역에서는 제도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지원에 한계를 가짐.
  - 다섯째,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분리운영으로 인해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가 미비함.

- 정책의 성과평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재정적인 자원을 투입하고, 투입된 자원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여 각각의 기능들이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함.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상호 협력하여 이룩한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는 협력 대상 기관의 공동 성과 관리 체계로서 공동 성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를 통해 상호 커뮤니케이션 체제도 증진될 것이고 나아가 성과의 공유로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재정 투자에 대한 정책 지지도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임(김홍주 외, 2015).
- 끝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근 청소년, 진로,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업무가 중복되는 분야들이 증가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 추진 시에 상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세원의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원선택이 원칙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의 감시기능과 조세의 가격기능을 저해함.**

- 지방교육세는 취득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의 형태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반재정으로부터의 전입금도 존재하면서 세원구조의 복잡성은 가중된 상황임.
- 이렇게 세원구조가 복잡하고, 세수확보의 편의를 위해 교육과 관련이 없는 세원에도 각종 교육세가 부가될 경우 교육재원 확보 및 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책임의식과 참여의식이 약화될 수 밖에 없음.
- 또한 세수확보의 편의를 위해 수익자와 상관없는 세원을 활용하는 것은 조세의 가격기능을 더욱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개선방안 및 추진과제**

○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새로운 교육환경과 내용에 맞게 재구조화할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기존의 교육과정과 교육체계에 맞게 설계된 고등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새로운 교육환경과 내용에 맞게 재구조화할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됨.

○ **[개편방향] 초중등교육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함.**

- 지방교육재정의 재정투자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협력의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함.
-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관리 제도의 연계 협력 강화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 공동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며 협력사업에 대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및 관리하고 교육재정에 대한 정책성과평가를 실효성 있게 실시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음.

○ **[단기과제1]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의 운영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환류와 평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sup>2)</sup>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sup>3)</sup>

- 지역사회가 교육에 관해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운영을 통해 운영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기관의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평가 책임을 조례 등에 명시해야함.
- 서울특별시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지속적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평가를 명시하고 있음.

○ [단기과제2]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공동협력사업 협의·조율기능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교육재정 간 예·결산 및 성과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해야함.

-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업을 통한 공공사업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인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보 교류가 필요하며, 시도와 교육청은 예산 편성 시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용하여 중복사업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음.

○ [단기과제3] 지자체·교육청 간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교육청 간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및 별도 회계처리를 통해 재정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 간의 통폐합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현행 헌법과 법령 취지를 감안한 현실적인 연계·협력방안 중 하나로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공동사업비는 지방자치사무 중 교육사무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일반지자체가 함께 재원을 투자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제도임.
- 공동사업비 제도는 세 가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측면에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단기과제4]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수요에 기반한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교육재정 수준의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로는 정부 총예산대비 (유·초·중등) 교육재정 비중과 학생 1인당 (유·초·중등) 교육재정지출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규모 대비 교육재정 비중은, 소득수준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수요 변화요인에 대응해서 정부가 주어진 예산을 교육분야에 얼마나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학생 1인당 교육재정지출액은, 소득수준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인구적 요인과 예산규모 및 자원배분에 대한 정부의 결정(정부규모, 기능별 자원배분)이 함께 작동한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임.
-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평생 직업교육 등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초·중등교육 공급과잉 해소 및 고등·평생교육 투자 확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3) 이에 반해서 비법정전입금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것임.

- 대학교육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으며 평생학습 참여율도 주요국에 비해 저조하기에 적극적 투자가 필요함.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달러, OECD 평균/한국)을 보면, [초등학교] 8,470/11,029 [중·고등학교] 9,968/12,370 [대학교] 15,556/10,486로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음.
- 주요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6년 기준으로 프랑스 51%, 독일 52%, 영국 52%이며 OECD평균이 47%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참여율은 2019년 기준 42%에 머물고 있음.

○ [중기과제1] 지방자치단체의 조달분은 두 세개의 세원에 부과·징수되는 목적세로 단순화함으로써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여 교육재정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정당성, 수용성을 높여야 함.

- 첫째, 지방교육세의 구조를 재설계할 때 세입과 세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목적세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출 프로그램을 적절히 정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목적세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세수잉여로 인한 재정대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지출 프로그램을 적절히 정의함으로써 목적세의 과다 배정을 피해야 한다는 것임.
  - 지출 프로그램을 적절한 범위에서 정의한다면 목적세와 지출 간의 연계를 살리는 동시에 지출의 신축성도 살릴 수 있음(전주성, 2005; 이영환·이성규, 2008).
  - 납세자들에게 지방교육세라는 목적세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제공하여 목적세와 관련 지출이 납세자들의 의식 속에서도 서로 연계될 수 있게 되어야 주민들의 조세 수용성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sup>4)</sup>.
- 둘째, 교육재정의 세원체계는 단순화와 목적세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 주민들의 감시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해 민주적인 정부라 하더라도 조세수입을 사회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지출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조세체계의 목적세화를 통해 세입을 세출과 연계하여 납세자의 주인의식과 감시기능을 회복하여야 함.
  - 목적세제는 주민들의 감시기능에서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감시를 통해 지방정부의 세출책임성을 높이는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음(Davis and Hayes, 1993; Dhillon and Perroni, 2001).
- 셋째, 현행 지방교육세 부과 세목 중에 응익원칙이나 응능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본세에 통합하여야 할 것임.
  -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세에 의한 조달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sup>5)</sup>
  -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취득세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진폭이 커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교육재원으로서 부적합함(류민정·김용우, 2009).
  - 만약 보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보유하는 자동차의 대수와 평가가치가 높다면,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로부터 일부 조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재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세를 통한 지방교육재원의 조달은 다른 차원에서의 응익원칙에 따른 형평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음.

4) 최근 실험경제학의 방법론을 이용한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비용과 편익 평가를 위한 정보가 공유되고 교육재정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목적세는 기부행위와 같은 자발적 조세의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그 조세수용성은 크게 증대될 수 있다.

5) 이른바 자본화(capitalization)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교육 환경 및 성과와 부동산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비록 특정지역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최열·권연화(2004), 박원갑·김갑열(2006), 엄근용·윤충한·임덕호(2006), 김경민·이양원(2007), 김유경·한순구(2007) 등이 교육환경과 부동산 가격 사이에 통상적으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 넷째, 이와 동시에 재산과세에 의해 조달되는 세수입 이외의 부족분은 개인지방소득세와 같은 소득과세를 통해 보완하여 응능원칙에 따른 형평성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세원을 단순화하여야 할 것임.
- 끝으로 지방교육세, 시도세전입금, 그리고 담배소비세에서 조달되던 전입금을 재산과세(재산세+자동차세)와 소득과세(개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대체하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세원배분상황을 고려하여 각각의 상대적 비중을 결정해야 할 것임.
  - 현행 특광역시 이전재원(지방교육세전입금+시도세전입금+담배소비세전입금)의 규모는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한 후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를 합한 규모의 절반 정도이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교육세 재산세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광역차원에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의 적절한 조합을 지방교육세의 세원으로 삼아야 할 수밖에 없음.
  - 즉,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에만 지방교육세를 부가시키고 나머지 현행 지방교육세는 모두 본세로 통합시키는 것임.
  - 도의 경우, 시군세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그리고 도세인 레저세에만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를 부가함으로써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전입금을 전액 조달하자는 것임.
  -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책임지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도 지방교육세로 확보한 재원을 통해 충당할 필요가 있음.

○ [중기과제2] 지방교육재정의 규모 적정화와 운용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원조달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에서 중앙정부가 더 큰 재정역할을 담당하므로 지방정부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재원을 조달하였을 때보다 응능원칙에서의 수직적 형평성은 높은 동시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응성과 책임성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기술적 효율성이 낮음.
  - 중앙정부의 역할과 형평성에 대한 가치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부 간 교육재정관계란 초중등교육의 국가공공재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위에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분권이 확보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국가공공재의 의존공급형의 경우에 형평지향성은 높으나 효율지향성이 낮을 개연성이 크고, 지역공공재의 자립공급형은 효율지향성이 높은 대신 형평지향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됨.
- 국가공공재의 자립보완형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핀란드형은 상대적으로 중간수준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가 속한 “국가공공재의 의존공급형”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원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배분함으로써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형평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독립적인 기구인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청)이 대부분의 지방교육재원을 지출하고 있어 교육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결국 지방교육재정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조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조달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 때, 중앙정부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인건비와 지역 및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행·재정적 역할에 집중해야함.
- 이를 통해 유치중등교육재정의 규모는 지역 주민들의 선호가 반영된 적정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게 되는 지방교육재정 전출금은 추가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수 순증분을 활용하여 마련함.
-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중 시도세 전입금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조달역할을 제고할 수 있음.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도세 전입금 비율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 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서 시도세 전입금의 최소 비율을 정하고 조례를 통해 법률에서 규정한 최소 비율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최소 비율을 초과한 전입금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 기준 재정수입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보통교부세와 교육재정보통교부금 배분구조 속에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적 재정의부효과와 전략적 행위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현행 보통교부세와 교육재정보통교부금 배분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전출하는 재원은 세입분권 강화를 통해 확보한 지방세수 순증분으로 충당해야함.
-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자립도의 상승폭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폭에 비례하여 결정됨.

〈표 10〉 국가공공재성과 교육재정자립성에 따른 교육재정유형의 분류

		낮음 ← 지방교육재정자립성 → 높음	
↑ <b>국가 공공 재성</b> ↓ 낮음	국가공공재의 의존공급형	국가공공재의 자립보완형	
	(1)정의: 국가공공재로서 교육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여 공급하는 유형 (2)특징: 중앙정부 자원조달 비중은 높고 지방교육재정자립도는 낮음 (3)국가군: 한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멕시코, 칠레, 그리스 (11개국) (4)평가: 낮은 효율성과 높은 형평성	(1)정의: 국가공공재로서 교육서비스를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지방정부도 자체세입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 (2)특징: 중앙정부 자원조달 비중과 지방교육재정자립도 모두 높음 (3)국가군: 콜롬비아, 포르투갈, 터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9개국) (4)평가: 높은 효율성과 높은 형평성	
	핀란드형	지역공공재의 자립공급형	
	(1)정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4:6 정도의 비율로 재원을 조달하여 지방정부가 대부분 지출하는 유형 (2)특징: 지방정부의 자원조달 비중과 지방교육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수준임 (3)국가군: 핀란드, 호주 (2개국) (4)평가: 중간 수준의 효율성과 형평성	(1)정의: 지역공공재로서 교육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자체재원을 통해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유형 (2)특징: 중앙정부 자원조달 비중이 낮고 지방교육재정자립도는 높음 (3)국가군: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영국, 벨기에, 캐나다, 아이슬란드, 독일, 체코,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일본 (13개국) (4)평가: 높은 효율성과 낮은 형평성	

출처: 구균철(2016)의 <표-11>을 OECD(2021)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하였음.

○ [장기과제]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 간의 통폐합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통폐합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을 별도로 선출하는 방식에서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함께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주요국가의 경우, 시도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대신에 시도지사가 지명하여 교육행정기관을 운영하게 하면서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개편효과

○ 우리나라의 경우 세입분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설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

- 우리나라의 유초중등교육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역할을 확대한다면 자율성이 부여된 교육 사무를 교육현장으로 보다 폭넓게 이관할 수 있어 교육재정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었을 것임.
- 아울러 교육재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역할을 확대하였더라면 전반적인 재정분권의 심화 과정에서 세입분권의 확대폭도 넓어질 여지가 마련될 수 있었을 것임.
-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이 재정분권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들 중 하나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책임이 강화됐을 때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교육계의 우려와 관련이 있음.

○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비중을 줄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조달책임을 강화하여 교육재정자립도를 높인다면, 유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는 지역 주민들의 선호가 반영된 적정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임.

○ 선행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교육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서 교육재정 효율성의 제고와 교육성과의 향상을 기대

○ 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방교육재정 운용과정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는 공교육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교육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 중앙정부의 시책사업, 공약사업, 협력사업으로 향하던 교육청의 교육투자 방향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핵심부분(교사, 교과, 학급)으로 전환될 여건이 마련됨.
-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와 학부모참여 예산편성으로 인해 기존 예산편성 및 집행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음.
-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이 성과위주와 교단교사위주로 이루어질 제도적 틀이 마련됨.
-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평가 등과 같이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 책임을 확대한다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 간의 연계 및 협력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 향상이라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임.
- 실증분석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에서의 분권 수준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조달책임을 높일 때 전반적으로 교육비 지출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실제 근거는 약함(구균철, 2021)<sup>6)</sup>.

-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책임을 높이는 변화 자체가 공교육비 지출 비중을 줄이는 것은 아님.
- 다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초중등학생 비중이 줄어든다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
- 아울러 중앙정부의 재원조달 책임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중앙정부가 국가최소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공교육 서비스 품질을 모든 지역에서 보장한다면 지역별 재정격차와 소득격차가 존재하더라도 이로 인해 총 공교육비 지출이 줄어들지는 않음.
- 실례로 우리나라에서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예외적으로 중앙집권형이 아닌 제주도의 경우, 공교육 투자규모가 지역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조정된 바 있음.
  - 일반적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증가는 지방교부세 교부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보통교부세 총액의 3.0%를 미리 배분받게 됨으로써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와 유사하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에서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도의 특수성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개정(2017. 3. 29.)을 가능케 하였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보통세의 3.6%라는 도세 전입금 비율이 제주도에서만 5.0%로 조정된 바 있음.

○ 이러한 교육재정관계의 변화는 중앙정부가 향후 지속적인 재정분권 확대 과정에서 세입분권을 보다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줄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역할을 확대하는 길이 열린다면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권이 필요한 유초중등 교육사무를 지방정부로 이관할 수 있어 재정분권 심화과정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세입분권의 확대폭이 넓어질 수 있음.
- 아울러 향후 재정분권과 지방세 확충 추진과정에서 일부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의 재정과잉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부수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임.

6) 구균철(2021)은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정부간 교육재정관계가 지방분권형에 가까울수록 초중등 교육지출 비중도 함께 커지는 점을 보여주었음. 그러나 초중등 학령인구비중의 감소는 초중등교육지출의 예산비중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도 분석결과로 확인되었음. 또한 1인당 GDP 수준이 교육비지출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관계가 아니라 역U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에 다다를 때까지는 소득증대가 교육비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서부터 교육비 비중 자체는 정체되거나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함.

##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세출 관리

이 원 상(서울특별시의회 예산분석팀장)

□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총 규모 : 4조 9,442억원(전년도 대비 16.8%, 7093억원↑)

구 분	2023년 예산액(A)		2022년 예산액(B)		증 감(A-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b>합 계</b>	<b>49,442</b>	<b>100.0%</b>	<b>42,349</b>	<b>100.0%</b>	<b>7,093</b>	<b>16.8%</b>
<b>□ 유아및초중등교육</b>	<b>24,959</b>	<b>50.5%</b>	<b>19,499</b>	<b>46.0%</b>	<b>5,460</b>	<b>28.0%</b>
인적자원운용	364	0.7%	340	0.8%	24	7.0%
교수학습활동지원	4,648	9.4%	3,339	7.9%	1,309	39.2%
교육복지	2,784	5.6%	2,709	6.4%	75	2.7%
보건급식	659	1.3%	653	1.5%	6	0.9%
학교재정지원관리	8,304	16.8%	6,532	15.4%	1,772	27.1%
학교시설여건개선	8,200	16.6%	5,926	14.0%	2,274	38.4%
<b>□ 평생교육</b>	<b>98</b>	<b>0.2%</b>	<b>92</b>	<b>0.2%</b>	<b>6</b>	<b>6.8%</b>
평생교육	98	0.2%	92	0.2%	6	6.8%
<b>□ 교육일반</b>	<b>1,538</b>	<b>3.1%</b>	<b>1,503</b>	<b>3.6%</b>	<b>35</b>	<b>2.3%</b>
교육행정일반	592	1.2%	633	1.5%	△41	△6.5%
기관운영	714	1.4%	636	1.5%	78	12.3%
재무활동	232	0.5%	234	0.6%	△2	△1.2%
<b>□ 예비비</b>	<b>250</b>	<b>0.5%</b>	<b>198</b>	<b>0.5%</b>	<b>52</b>	<b>26.4%</b>
예비비및기타	250	0.5%	198	0.5%	52	26.4%
<b>□ 인건비</b>	<b>22,597</b>	<b>45.7%</b>	<b>21,057</b>	<b>49.7%</b>	<b>1,540</b>	<b>7.3%</b>
인건비	22,597	45.7%	21,057	49.7%	1,540	7.3%

- 202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회복사업, 미래 교육 기반 조성 및 내실화 사업,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교육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둠
- 주요 세출 사업은 ▲디지털 기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및 학교공간혁신에 2,181억 원 ▲고교학점제 도입, 충남형 IB학교 운영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1,258억 원 ▲기초학력 향상 등 학력 신장 391억 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확대 등 유아교육 598억 원 ▲특수교육 방과후 및 돌봄 지원 등 220억 원 ▲2023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미래직업교육 실습환경구축 등 613억 원 ▲시·군별 AI교육 체험센터 구축 및 디지털교실 구축 등 학교정보화지원 585억 원 ▲예술 융·복합 공간 구축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 487억 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 학생생활지도에 286억 원을 편성했으며, ▲돌봄 시간 확대 운영(저녁돌봄교실) 및 초등돌봄교실 지원 강화 등 교육복지지원에 2,784억 원, ▲학교 방역인력 지원 및 급식실 환경개선 등 보건급식관리 659억 원 ▲물가상승률과 학교급식 식품비를 반영한 학교운영비 8,304억 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보통교실 증축 및 학교신설 3,212억 원 ▲학생 안전을 위한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2,807억 원을 편성함
-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고, 코로나19가 학생들에게 남긴 상흔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 ○ 세출 여건

- 2023년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기초학력 집중 투자, 교육의 디지털 전환, 안전한 학교를 위한 노후 시설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의 경상지출 증가와 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비 부담의 증가, 교육부의 유보통합 논의 및 초등 전일제학교 법제화 등에 따른 대규모 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

○ 그린스마트학교 조성 등 대규모 시설사업 투자 증가

. 그린스마트학교 조성	<b>13,911억</b>	. 학교 이전 및 신증설	<b>10,636억</b>
. 급식실 환경 개선사업	<b>800억</b>	. 인공지능(AI)교육체험센터 특화도시 구축 등	<b>853억</b>
. 특수교육원 설립 등 여건개선	<b>926억</b>	. 미래형 과학고등학교 재구조화 추진	<b>744억</b>
. 기존 건물 석면 제거	<b>979억</b>	. 교육시설 내진보강	<b>2,270억</b>
. 교육시설 LED 조명 설치	<b>276억</b>	. 교과교실운영, 고교교육력 제고	<b>773억</b>

- 국가 주도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sup>7)</sup> 등과 같이 대규모 시설사업비 증가
- 특히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은 전체 물량 중 25% 정도를 BTL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공사기간 중 임시 교사로 사용할 모듈러 교실 임대·설치 문제 등에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음
- BTL은 민간 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해 공공시설을 짓고(Buil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양도(Transfer)하되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Lease)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방식으로 임대료 지급 기간은 통상 20년으로 장기임.<sup>8)</sup>  
 그런데 현재와 같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부담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당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사업 등에 투자할 재정적 여건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
-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 물량 조정 등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주된 목적이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15개 시군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 구축’ 사업의 경우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융·복합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바 사업 목적이 매우 유사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난립하지 않도록 재정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7)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은 국비와 교육청 자체재원의 매칭사업으로 노후된 교사를 미래교육과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학교현대화 뉴딜사업이라 할 수 있음. ‘그린스마트스쿨’은 40년 이상 노후 건물이 있는 학교 환경 개선, 디지털 환경 기반의 새로운 교육학습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충청남도에는 2025년까지 191동을 그린스마트스쿨로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8) 2000~2010년대까지 체육관, 강당 그리고 복합화시설 등을 BTL로 추진했던 전례가 있음.

○ 2021년 결산에 따른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집중관리

[충청남도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중 1억 이상 불용 사업]<sup>9)</sup>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금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과	계약제교원인건비	96,879	96,407	0	471	0.5
예산과	계약제근로자인건비	2,945	2,669	0	275	9.4
예산과	교원인건비	1,120,122	1,118,530	0	1,591	0.1
예산과	교육전문직원인건비	30,384	30,023	0	360	1.2
예산과	교직원복지지원	11,057	10,566	0	491	4.4
예산과	지방공무원인건비	225,753	223,751	0	2,002	0.9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지원	13,597	11,783	0	1,813	13.3
교육과정과	특수교육복지지원	10,055	9,890	0	165	1.6
체육건강과	학교보건관리	22,923	21,962	59	901	3.9
총무과	교원인건비	223,919	222,994	0	924	0.4
총무과	본청시설관리	2,214	2,076	0	138	6.2
총무과	지방공무원인건비	50,231	49,548	0	683	1.4
행정과	교육공무원인건비	196,931	196,770	0	160	0.1
시설과	시설사업관리	704	463	72	168	23.9
시설과	학교운영비지원	12,557	12,228	0	329	2.6
천안	학교급식환경개선	7,022	6,265	632	124	1.8
천안	학교신증설	38,919	27,892	9,134	1,892	4.9
천안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4,198	3,936	0	262	6.2
아산	교육지원청시설관리	5,366	4,298	952	115	2.2
금산	교육지원청시설관리	8,214	8,024	0	190	2.3
합 계		2,083,990	2,060,075	10,849	13,054	

[충청남도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중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단위 : 백만 원, %)

구분 (정책사업)	예산현액	세출결산(지출)		다음연도이월		집행잔액	
		결산액	집행율	이월액	이월율	금액	불용율
세 출 결 산 액 합 계	4,390,052	4,250,961	96.8	117,077	2.6	20,057	0.46
학 교 교 육 여 건 개 선	513,936	451,568	87.8	56,482	10.9	5,850	1.13

- 대규모 시설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증설, 학교교육여건개선 등의 경우 세출결산액 불용율 보다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학교공사의 특성상 방학 중 공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연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월 문제와 불용액 과다 발생을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임

9)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제외

○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

- 충남형IB학교운영(4억 1천만 원), 미래형교육과정정보기학교운영(3억 원), 융합독서  
낭독극한마당(1억 8천만 원), 마주온활용학교지원(10억 원) 등과 같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 사례와의  
비교, 지역별 교육여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 및  
사전의견 수렴 등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갖춘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